







| SRI-정책-2018-09 |

#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 수립 연구

Study on “Young Suwon 2045” Planning

박상우 외

##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일자리분야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주거분야	김리영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교육돌봄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 자문위원

청춘도시 수원미래기획단 위원  
수원시 관련 각 부서장  
수원시 인구정책실무기획단

© 2018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8년 12월 29일  
**발행** 2018년 12월 29일  
**ISBN** 979-11-89160-54-8 (93530)

---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박상우 외 6인. 2018.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 수립 연구」.

---

비매품

## 국문요약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 125만 수원은 미래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수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수원 미래기획단을 구성, 출범하고 인구절벽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수원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한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연구”를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진행되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수원시민의 니즈가 높은 3대 핵심영역(일자리, 주거, 돌봄)별 현황을 진단하고 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계획 수립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수원시 인구정책 실무기획단과 수원시정연구원이 협업하여 수원시 추진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대안 발굴하였다. 실무기획단 실무분과는 수원시청의 각 분야별 담당자로 구성되어 3개 분과 43명으로 구성, 30회 이상 정기 및 수시 회의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무기획단 워크숍, 디자인 씽킹, 아이디어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 과제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과제를 선정하였다.

〈연구 수립 체계〉



실무분과와 연구원이 협업을 통해 3개 분야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는 총 38개 과제로 일차리분

야 10개 정책과제, 주거분야 15개 정책과제, 교육 돌봄분야 13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일자리분야는 4대 정책과제와 10개의 추진과제 제안

정책과제로 첫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셋째,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 넷째, 지식서비스 산업을 탑재한 플랫폼 중심의 산업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고 세부 10개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일자리분야 비전과 정책목표〉



■ 주거분야는 3대 정책목표와 15개의 추진과제 제안

첫째, 금융을 활용한 주거안정 지원. 둘째 다양한 유형의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공동체 형성 지원. 셋째, 모니터링과 기관역할 강화라는 주거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세부 15개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주거분야 비전과 정책목표〉

<b>비전</b>	<b>청춘들이 집 걱정 없는 수원</b>		
<b>정책 목표</b>	<b>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주거안정 지원</b>		<b>주거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b>
	<b>금융을 활용한 주거안정 지원</b>	<b>다양한 유형의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공동체형성 지원</b>	<b>모니터링, 기관역할 강화</b>
<b>추진 과제</b>	① 시민참여펀드, 리츠 활용 ②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자가, 전세, 월세) ③ 주거복지기금 조성	④수원시공공주택200호 확보 ⑤LH,경기도공공주택활용 ⑥ 수원시 공공주택 직접건설 ⑦도시내부 저이용, 노후시설 복합개발 ⑧생애주기순환형 주거단지 ⑨사회주택, 공동체주택 공급 및 지원	⑩ 주거실태조사 ⑪ 주거종합계획, 연차별계획 수립 ⑫ 인구 및 주택시장 동향 조사 ⑬ 웰컴투수원 프로젝트 ⑭ 기관 역할 강화 ⑮ 제도개선(조례, 상위법등)

■ 돌봄교육분야는 6대 정책목표와 13개 추진과제를 제안

- 돌봄분야는 3대 정책목표와 7개 추진과제를 제시

첫째,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취약보육의 확대. 둘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셋째, 수원형 스마트 돌봄시티 도시 구현의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돌봄분야 비전 및 정책목표〉

<b>비전</b>	<b>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돌봄시티, 수원</b>		
<b>정책 목표</b>	<b>보육의 공공성 확대 취약보육의 확대</b>	<b>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b>	<b>수원형 스마트 돌봄시티 도시 구현</b>
	①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② 장애통합어린이집 확대 ③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확대	①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및 확대 ② 커뮤니티케어 추진 및 확대	① 육아 친화적 스마트 인프라 조성 ② 수원시 고령사회 스마트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시행
<b>추진 과제</b>			

○ 교육분야는 3대 정책목표와 6개 정책과제를 제안

정책목표는 첫째,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 구현. 둘째, 교육-복지 연계형 평생교육 체계 도입. 셋째, 다양한 진로와 경력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강화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교육분야 비전 및 정책목표〉



주제어: 수원시 미래기획단, 인구절벽, 2045년 기본계획

---

## 차 례

---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3
<b>제2장 일자리 분야</b> .....	<b>9</b>
제1절 일자리 여건 .....	9
제2절 중앙정부 및 수원시 일자리 정책분석 .....	14
제3절 일자리분야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	16
<b>제3장 주거분야</b> .....	<b>31</b>
제1절 주거정책 여건 .....	31
제2절 국내외 정책 및 사례 .....	44
제3절 주거분야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	54
<b>제4장 돌봄 및 교육분야</b> .....	<b>83</b>
제1절 돌봄 및 교육분야 여건 .....	83
제2절 국내외 정책 및 사례 .....	103
제3절 교육돌봄분야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	116
<b>부록 1. 설문조사지</b> .....	<b>142</b>
<b>부록 2. 수원시 핵심리더양성 과정 제안 정책과제</b> .....	<b>151</b>
<b>부록 3. 실무기획단 운영 및 명단</b> .....	<b>241</b>

## 표 차례

〈표 2-1〉 일자리분야 추진과제 요약 .....	17
〈표 3-1〉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거분야 트렌드 .....	32
〈표 3-2〉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거분야 트렌드 .....	33
〈표 3-3〉 수원시 주거취약 가구 규모 및 비율 .....	42
〈표 3-4〉 수원시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	42
〈표 3-5〉 수원시 매매 주택 건축물 현황 .....	43
〈표 3-6〉 정부의 주거 지원형태 .....	44
〈표 3-7〉 중앙정부 주요 주거관련 사업 .....	45
〈표 3-8〉 주요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한 주거복지사업 .....	46
〈표 3-9〉 해외 주요 국가별 입주대상층의 설정 .....	47
〈표 3-10〉 지자체 주거복지 지원조례 .....	48
〈표 3-11〉 지자체별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	49
〈표 3-12〉 주거분야 추진과제 요약 .....	57
〈표 4-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의 변화 .....	84
〈표 4-2〉 지역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17년) .....	86
〈표 4-3〉 취약보육 어린이집 설치 현황(2017년) .....	86
〈표 4-4〉 연도별 등록 장애영유아 수(0~5세) .....	87
〈표 4-5〉 지역별 장애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현황(2017년) .....	88
〈표 4-6〉 지역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율 현황(2014~2016년) .....	88
〈표 4-7〉 수원시 월령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 현황(2014~2016년) .....	89
〈표 4-8〉 수원시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관정 현황(2014~2016년) .....	89
〈표 4-9〉 수원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참여 인원(2014~2017년) .....	90
〈표 4-10〉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 현황 및 이용 아동 수(2013~2016년) .....	90
〈표 4-11〉 수원시 노인인구 및 치매노인 수 예측 현황 .....	91
〈표 4-12〉 수원시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및 유병률(2016년) .....	92
〈표 4-13〉 경도인지 장애 진단자 현황 .....	93
〈표 4-1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현황 .....	93
〈표 4-15〉 지역별 치매관련시설 현황(2016년) .....	94

〈표 4-16〉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및 이용 현황(2016년) .....	94
〈표 4-17〉 지역별 치매 관련 병원 현황(2016년) .....	95
〈표 4-18〉 지역별 치매조기검진 현황(2016년) .....	95
〈표 4-19〉 지역별 치매환자 등록 현황(2016년) .....	96
〈표 4-20〉 미래환경 변화와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	98
〈표 4-21〉 수원시 평생학습관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 .....	100
〈표 4-22〉 평생교육법에 의한 수원시 평생교육기관 현황(2017년) .....	100
〈표 4-2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수 비교(2017년) .....	101
〈표 4-24〉 수원시 구별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2016년) .....	101
〈표 4-25〉 전국 및 경기도 지차체 등록장애인 추이(2013년~2017년) .....	102
〈표 4-26〉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2016년) .....	102
〈표 4-27〉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령별 참여 비율(2016년) .....	103
〈표 4-2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대상별 돌봄 정책 주요 내용 .....	106
〈표 4-29〉 영국 열린학교(Extended School) 핵심 서비스 주요내용 .....	109
〈표 4-30〉 평생교육진흥 종합(기본)계획 비교 (1차~4차) .....	110
〈표 4-31〉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중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	112
〈표 4-32〉 돌봄분야 추진과제 요약 .....	117
〈표 4-33〉 교육분야 추진과제 요약 .....	128

##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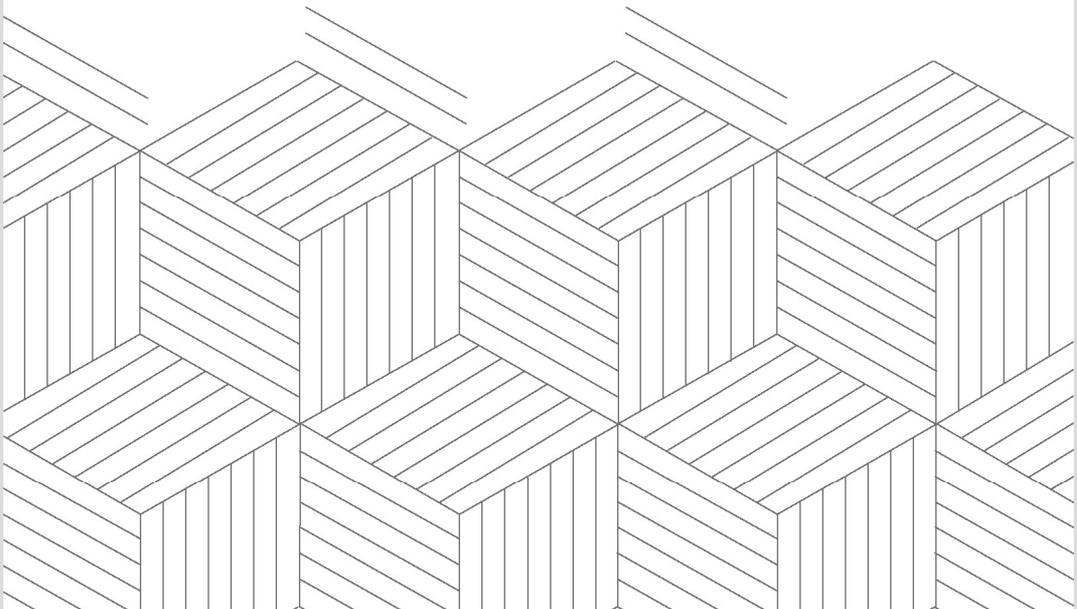
〈그림 1-1〉 분야별 비전 .....	4
〈그림 1-2〉 연구의 주요내용 .....	4
〈그림 1-3〉 연구 수립 체계 .....	5
〈그림 1-4〉 과제 도출 과정 .....	6
〈그림 2-1〉 실무기획단 추진 경과 .....	9
〈그림 2-2〉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	11
〈그림 2-3〉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성별 취업자 .....	11
〈그림 2-4〉 수원시의 산업별 종사자 수 비교 .....	12
〈그림 2-5〉 수원 소재 고용지원기관 현황 .....	13
〈그림 2-6〉 중앙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및 수원시 일자리 여건 .....	15
〈그림 2-7〉 일자리분야 비전과 정책목표 .....	16
〈그림 2-8〉 핵심포 발굴을 통한 상권 활성화 .....	20
〈그림 3-1〉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34
〈그림 3-2〉 정부 정책 방향 : 주거복지 로드맵 .....	34
〈그림 3-3〉 세대당 인구수 추이 .....	36
〈그림 3-4〉 수원시 1인가구 구성비 및 임대료 부담수준 .....	37
〈그림 3-5〉 점유형태변화와 임차가구 비중 .....	37
〈그림 3-6〉 수원시 주거하향가구의 주거정책 니즈 .....	38
〈그림 3-7〉 주택가격 및 대출금리 추이 .....	39
〈그림 3-8〉 연령별 임차가구와 과부담 월세가구 비율 .....	40
〈그림 3-9〉 계층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가구 .....	40
〈그림 3-10〉 연령별 전입인구 추이 .....	41
〈그림 3-11〉 수원시 인구구조 변화 전망 .....	41
〈그림 3-12〉 경기도내 시군구 공공임대주택 비율(2015년 기준) .....	43
〈그림 3-13〉 외국의 사회주택 재고율 및 입주자격 범위 .....	47
〈그림 3-14〉 수원시 주거정책 여건 .....	50
〈그림 3-15〉 수원시 주거문제 대응 여건 .....	51

〈그림 3-16〉 여건 변화를 고려한 수원시 주거정책 방향 .....	52
〈그림 3-17〉 주거분야 실무기획단의 수원시의 역할 평가 .....	53
〈그림 3-18〉 수원시 주거정책 방향 .....	53
〈그림 3-19〉 주거분야 비전과 정책목표 .....	54
〈그림 4-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현황 및 예측(1965-2065) .....	83
〈그림 4-2〉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2017년) .....	85
〈그림 4-3〉 수원시 65세 이상 차매환자 수 및 유병률(2016년) .....	92
〈그림 4-4〉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	107
〈그림 4-5〉 미국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	113
〈그림 4-6〉 광명시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사업 내용 .....	115
〈그림 4-7〉 돌봄분야 비전 및 정책목표 .....	116
〈그림 4-8〉 교육분야 비전 및 정책목표 .....	127



# 제1장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수원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연구”를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 필요
- 특히 수원시민의 니즈가 높은 핵심영역의 과제들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발굴하고 제시
- 핵심영역별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을 중기 단위로 수립하여 장기비전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핵심 전략과제 도출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45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중기, 장기로 설정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
- 공간적 범위 : 수원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3대 핵심영역(일자리, 주거, 돌봄)별 현황을 진단하고 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그림 1-1〉 분야별 비전



청년들이 안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수원

〈그림 1-2〉 연구의 주요내용

### 3개 핵심영역의 각론적 연구 : 논리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 계획 수립

1

#### 3대 핵심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

- 12개 분야의 사업전략을 제시 → 대부분의 사업이 포함되어 핵심영역에 대한 집중적 검토 필요
- 3대 핵심 영역(일자리, 주거, 돌봄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

2

#### 필요사업 발굴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방법론 개선

- 통계자료 분석 등 방법론 강화
- 분야별 전문성 확보, 현장 중심의 방안 마련, 체계적 접근강화
- 미래기획단, 시정연구원, T/F팀(인구정책 실무기획단)의 협업

3

#### 실행력을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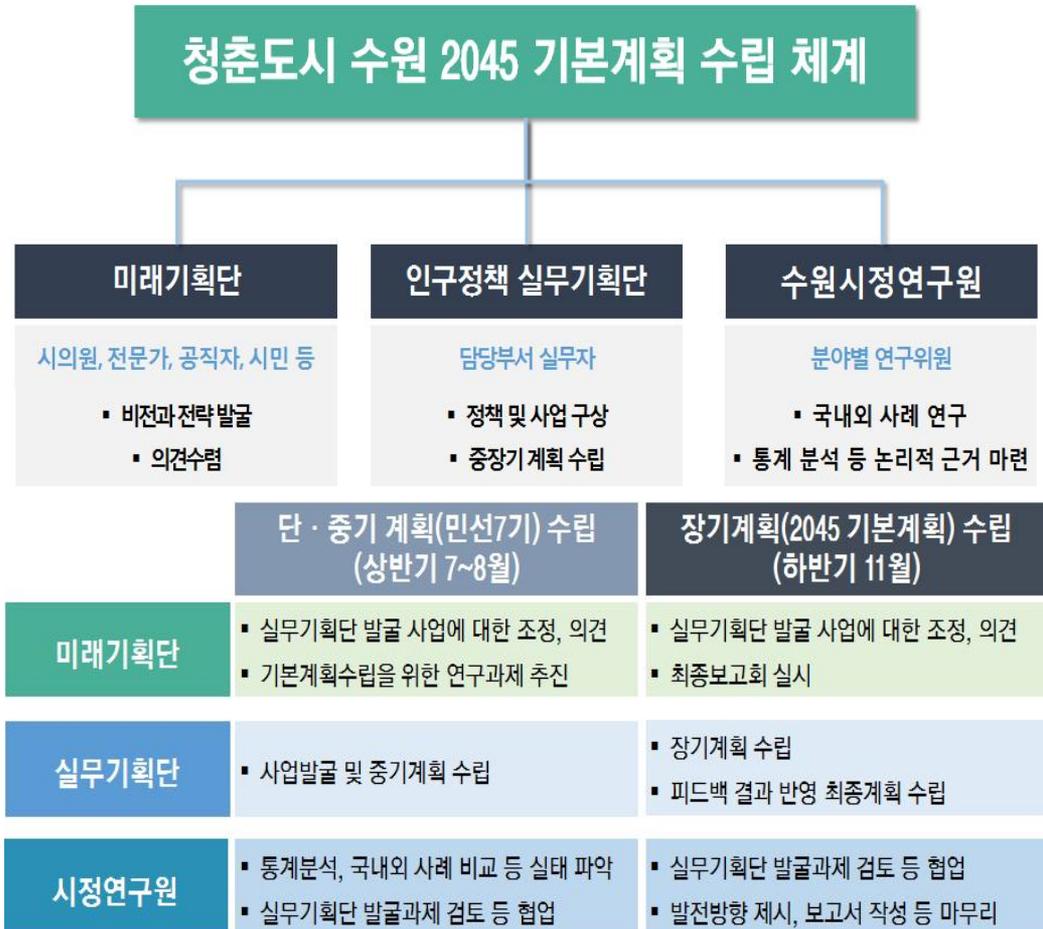
- 관련부서 실무자의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실무부서의 전문성 활용, 정책수립과 추진의 활용도 제고

- 3대 핵심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 발굴
  - 분야별 통계자료 분석 및 국내외 사례 검토·적용
  - 비전 달성을 위해 분야별 중기계획(민선7기 4년) 수립
  - 일자리, 주거, 돌봄(교육)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 과제 발굴

##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국내외 관련 연구 검토
- 관련 통계 분석
  - 수원시 사회조사, 인구주택센서스 자료, 주거실태조사 자료 등 수원시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 활용
- 전문가 및 수요자 니즈 : 주거복지 수요자 니즈확인, 관련 전문가(학계, 관련 실무자, 시민단체 등) 대상 인터뷰
- 수원시정연구원이 연구수행 + 미래기획단과 실무기획단이 협업하여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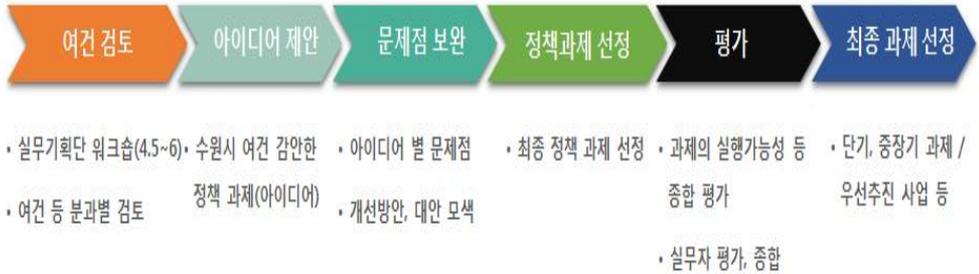
〈그림 1-3〉 연구 수립 체계



### 3) 실무분과 추진 결과

- 3개 분과 50여명, 30회 이상 정기 및 수시 회의 진행
- 63개 과제(일자리 7, 주거 15, 교육 돌봄 41)

〈그림 1-4〉 과제 도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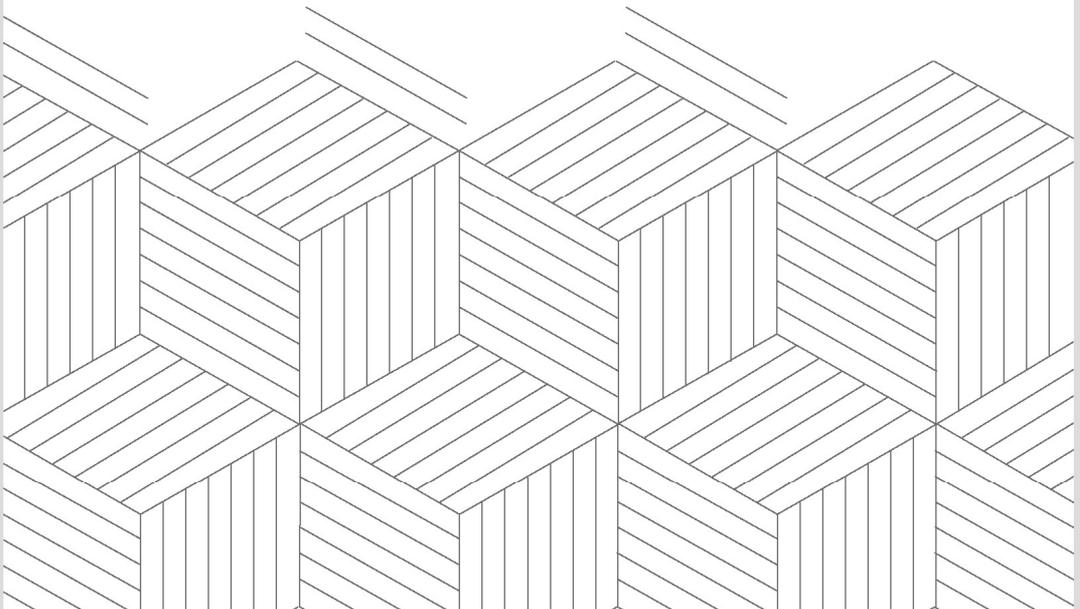
# 제2장 일자리분야

제1절 개요

제2절 일자리 여건

제3절 중앙정부 및 수원시 일자리 정책

제4절 제안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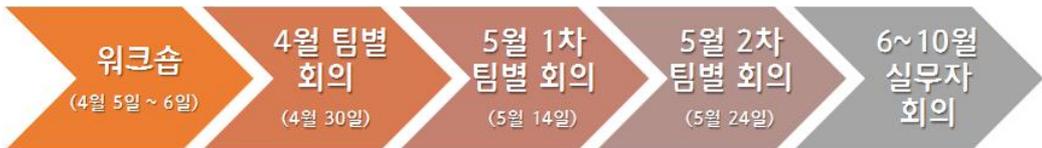
## 제2장 일자리분야

### 제1절 일자리 여건

#### 1. 추진 개요

- 실무기획단 추진 경과
  - 수원시의 일자리분야 여건과 추진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워크숍과 팀별 회의, 실무자 회의 등을 진행

〈그림 2-1〉 실무기획단 추진 경과



- 워크숍 (4월 5~6일)
  - SNS, 야구장, 버스정류장, 육교 스크린 화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실적 적극 공개가 필요함
  - 일자리 미스 매치 해결을 위해 교육 확대 등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새로운 정책 마련보다는 기존 일자리 정책을 보완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충 필요
  - 간접 지원을 통한 근로자 처우 개선 필요
- 4월 팀별 회의 (4월 30일)
  - **청년일자리** : 주거와 창업,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 산업단지 주변 녹지공간 조성, 타 지역 청년몰과 소통창구 마련 등
  - **기금조성** : 사회투자기금 조성
  - **상권 활성화** : 핵점포 조성을 통해 수원시 노동시장의 85% 가량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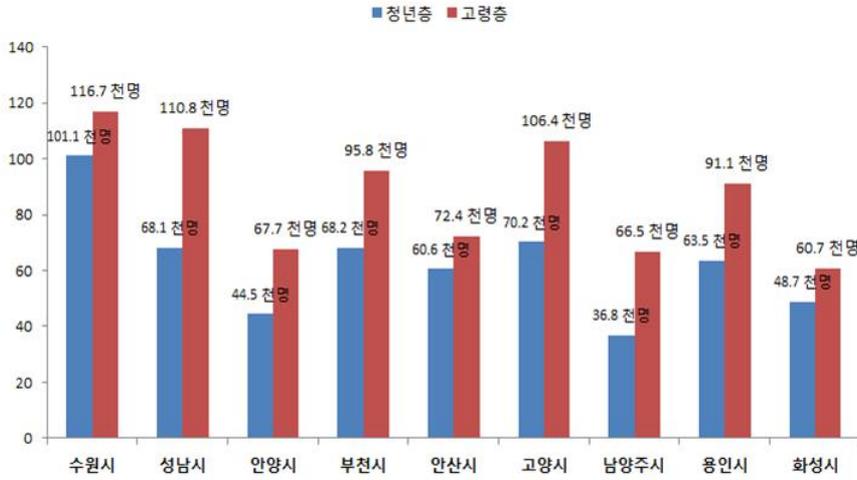
### 활성화 가능

- 5월 1차 팀별 회의 (5월 14일)
  - 상권 활성화 방안
    -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원시 산업구조에 맞는 핵점포 발굴 및 이슈화 방안에 대해 논의
    - 나들가게 활용 방안에 관하여 논의
  - 취업 및 창업지원 : 창업지원 컨설팅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
  
- 5월 2차 팀별 회의 (5월 24일)
  - **일자리 해결방안 논의** : 주변도시와의 연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 **나들가게 활성화** : 점주의 투자 필요
  - **핵점포 지원방안 논의** : 핵점포 발굴단 구성을 통한 맛·위생 점검 및 수원시청 인증을 통한 홍보효과 등 기대
  
- 6~10월 실무자 회의 : 주요사업 도출 및 보완

## 2. 수원시 고용 현황

- 연령별 고용 현황 -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 2017년 하반기 수원시 청년층 취업자는 10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 7백 명 (4.9%p)가량 증가하였고, 취업자 중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가장 높음
  - 수원시 고령층 취업자는 11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명(10.5%p) 가량 증가하였고, 고령층 취업자 비중은 2%p 상승
  -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 9곳 중 수원시만이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청년층 취업자 비중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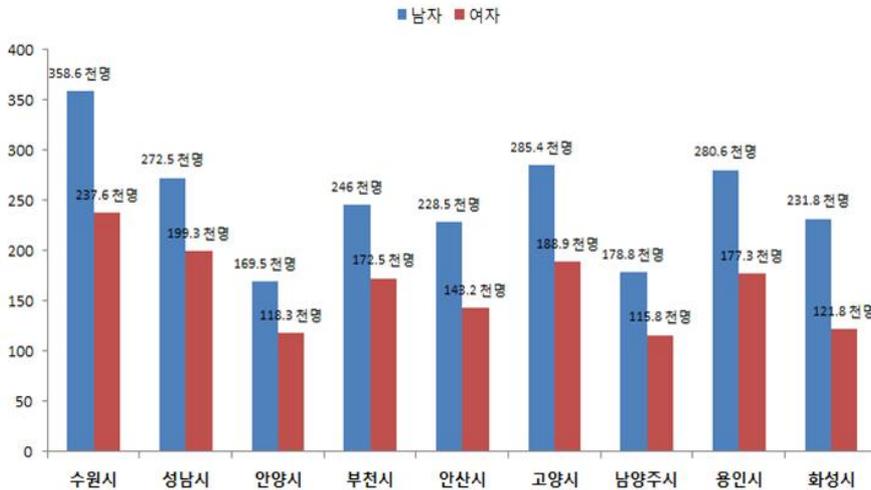
〈그림 2-2〉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2017. 하)



■ 성별 고용현황 (2017년 하반기 기준)

- 수원의 남성취업자는 35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백 명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23만 7천명으로 8천 8백 명 증가하여 수원시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이 전년 동기대비 0.1%p 상승
-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이상 도시 중 남성 취업자 비중은 화성시(66%), 용인시·안산시·남양주시(61%), 수원시·고양시(60%) 등이며,
- 여성 취업자 비중은 성남시(42%), 부천시·안양시(41%), 수원시·고양시(40%)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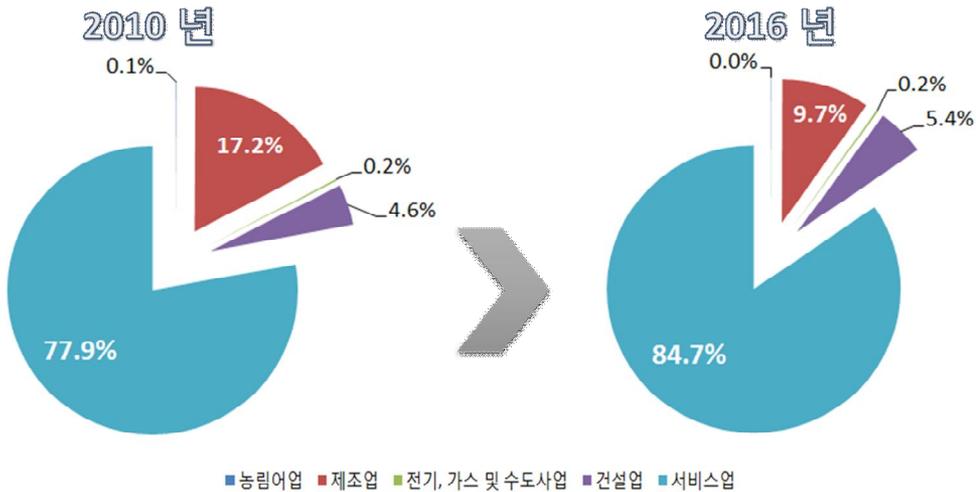
〈그림 2-3〉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성별 취업자 (2017. 하)



## 2. 수원시 산업구조 현황

- 수원시의 산업별 종사자 수를 볼 때, 수원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수원시의 서비스업 종사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
- 수원시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2010년 대비 2016년에 보다 증가

〈그림 2-4〉 수원시의 산업별 종사자 수 비교 (2010 vs. 2016)



## 3. 수원시 고용현황과 미래변화

- 수원시 고용지원기능 정비 필요
  - 일자리 경제국 산하에는 일자리 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등의 경제관련 부서들이 존재하지만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
  - 부서 위주의 정책 및 사업 추진, 순환보직이라는 공무원의 근무 특성 등은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추진의 어려움
    - 현재 수원일자리센터, 수원고용복지센터,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등에서 수원 시내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구인기업들에게는 인재정보 DB 및 채용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

〈그림 2-5〉 수원 소재 고용지원기관 현황



## 제2절 중앙정부 및 수원시 일자리 정책분석

### 1.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분석

- J노믹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 지시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관 설치”였음
    - 2017년 6월, 일자리에 특화된 추가경정예산 평정
    - 2017년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
    - 2017년 10월,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기 위한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 제시
    - 2018년 주당 근로시간 감축(68시간 → 52시간)

#### ※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

- 일자리·인프라 구축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 공공 일자리 81만 명 창출
- 민간일자리 창출
  -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 경쟁력 제고
  -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
  - 지역 일자리 창출 등
- 일자리 질 개선
  - 비정규직 남용 방지
  -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여성·신증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정부 주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 ▶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3% → 5% 상향
- ▶ 청년 구직 촉진 수단 도입
- ▶ 추가 고용장려금 신설 (중소기업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



**경제 전년대비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증가, 신설기업 월 1만개 돌파,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달성**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약 16만개 증가 (2018년 3월말 기준)
  - 현장민생 부문 공무원 3만 5,000명 증가
  - 보육 및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 1만 8,000명 증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 중 10만 7,000명의 정규직 전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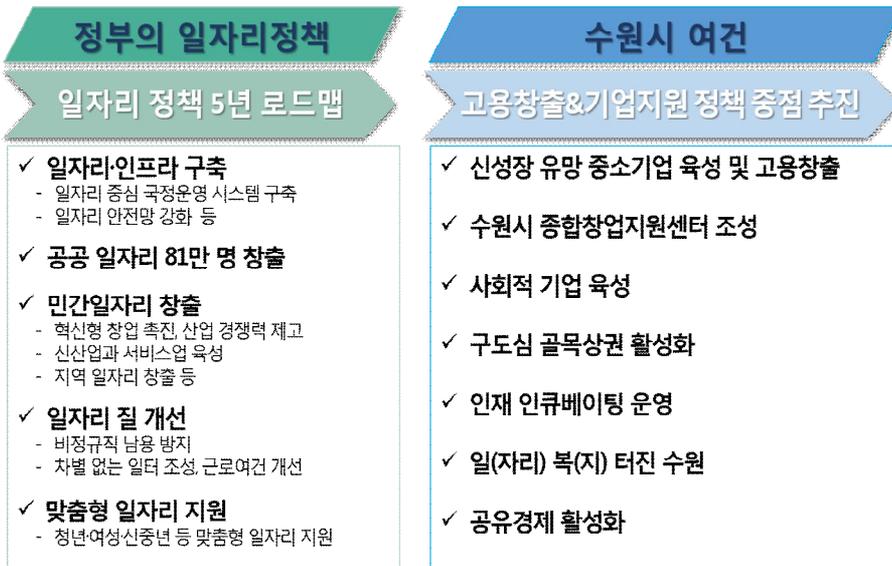
경제적 여건 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고용시장 주요 지표 악화, '18년 3월 실업자수 125만 7천명으로 17년 만에 실업률 4.5%까지 증가, 청년 실업률 11.6% '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김낙년(동국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를 내면서 정책 목표와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평가
- 경실련 전문가 3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34.4%)가 긍정적 평가(31.0%)보다 높게 나옴

**2. 수원시 일자리정책 방향**

- 수원시의 일자리정책 방향은 앞선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수원시의 일자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창출 및 기업지원정책 중점 추진 필요

〈그림 2-6〉 중앙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및 수원시 일자리 여건



-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미스매칭 저감, 미래 성장 동력 기반 구축, 창업 지원 체계 고도화,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단기과제의 정책목표를 설정

### 제3절 일자리분야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 1. 정책방향

##### 1) 일자리분야 비전과 정책목표

- 일자리분야 비전은 'S.A.F.E 수원'으로 설정
  - S.A.F.E 수원이란 '창업 지원'(Setting up), '인증제 도입'(Authentic), '4차 산업혁명 준비'(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일자리 확대'(Expanding job) 등
- 비전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수립
  -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인식 전환 프로그램 개발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유지·확장 기반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
  - 지식서비스 산업을 탑재한 플랫폼 중심의 산업 인프라 구축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1개의 추진과제를 설정

〈그림 2-7〉 일자리분야 비전과 정책목표



## 2) 추진과제 요약

〈표 2-2〉 일자리분야 추진과제 요약

목표	정책과제	세부프로그램	비고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일자리 인식 전환 프로그램	청년 안적성 검사 프로그램 개발	단기(~2020)
		청년 고용 배치 프로그램 개발	단기(~2020)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일자리 유자확장 프로그램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중기(~2030)
		근무환경 개선	중기(~2030)
		핵심강소기업 유치 + 주거지원 연계	중기(~2030)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상권전수조사 및 정보 제공	단기(~2020)
		기업 창업 지원	단기(~2020)
		문화예술거리 조성	중기(~2030)
지식서비스 산업을 탑재한 플랫폼 중심의 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성장동력 산업 인프라 구축	지식거래스 설립	중기(~2030)
		푸드밸리 설립	장기(~2045)

## 2. 추진과제

1-1	<b>청년 인·적성 검사 프로그램 개발</b>	단기(~2020)
-----	---------------------------	-----------

### ■ 정책목표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기에 앞서, 자신의 현 상태와 적성,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적성 검사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 정책내용

- 청년 인·적성 검사 프로그램 개발
  - 인·적성 프로그램 대상을 특성화고,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취업준비생, 재직자 등으로 세분화하거나 직종유형별로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
- 인·적성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서비스 제공
  - 청년 인·적성 검사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등에 필요한 업무 능력 및 경력 개발 서비스(정보 및 교육, 비용지원 등) 제공

### ■ 기대효과

-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저감
- 수원지역의 청년 취업자 수 증가

###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1. 청년 인·적성 검사 프로그램 개발		○			
2. 맞춤형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서비스 제공		○			

1-2	<b>청년 고용 배치 프로그램 개발</b>	단기(~2020)
-----	-------------------------	-----------

■ **정책목표**

- 대입 수험생들에게 성적에 따른 진학 가능한 대학 및 학과를 안내해주는 주요 대학 정시모집 배치표와 같이 수원시 소재 기업들의 청년 고용 배치표를 개발하여 청년들과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정책내용**

- 수원 소재 기업 대상의 인력수요조사 등 실시
  - 수원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업무능력, 스펙 등의 채용 조건과 지불 가능한 임금 수준 등 청년 고용 배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 청년 고용 배치 프로그램 개발
  - 청년 고용 배치 프로그램의 타당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 소재 기업 대상 인력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수원지역의 청년 취업자 수 증가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1. 수원 소재 기업 대상 인력수요조사 실시	○	○	○	○	○
2. 청년 고용 배치 프로그램 개발		○			

2-1	<b>골목상권 활성화 방안</b>	중기(~2030)
-----	--------------------	-----------

■ **정책목표**

- 지역별 핵점포 발굴 및 나들가게 활성화 등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여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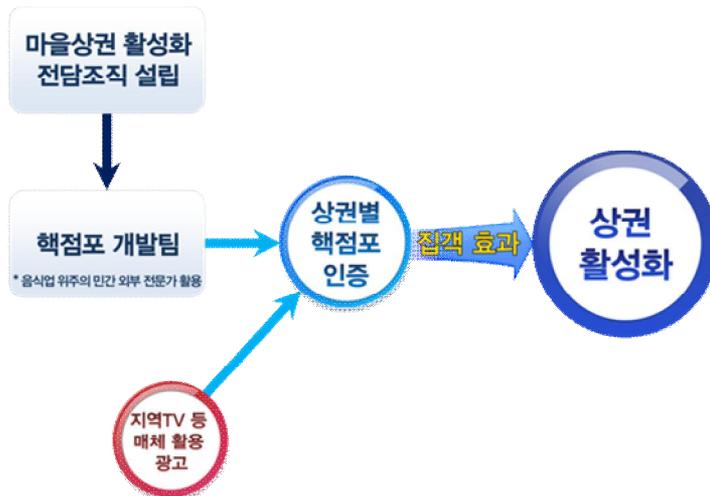
■ **대상**

- 수원지역 내 외식업 관련 업종 중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점포
- 수원지역 내 나들가게

■ **정책내용**

- 핵점포 발굴을 통한 상권 활성화
  - 생활밀착형 주거 지역은 핵점포 개발을 통해 마을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핵점포 개발 지원 필요
  - 외식업 관련 업종들 중, 각 음식별 핵점포를 지정하여 수원시 관련 매체 등에 홍보를 함으로써 유동 인구를 더욱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 구현
  - 예를 들어, 음식 관련 핵점포 발굴 사업은 외식 관련 외부 전문가들을 핵점포 개발 팀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매스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핵점포 발굴

〈그림 2-8〉 핵점포 발굴을 통한 상권 활성화



- 나들가게 활성화
  - 나들가게가 손님 지향적으로 정비되면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주변 상가가 활성화 되고 창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기대효과

- 상권별 핵심포 인증을 통한接客효과 증가로 지역상권 활성화
- 서비스 직종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1. 핵심포 발굴을 통한 상권 활성화	○	○	○	○	
2. 나들가게 활성화		○	○		

2-2	근무환경 개선	중기(~2030)
-----	---------	-----------

■ 정책목표

- 수원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복지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년층의 유입 도모
- 이를 위해 수원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단지 내 근로자 대상의 필요 시설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단지 주변의 문화체육시설, 녹지 공간 조성 및 산단 내 어린이집 증설 추진

■ 대상

- 수원산업단지

■ 정책내용

- 수원산업단지 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필요시설 수요조사 실시
- 산업단지 주변 문화체육시설 또는 공원녹지 공간 등 조성 추진
- 수원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증설 (약 3개소)
- 2014년 3월, 수원지방산업3단지 내 시립 어린이집 개원 이후 추가 개원 없음

■ 기대효과

- 수원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으로 산단 재직자의 근무 만족도 향상
- 수원산업단지 인식개선을 통한 청년 인력 유입 확대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1. 수원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실시	○	○			
2. 수원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사업 추진			○	○	
3. 수원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증설		1개소	2개소	3개소	

<b>2-3</b>	<b>핵심&amp;강소기업 유치(지원) + 주거지원 연계</b>	<b>중기(~2030)</b>
------------	-------------------------------------	------------------

■ **정책목표**

- 4차 산업 등 신산업을 주도해 나갈 핵심&강소기업 및 인력의 수원지역 유치를 위해 주거지원을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여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산업구조로 개편

■ **대상**

- 수원으로 본사 이전하거나 수원에 본사를 둔 4차 산업 관련 창업 기업
- 기업 이전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게 된 대상기업의 임직원

■ **정책내용**

- 지원규모 : 주거비 지원(주거급여 월 11만원) 기업 또는 개인에게 지원(기타 기업지원 인센티브 동시 패키지 가능)
- 일정기준 충족 시 1, 2, 3년 등 차등적으로 계속 지원, 계속 지원 평가 시 일정 기준 충족(정규직 전환, 비율 증가 등)

■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유치 및 4차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부담 완화, 기업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여건 개선

〈핵심&강소기업 유치(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연계 효과〉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1. 핵심&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기금 마련		○	○	○	○
2. 핵심&강소기업 유치 활동 추진		○	○	○	

3-1	상권전수조사 및 정보 제공	단기(~2020)
-----	----------------	-----------

■ 정책목표

- 수원시 전역에 대한 상권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업(자영업)의 시기별 경기 흐름, 연령별 종사자 파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도출

■ 대상

- 수원 소재 전체 상점 및 상권
- 수원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창업을 계획 중인 자영업자 등

■ 정책내용

-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상권 개발을 통한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수원시 상권의 지역, 인구, 소득, 소비 등의 현황 분석 실시
  - 상권 평가, 인구 분석(주거인구, 직장인구, 유동인구 등), 소득소비, 시설분석 등
  - ※ [별책보고서] 참조
- 상권전수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수립

■ 기대효과

- 현장에 근거한 상권분석 자료 제공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정책 수립
- 수원 소재 (예비)자영업자의 경영 활동 및 의사결정에 도움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1. 상권전수조사 실시	○	○	○	○	○
2. 상권분석 자료 제공	○	○	○	○	○

3-2	기업 창업 지원	단기(~2020)
-----	----------	-----------

■ 정책목표

- 수원시창업지원센터의 기업창업지원 기능을 보다 확대강화하여 기업들의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 실패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수원 소재 창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판매장 구축 등

■ 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수원시민 또는 예비창업자
- 창업한지 3년 이내의 기업 등
- 수원지역의 재창업자 중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서를 보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정책내용

- 수원 재도전 패키지 지원 사업(가칭) 추진
  - 지원 대상 선정을 통해 창업 공간, 컨설팅, 교육, 사업화자금, 마케팅 등 지원
- 창업기업 오프라인 홍보·판매장 구축

■ 기대효과

- 지역 내 우수한 (예비)재창업자 및 재도전 기업을 발굴하여 재창업 성공률 제고
- 지역 창업기업의 홍보·판매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 도모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1. 수원시 재도전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	○	○	○	○
2. 창업기업 오프라인 홍보·판매장 구축	○	○			

<b>3-3</b>	<b>문화예술거리 조성</b>	<b>중기(~2030)</b>
------------	------------------	------------------

■ **정책목표**

- 수원지역 내 유휴 시설이나 공간 등이 많이 분포해 있는 낙후된 지역을 문화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오래된 공장이나 낡은 점포 등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공간을 창작 지원 공간으로 조성
- 권선구에 위치한 구)서울대농생대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대상**

- 수원지역 내 재개발이 필요한 낙후지역(구)서울대농생대 부지 등)

■ **정책내용**

-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한 실행준비 추진
  - 수원 내 낙후지역 및 유휴 공간 등 문화예술거리 조성 대상지역 탐색
  - 지역 내 문화예술 수요(시장) 조사
  -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추진 등
- 문화예술거리 조성 추진
  - 문화예술거리 내 작품 활동 공간 및 시설 확충 등

■ **기대효과**

-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거리 조성은 도시재생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 문화예술거리를 조성을 통해 예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일반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와 경제의 상호 양립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1.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한 실행준비	○	○			
2. 문화예술거리 조성 추진			○	○	

4-1	지식거래소 설립	중기(~2030)
-----	----------	-----------

■ 정책목표

- 청년층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하려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는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지식 거래소 설립 추진

■ 대상

- 지식거래소

■ 정책내용

- 지식거래소 설립 추진을 위한 경제성 분석 등 실시
- 지식거래소 서비스 모형 개발
- 지식거래소 설립

■ 기대효과

- 지방분권 시대에 수원시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반 마련
- 수원시를 중심으로 창의적 특허·발명 클러스터 자생 가능
  -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이 자리한 여의도에 금융본사들이 위치하듯 지식 거래소 인근에서는 창의적인 특허·발명가(街) 클러스터 자생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1. 지식거래소 설립을 위한 실행 준비	○	○			
2. 지식거래소 서비스 모형 개발		○	○		
3. 지식거래소 설립			○	○	

4-2	<b>푸드밸리 설립</b>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연구 집약형 식품 연구 단지인 ‘푸드밸리(F&B Valley)’ 설립
  - 수원시에서 농사를 짓자는 것이 아닌 수원시가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자는 취지
  - ex) 제주도산 생수인 ‘삼다수’를 처음 시판하기 시작한 농심은 ‘삼다수’ 매출이 오를수록 제주도가 아닌 서울시에 법인세를 냄

■ 대상

- 푸드밸리

■ 정책내용

- 푸드밸리 설립을 위한 실행준비 추진
  - 푸드밸리 설립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및 자금 확보
  - 푸드밸리를 종합 지원할 수 있는 푸드밸리재단(가칭) 설립
  - 푸드밸리 참여 기업, 연구기관 등 유치
- 푸드밸리 설립 및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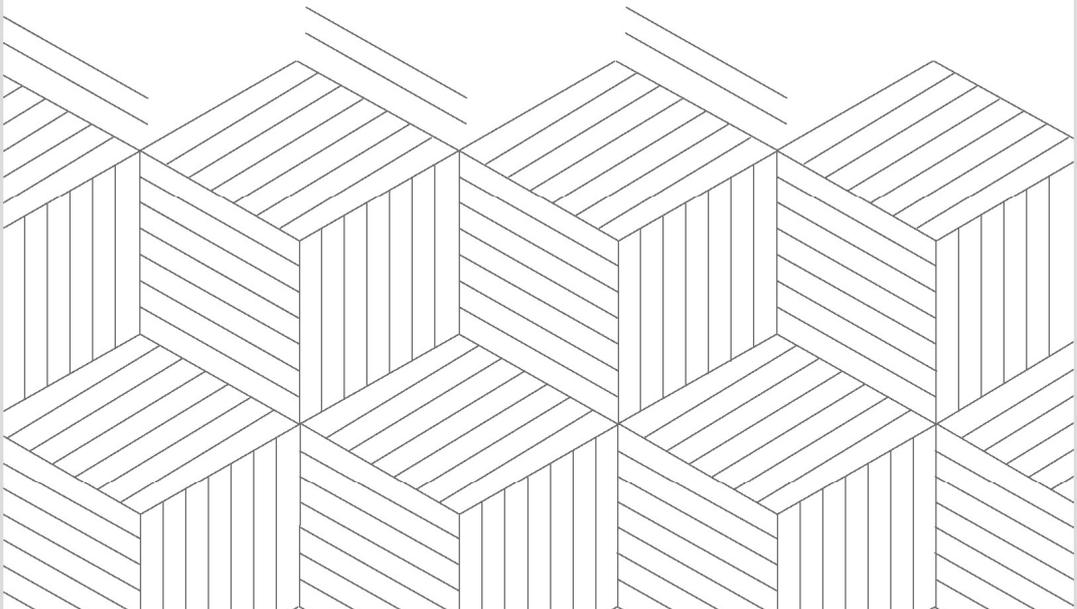
- 수원시, 푸드밸리를 기반으로 미래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성장
- 첨단 식품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1. 푸드밸리 설립을 위한 실행 준비	○	○	○	○	
2. 푸드밸리 설립					○

# 제3장 주거분야

- 제1절 주거분야 여건
- 제2절 국내외 정책 및 사례
- 제3절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 제3장 주거분야

### 제1절 주거정책 여건

#### 1. 주거부문 메가트렌드

- 개요
  - 미래 주택, 주거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 미래 주택 주거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메가트렌드는 무엇인지.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
  
- 주거부분과 관련이 높은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 청년층의 결혼지연과 저출산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1~2인 가구 등 소형가구 증가 / 외국인 가구 증가
    -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여건 양극화
  - 저성장 및 양극화
    - 소득정체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 / 소득 및 자산 양극화
    - 합리적 소비 확대 / 공유경제 시장, 공유문화 확대로 주택 등 부동산 소비패턴 변화
  - 금융기술 발달과 가계부채
    - 가계부채 증가로 주택의 구매, 임대료 부담수준의 증가 등 주거문제 악화
    - 안전자산 선호 증대와 주택금융을 활용한 유동성 확대 필요성 증가
    - 사회적금융 확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이 부각과 사회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추구
  - 지방분권 및 행정체계 변화

- 특례시 지정이슈 및 자치분권·재정분권 확대 요구 증가
  - 조세 및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 정부와 지자체 등 민관협력체계 강화. 중앙, 지방, 비영리.영리 단체의 역할 분담과 참여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 사업예산 편성권 등 강화
-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트렌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
- 본 과제와 관련하여 직접적 관련.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지방분권 및 행정체계 변화와 관련한 트렌드와 이슈로 요약할 수 있음

〈표 3-1〉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거분야 트렌드

영역	이슈	개념, 내용
□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청년층 결혼지연과 저출산	○ 경제적 여건변화와 가치관 변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초혼연령과 비혼 증가, 출산율 감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저출산,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고령인구비율 증가 고령사회 진입 ○ 고령화사회는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1~2인 가구 등 소형가구 증가	○ 비혼, 이혼, 사별,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화로 1~2인 가구 증가
	외국인 가구 증가	○ 이민, 취업, 난민 등 유입되는 외국인 인구 증가
	학령인구 감소	○ 저출산으로 인한 초, 중, 고에 진학하는 만18세 이하 인구 감소
	교육여건 양극화	○ 대학 간 서열화 심화와 우수학군지역의 축소 및 우수학군으로의 학생과 입시학원 집중 ○ 교육비지출의 증가
□ 지방분권과 특례시 지정	자치분권·재정분권 확대	○ 특례시 지정이슈와 시민의 주거니즈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주거 복지지원 등을 위한 행정사무 및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전 ○ 조세 및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정부·민관협력체계 강화	○ 중앙, 지방, 비영리.영리 단체의 역할 분담과 참여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 사업예산 편성권 등 강화

-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트렌드
- 저성장 및 양극화, 금융 발달과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적인 검토 필요

〈표 3-2〉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거분야 트렌드

영역	이슈	개념, 내용
□ 저성장 및 양극화	소득정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성장, 물가상승에 비해 낮은 소득 증가.</li> <li>주택의 구매, 임대료 부담수준의 증가 등 주거문제 악화</li> </ul>
	소득 및 자산 양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계층이나 집단 간에 심화. 중간계층이 사라지고 계층이 양극화되는 현상 심화</li> </ul>
	합리적 소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가 가격과 품질 및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 만족감 등을 고려하여 가장 편익이 많은 소비를 하는 행위</li> </ul>
	공유경제 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대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협력 소비 방식의 경제활동. 집, 자동차 등을 공동으로 쉐어링하는 공유문화 확대로 주택 등 부동산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주택과 공간구조에 영향</li> </ul>
□ 금융 발달과 가계부채	가계부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년 기준 가계부채는 1400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li> <li>가구당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2015년 기준 170%로 OECD국가 33개국 중 10위</li> </ul>
	안전자산 선호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층의 안정적 수입확보 요구 증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li> <li>주택을 활용한 유동화 수요 증가</li> </ul>
	사회적금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이 부각</li> <li>사회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현재 여건 하에 수요자에 대한 대출 및 투자 수요가 증가</li> </ul>

## 2. 정부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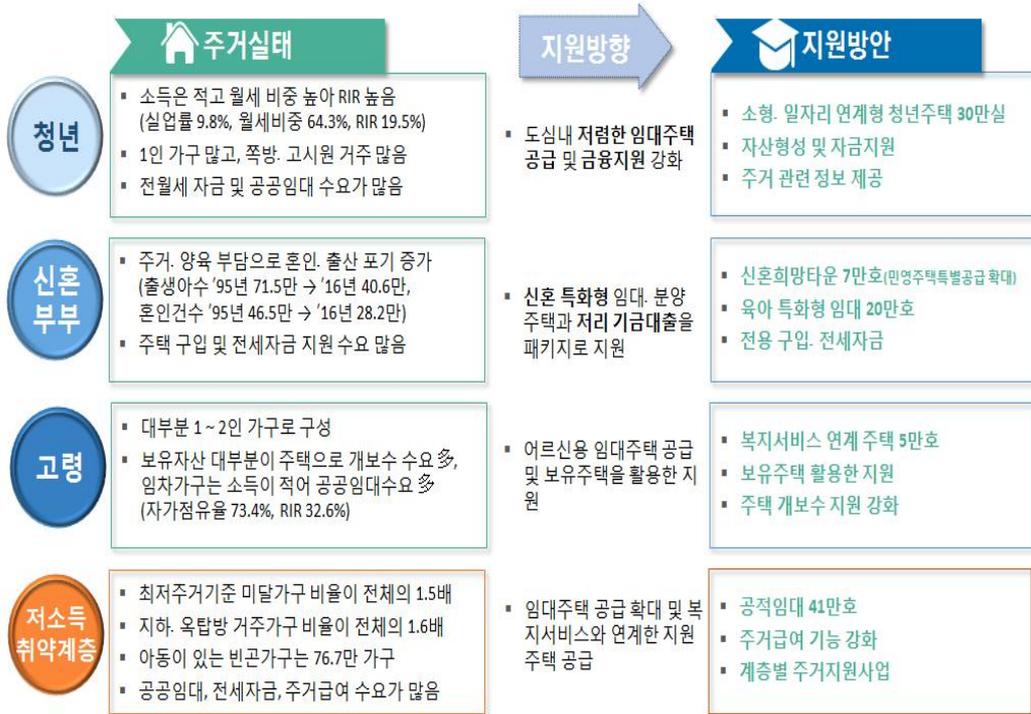
### 1)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

- 최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
  -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1~2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
  -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
  - 정부는 과거 주택공급 물량 확대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
  - 시민의 주거니즈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 다양한 주택공급과 지원 방식 도입.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요자의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 반영한 지원방안 모색(2017.8)

〈그림 3-1〉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그림 3-2〉 정부 정책 방향 : 주거복지 로드맵



## 2)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 주거기본법의 목적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주거기본법 제1조)
  - 주거권을 명시.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임(주거기본법 제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 기본원칙(주거기본법 제3조)
  -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
  -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
  -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
  -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
  -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 거주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주택시장의 정상적 기능,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는 기본원칙을 두고 주거정책을 수립·시행
  
- 기타 주거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
  -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내용(제5조 및 제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의 건설·공급 등,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환경의 정비 등,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유도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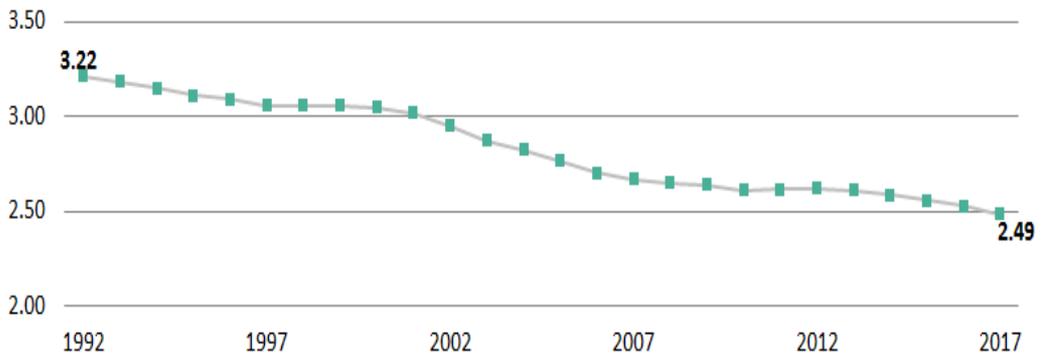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실태조사(제20조)
-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 (2016.1.19 개정)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 조사 위탁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지방공사, 지방연구원 5개 기관
  - (2017.4.18 개정) 청년주거지원정책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 2. 수원시 주거여건 변화

### 1) 가구분화에 따른 1,2인 가구 증가

- 저출산 및 가구분화 등으로 세대당 인구수 감소 지속
- 1992년 세대당 인구수는 3.2명에서 2017년 2.5명 수준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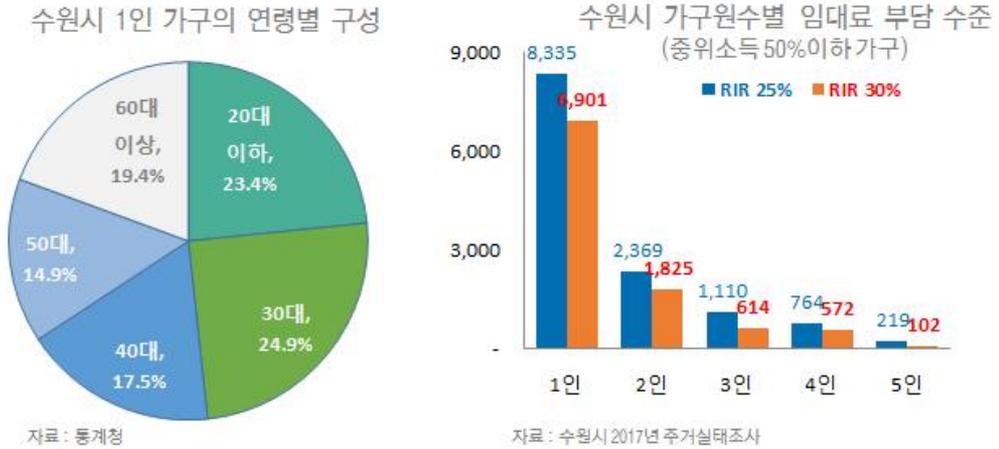
〈그림 3-3〉 세대당 인구수 추이



자료: 통계청

- 1인 가구 중에서 절반 정도(48.3%)가 20~30대, 1인 가구의 높은 임대료 부담수준

〈그림 3-4〉 수원시 1인가구 구성비 및 임대료 부담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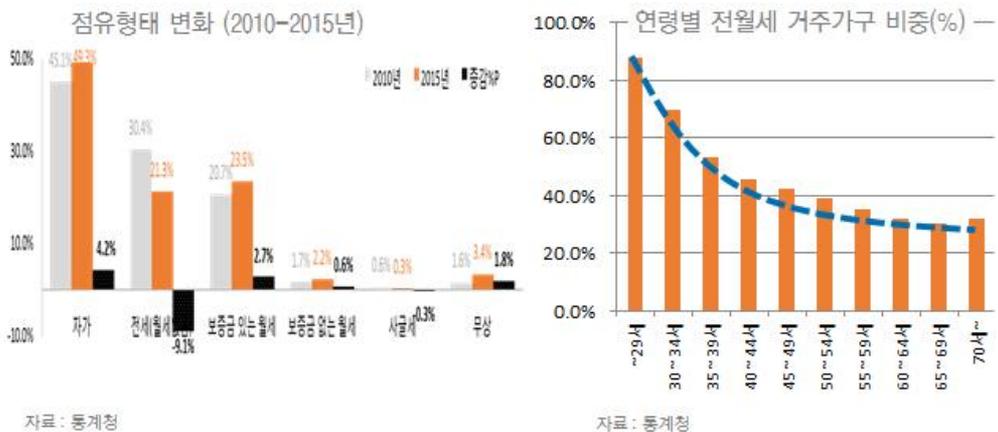
**대응방향**

-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소형 주택공급 필요성 증가, 지역사회(공동체) 고려
- 주택 규모와 유형 등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는 수요와 공급 접점

2) 절반이 전월세 임차거주, 월세가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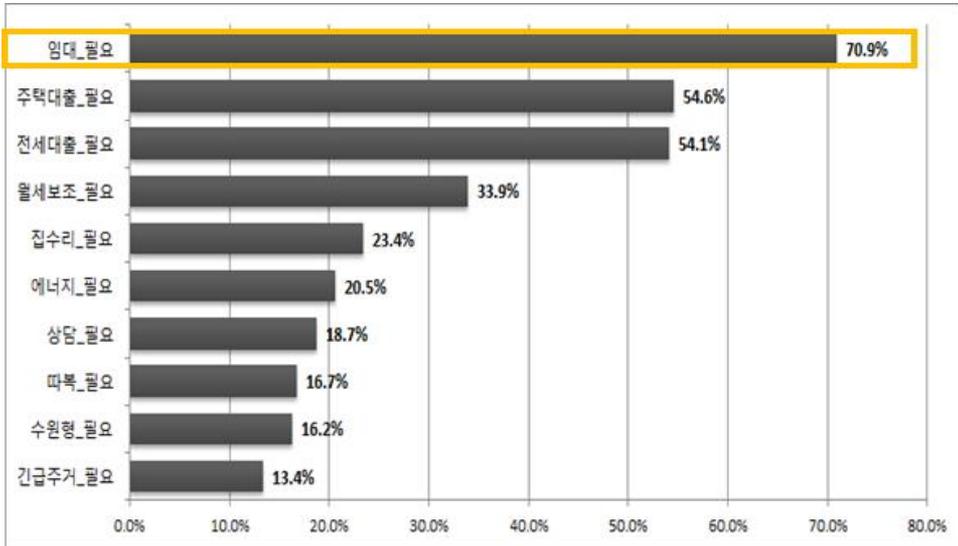
- 낮은 자가가구 비중, 전세의 월세화 : 전세비율 감소와 월세 증가(2010-2015년)
  - 수원시 가구중에서 절반정도(49.3%)는 자가로 거주, 전월세는 47%
  - 2010년에 비해 50대 이상에서 자가가구 증가 폭이 큼
  - 20대 중 월세 거주 가구수는 소폭 감소

〈그림 3-5〉 점유형태변화와 임차가구 비중



-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하향가구 특성 : 1인 가구, 청년층, 임시직 등 비정규직 ->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그림 3-6〉 수원시 주거하향가구의 주거정책 니즈



자료 : 수원시 2017년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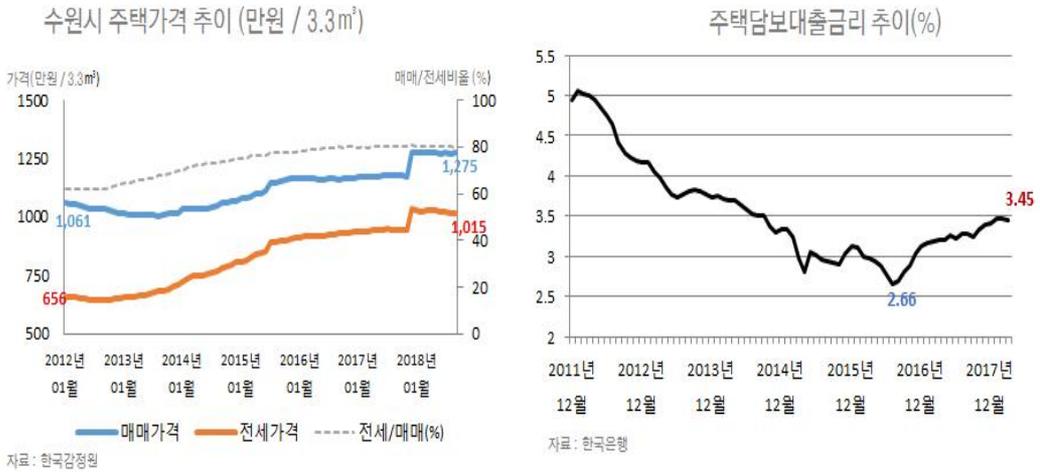
**대응방향**

1. 주거상향 증진, 주거하향 방지를 위한 주거사다리 구축 필요
2. 정부정책의 소외 계층 발굴과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3) 주택상승에 따른 주거불안정성 내재

- 전세가격은 2008년 말 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임대료 부담 가중
  - 2012.1월 -> 2018.9월 : 수원시 매매가격 20% 상승, 전세가격 54.6% 상승
  - 2015년 수원시 가구 중에서 자기집에 사는 가구는 절반에 미치지 못함. 대부분의 전 월세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될 개연성

〈그림 3-7〉 주택가격 및 대출금리 추이



- 과거 저금리 기조에서 금리인상이 불가피 -> 금리 인상(최저 2016.7월 2.66% -> 2018.3월 3.45%)
-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임차인이 떠밀려 이동하게됨. 또한 주변지역의 가격상승(Riffle Effect)을 초래하여 인접한 주변지역의 임대료 상승 등 불안요인 내재

**대응방향**

1. 주기적으로 주택 및 경제여건 변화를 모니터링-> 주거안정 저해 요인 점검과 대응방향 모색
2. 도시재생, 주요 개발사업 주변지역 파급, 젠트리피케이션 등 모니터링과 대응방향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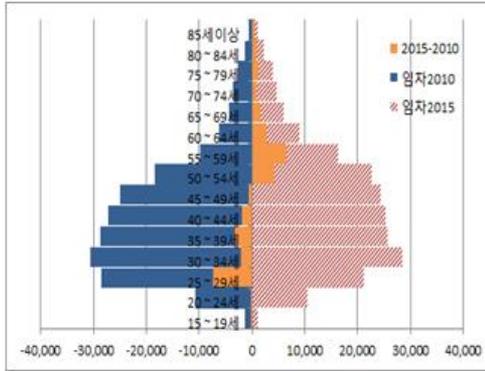
4) 청년층 주거비 부담에 따른 결혼기피와 출산 지연

- 청년 1인가구들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이 지연 되는 등 저출산 문제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
- 청년층은 주로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수준이 높음.

〈그림 3-8〉 연령별 임차가구와 과부담 월세가구 비율

2010년과 2015년 연령별 임차가구  
비교

과부담 월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 RIR 30%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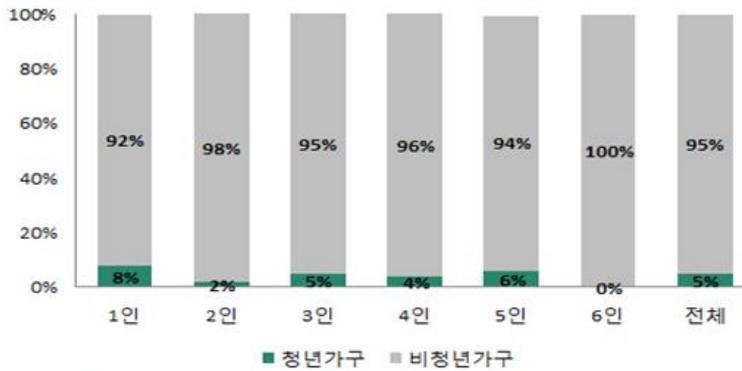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자료 : 수원시 2017년 주거실태조사

-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3-9〉 계층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가구



자료 : 수원시 2017년 주거실태조사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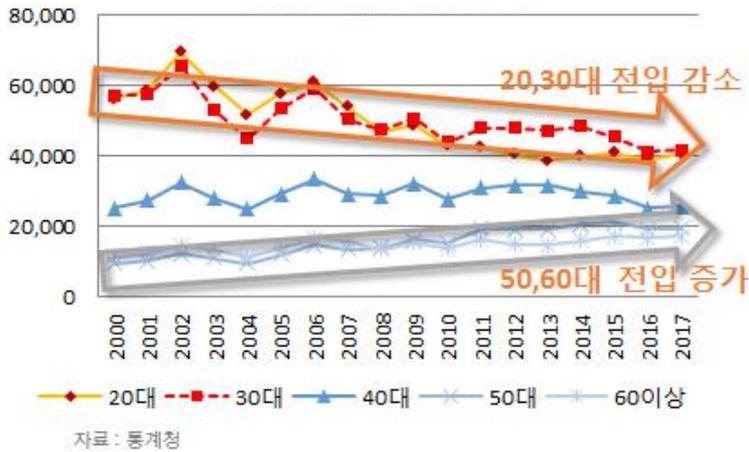
1. 청년층 주거실태와 주거 니즈(needs) 모니터링
2. 주거안정 저해 요인 점검과 대응방향 모색

5) 청년층 전입인구 감소세 지속

- 연평균 19만명 전입, 청년층 전입인구는 감소세
- 최근 10년간 연평균 19.3만 명이 수원으로 전입, 18.8만 명이 전출

- 50대와 60대의 전입인구는 증가세, 반면 청년층 유입인구는 감소추세

〈그림 3-10〉 연령별 전입인구 추이



- 저출산, 인구가동 추세가 지속 가정
  - 2045년에는 2018년에 비해 30대 이하 인구 16.6만명 감소,
  - 65세 이상 33.4만명 증가
- 수원시 인구는 급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할 필요
  - 65세 이상 고령인구 급증과 30대 이하 연령층과 유소년 인구 급감

〈그림 3-11〉 수원시 인구구조 변화 전망



**대응방향**

- ✓ 수원에 이주한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
- ✓ 청년층 유입 증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등 지원 방안 모색

### 6) 낮은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

■ 수원시 주거취약 가구 규모

- 수원시 주거취약 가구, 전체 가구의 27.4%인 119,605가구(2017 주거실태조사결과)

〈표 3-3〉 수원시 주거취약 가구 규모 및 비율

		(단위 : 가구, %)		
구 분		가구수	비율	
전체		436,304	100.0	
주거취약계층 전체 가구		119,605	27.4	
주거취약계층	내국인	내국인 주거취약 가구	102,541	23.6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기타 거주 거주 가구	2,651	0.6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26,425	6.1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1,100	4.8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30,455	7.0
		조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구	5,440	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17,274	4.0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59,321	13.6
		외국인·다문화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와 가구원 중 외국인 또는 귀화 한국인이 있는 가구	17,064

주 : 중복 가구로 인해 각각을 더한 합이 전체와 같지 않음.

자료 : 수원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 공공임대주택 재고

- 수원시 공공임대주택 20,014호
- 장기임대주택이 절반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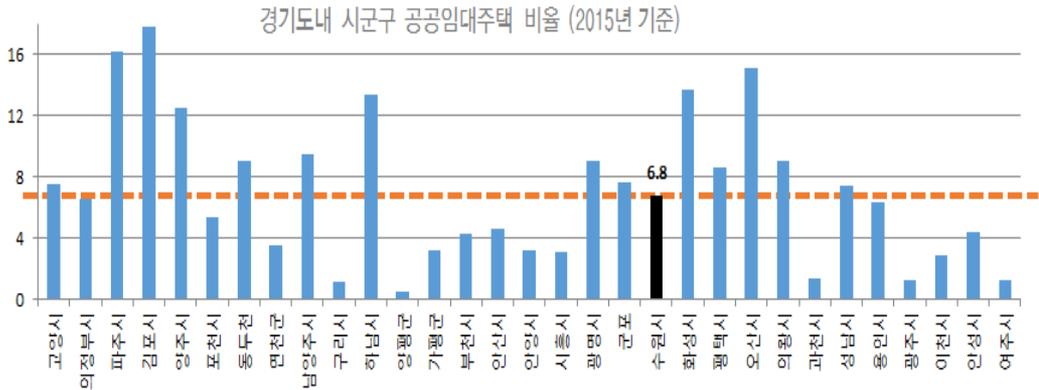
〈표 3-4〉 수원시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구분	관리주체	주택유형	세대수	합계
영구임대	LH	아파트	1,825	1,831
	경기도시공사	다가구	4	
			다세대	2
국민임대	LH	아파트	9,499	9,499
5년임대	LH	아파트	585	585
10년임대	LH	아파트	5178	5178
매입임대	LH	다가구	2,016	2,511
	LH	다세대	417	
	LH	오피스텔	12	
	경기도시공사	다가구	52	
		다세대	14	
행복주택	LH	아파트	400	400
매입임대	수원시	다세대	10	10
합계			20,014	

출처 : 수원시 내부자료

-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율
  - 수원시 전체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비율 2015년 기준 6.8%
  - 김포 17.8%, 파주시 16.2%, 오산시 15.1%, 화성 13.7%하남 13.4% 등 10%이상

〈그림 3-12〉 경기도내 시군구 공공임대주택 비율(2015년 기준)



출처 : 경기복지재단, 2017. 경기도 주거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수원시 매입주택 현황

〈표 3-5〉 수원시 매매 주택 건축물 현황

위 치	장안구 정자동		
연면적	479.09	층 수	지상4층
주용도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세 대 수	10세대
허가일	2012. 03. 28.	사용승인일	2012. 08. 31.

**대응방향**

1. 원활한 주택공급(소규모, 소형주택)과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보
2. 장기로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제2절 국내외 정책 및 사례

### 1. 정부의 주거지원 사업

- 주거문제 지원형태는 공급측면의 지원과 수요측면의 지원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 생산자에 대한 지원과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보조금, 금융, 세제지원 등을 지원하는 정책수단과 주거비 보조 등의 정책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6〉 정부의 주거 지원형태

구분	대상	정책수단	기대효과
공급측면의 지원 (supply side support)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생산자	보조금, 금융, 세제지원 등 제공	주택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효과
수요측면의 지원 (demand side support)	소비자	주거비보조 등 지급	주거서비스의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

#### ■ 국토교통부

-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크게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과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하여 시행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 영구, 국민, 공공임대 10년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 주거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사업인 주거급여 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도 주거복지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도 주택개량이나 보수, 개조 등의 수요자 지원방식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지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에너지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지

- 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 바우처
- 환경부 :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지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여성가족부 :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

〈표 3-7〉 중앙정부 주요 주거관련 사업

구분	사업명	내용	비고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개발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통한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거환경개선자금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제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그린홈 사업	
	취약지 생활여건개선사업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공공 실버주택 사업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실버주택 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중)	변화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첫 도입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기업형 임대주택 (New Stay)	자가 구매 여력이 없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농어촌 거주 장애인들에게 문턱낮추기, 화장실 개조 등 주택환경 개선사업 실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미사업	독거노인의 안전 확보 및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	

## 2.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 서울시
  - 서울시에서는 주택공급, 주거급여, 주택개량, 주택금융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형 바우처,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 서울시만의 특화된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
  - 경기도에서는 안정된 주거복지를 위하여 햇살하우징, 따복전세지원사업, 카네이션하우스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기타 지자체
  - 부산광역시 : 부산형 행복주택, 햇살동지사업, 호프(HOPE)프로젝트 기부사업, 서민 주거환경정비사업, 폐가철거사업 등
  - 인천광역시 : 사랑의 집고치기,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택바우처사업, 재개발 사업지내 폐·공가 관리사업, 마을주택관리소,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아파트 민원상담실 등
  - 대구광역시 : 동고동락 집수리 사업,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 광주광역시 : 마을형 공동체 주택 사업, 행복한 목수 봉사단, 노랑호루라기, 미혼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등
  - 울산광역시 : 동그라미자립홈, 해피투게더 타운 등
- 기초자치단체의 주거복지사업(조례기준)
  - 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비 지원,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이 주된 주거복지사업임

〈표 3-8〉 주요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한 주거복지사업

구분	수원	성남	시흥	전주
주택 임대보증금, 임차료(주거비) 보조 및 대출	●		●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	●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주거복지 향상 위한 연구·조사사업	●		●	●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자금 지원				●
공동체 증진 및 자활·자립지원사업			●	●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	●
주거복지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	●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	●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공공임대주택 알선 및 입주대상자 선정	●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위한 사업	●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	●	●
특화사업 위한 예산 배정		●		●
그 밖에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	●

성남시 : 특화사업 위한 예산배정-다해드림하우스사업

전주시 : 특화사업 위한 예산배정-해피하우스사업, 집수리사업

### 3. 주거 정책 대상

#### 1) 주요 국가별 정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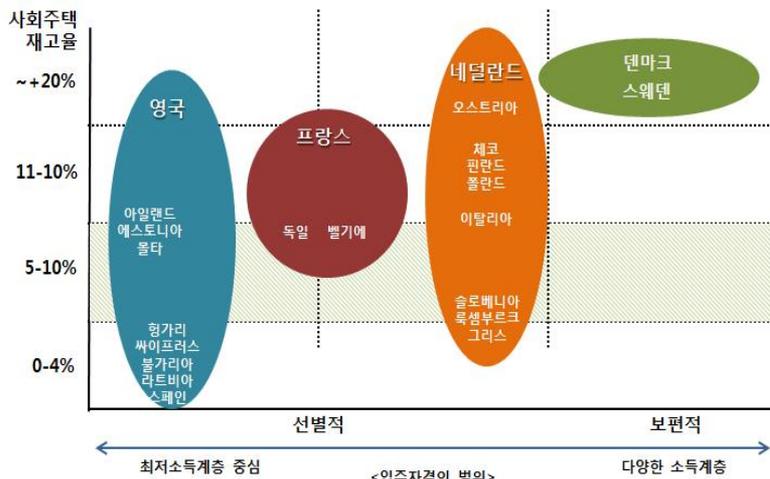
- 국가별로 처한 여건에 따라 정책대상 설정 방향은 차이가 있음
  - 영국은 부담가능주택 개념을 도입하면서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는 2010년부터 저소득가구 위주로 입주대상을 제안하고 있음
  - 여기에는 공급주체의 재정건전성 제고, 저소득층 주거소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등 다양한 배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급주체에 대해 입주순위 결정의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유연한 주거지원이 가능
  - 공급주체는 노숙인, 과밀가구, 장애인, 노인, 학생, 자녀양육가구, 철거민, 퇴거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등 가구별 다양한 주거소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표 3-9〉 해외 주요 국가별 입주대상층의 설정

구분	공급주체
영국	2010년 연립정부 출범 이후 부담가능주택 도입 시세 대비 80%까지 임대료 책정 가능하여 중간소득층의 접근성 제고
네덜란드	2010년부터 신규물량의 90%를 저소득층에 우선 배정 (유럽연합 지침, 대략 소득 3.5분위 이하 가구)
프랑스	소득계층별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 공급(입주대상 조정변화는 없음) 2000년 이후 사회주택 정책을 강화하는 법을 다수 제정

서울특별시(2016),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연구

〈그림 3-13〉 외국의 사회주택 재고율 및 입주자격 범위



서울특별시(2016),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연구

## 2)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대상

- 주거복지 기본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총 19곳임
  - 서울을 비롯한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수원을 포함한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정하고 있음
    - 수원시는 지속가능과 주거복지팀에서 담당
    -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북전주, 경기성남, 경기시흥, 전북고창, 충남천안에 이어 6번째로 조례를 제정
    - 전주시는 유일하게 주거복지과에서 담당. 2011년부터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먼저 제도화

〈표 3-10〉 지자체 주거복지 지원조례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	
광역 자치단체	서울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2017.01.05
	경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2016.07.19
	광주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2017.11.15
	대구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2017.03.02
	대전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2016.08.12
	부산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2016.03.3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4.02.17
	인천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3.02.2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2016.09.28
기초 자치단체	경기 수원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6.08.12
	경기 성남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2.03.12
	경기 시흥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2013.11.08
	경기 여주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2017.09.27
	경기 이천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6.12.30
	전북 고창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7.14
	전북 군산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7.11.01
	충남 당진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6.12.30
	전북 전주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1.08.16
	충남 천안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5.09.11

자료 : 각 지자체별 주거관련 조례 참조(2018.6.30일 기준)

- 주거약자와 주거지원 대상
  - 수원시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주거급여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의 사람, 긴급지원대상자, 이외 지

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3-11〉 지자체별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구분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비고
경기 수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본인소유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제2 조 2항)
경기 성남	제3조(지원대상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일부개정 2015.12.18)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3.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3조)
전북 전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전주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 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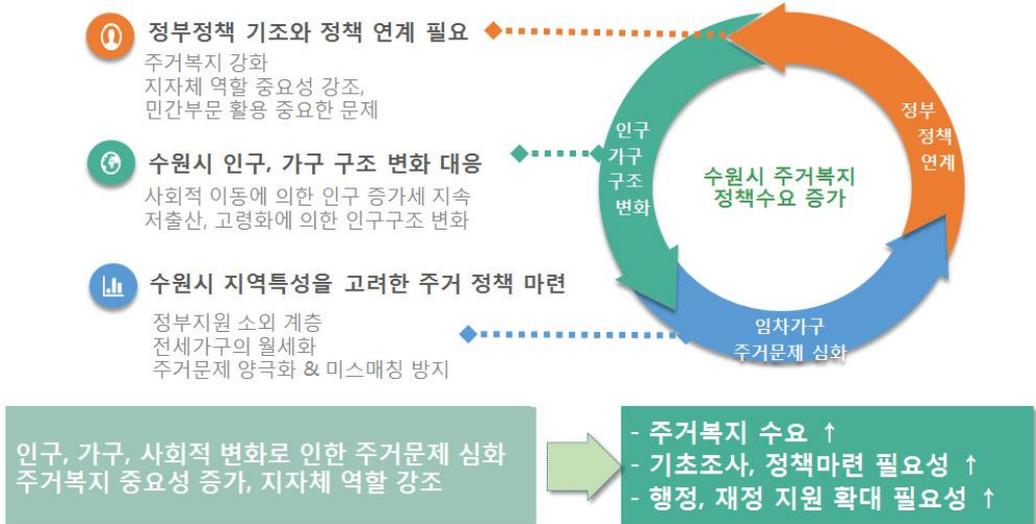
- 타지자체 조례에 정한 주거권, 주거약자 등 규정<sup>1)</sup>
  - 주거권 명시 : 경기도, 서울, 대구 등
  - 주거약자 : 경기도, 광주광역시, 세종, 인천 등
  -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주거약자)
    - 중위소득 50%이하 등 : 수원, 천안, 전주, 군산, 당진
    - 중위소득 60%이하 등 : 시흥시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성남, 여주, 이천

1)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참조

## 4. 수원시 주거정책 방향

### 1) 수원시 주거정책 여건

〈그림 3-14〉 수원시 주거정책 여건



### 2) 수원시 주거문제 대응 여건

- (현재) 지속가능재단 주거복지센터 / 수원시정연구원 / 공사설립 / 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
- 기반은 타 기초자치단보다 앞섬.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 등 모니터링 미흡
  - 시민의 주거실태조사나 청년층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는 만들었음.
  - 시흥, 전주 등은 이미 오래전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였음
  - 수원시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가 최초의 조사. 일회성으로 그쳐 주거실태의 변화, 얼마나 주거안정성이 훼손되고 정책으로 인해 얼마나 개선되는지 등 모니터링과 효과적 정책 대안 모색에 한계.
- 주거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원시 조직과 인력은 부족한 편임
- 수원시에 주거복지 공공임대 등 전담부서(과) 없음. 주거복지팀 하나 존재
  - 서울시 주거지원 관련 업무는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공동주택과, 주택정책개발센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담당
  - 경기도 주거지원 관련 업무는 도시주택과, 주택정책과, 따복하우스과, 도시재생과, 공

동주택과에서 담당

〈그림 3-15〉 수원시 주거문제 대응 여건



주거복지 수요 증가속도 ↑, 수원시 인력과 조직! ➡ 주거복지 기반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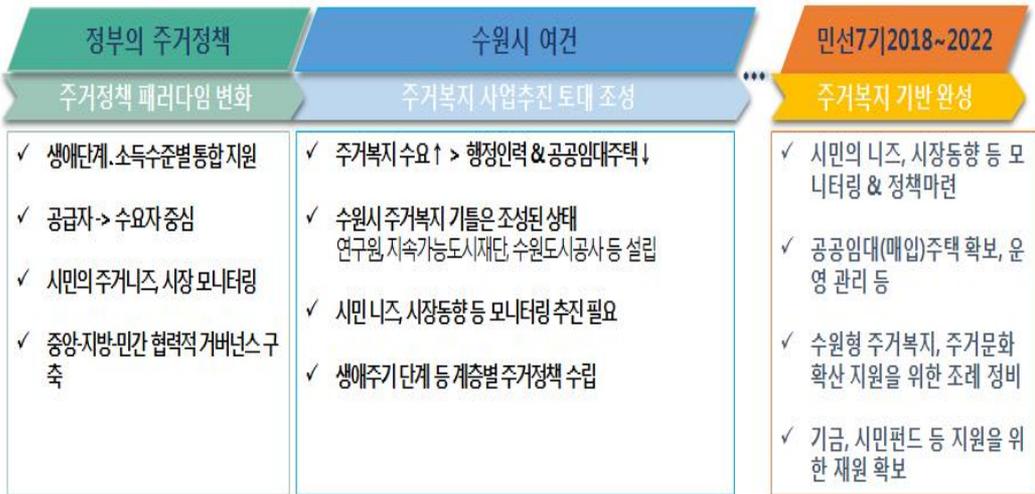
### (1) 정기적인 주거니즈 모니터링 필요

- 그동안 면밀한 주거실태 파악 미흡, 주거정책상의 시사점을 찾는 데는 한계
- 정책수립과 시민의 니즈를 찾는 기본적인 출발은 주기적인 모니터링, 주거실태조사라 할 수 있음.
  - 최우선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시민의 주거실태가 어떠한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왜 변화하였는지를 객관적 데이터 축적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국토부 종전 2만가구 ⇒ 6만가구로 표본 확대, 격년 ⇒ 매년 주거실태 조사 실시
    -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 등 특수계층, 수시 ⇒ 매년 조사로 변경
  - 수원시의 주거정책과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
  - 이와 함께 주거문제 중 기본적인 가격변동과 관련한(임차료, 주택가격), 정부정책이나 수원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시민에 대한 주거실태(중요 지표를 설정해 변화 모니터링, RIR, PIR,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능력, 소득대비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 등)

## (2) 주택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필요

- 다양한 주택,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정기적 검토와 자료축적 필요. 이를 통해 다양한 분석과 정책마련에 참고할 수 있음.
- 도심 주요 재개발, 재건축, 기타 개발사업, 도시재생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주거불안 가능성(주택 멸실에 따른 주거비 상승 가능성, 가격상승의 주변지역으로 전이되는 물결효과, 상권 활성화에 따른 상업용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 또한 주택가격변화나 전세가격, 월세가격 등의 변화는 시민의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어 주거비부담을 가중하거나 소비 또는 경제활동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주택,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주요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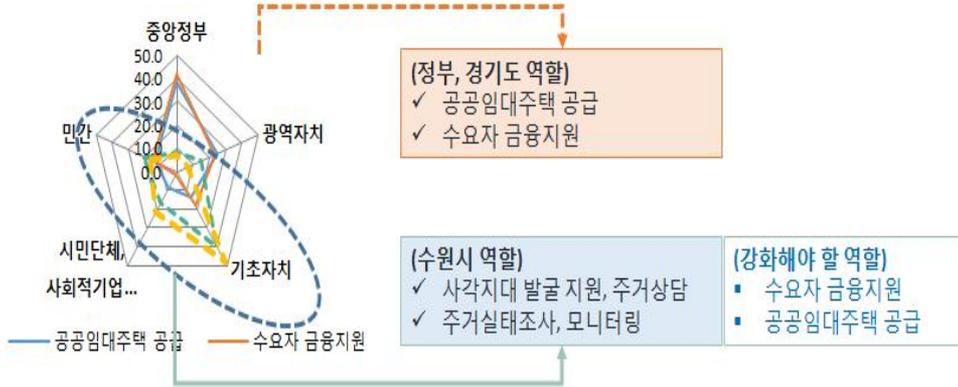
〈그림 3-16〉 여건 변화를 고려한 수원시 주거정책 방향



### ■ 실무기획단의 수원시 역할에 대한 평가

- 정부,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수요자 금융지원에 중점
- 수원시 : 사각지대 발굴, 모니터링, 주거상담(시민단체 등 민간 연계 활용) 등에 중점을 둘 필요
- 수원시가 향후 강화해야 할 역할과 기능 : 수요자 금융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림 3-17〉 주거분야 실무기획단의 수원시의 역할 평가



■ 시기별 주거정책 방향 설정

〈그림 3-18〉 수원시 주거정책 방향



### 제3절 주거분야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 1. 정책방향

##### 1) 주거분야 비전과 정책목표

- 주거분야 비전은 ‘청춘들이 집 걱정 없는 수원’으로 설정
  - 포용적(inclusive)이고 구매가능한(affordability)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정책 개념을 포함하는 아젠다로 주거와 관련해서는 소득, 연령 등과 관계없이 수원에 거주하는 누구나 집 걱정이 없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 주택금융 등 다양한 금융을 활용한 수원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공동체 형성 지원
  - 모니터링과 관련 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주거복지 지원 시스템 강화
  -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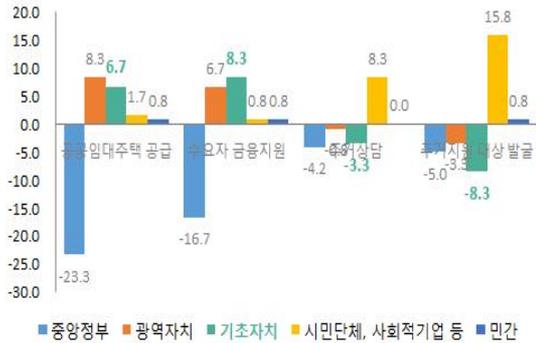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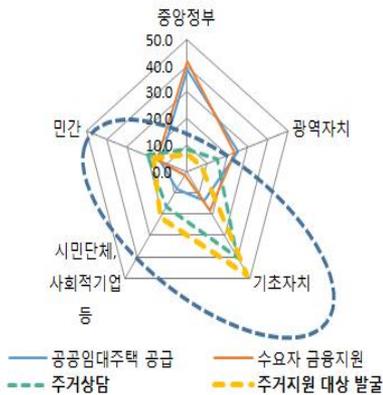
〈그림 3-19〉 주거분야 비전과 정책목표



## 2) 추진과제 요약

### 1. 장단기 과제 설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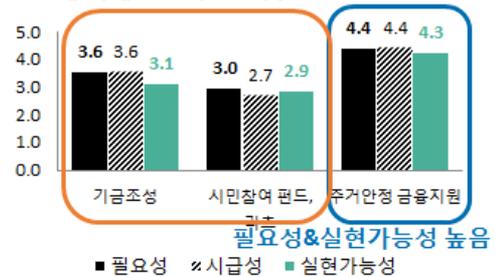
- 실무기획단과 수원시정연구원 공동 검토
  - 실무자들이 유형별, 프로그램별 평가
    - 주거관련 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의견, 사업 추진가능성 등 항목별로 평가
    - 유형별, 세부프로그램별 평가를 종합하여 단기/중장기 추진 사업을 구분
  - 평가 결과 종합
    -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수요자 금융지원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
    - 주거상담과 사각지대 발굴 : 수원시, 시민단체 등 민간 연계 활용
    - 수원시가 현재보다 강화해야 할 기능 : 수요자 금융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 ■ 금융을 활용한 주거지원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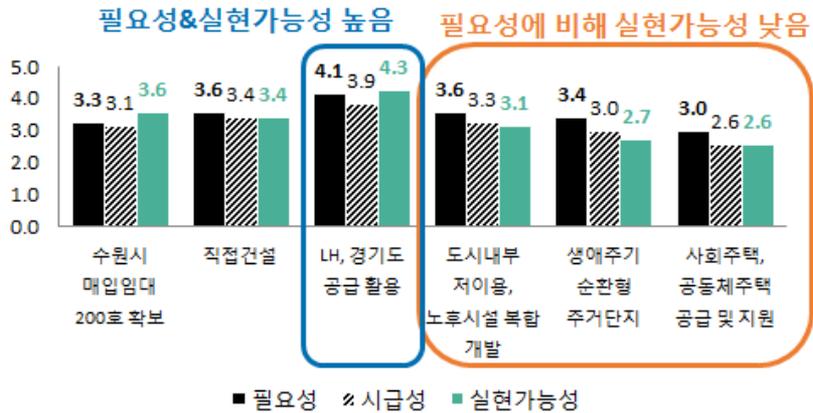
- (단기)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우선추진
  - 우선적으로 월세보조 등 정책대상 가구에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중장기) 기금조성과 시민참여 펀드, 리츠 활용
  - 여건 미성숙으로 중장기 추진
  - 필요성보다 실현가능성 낮게 평가

#### 필요성에 비해 실현가능성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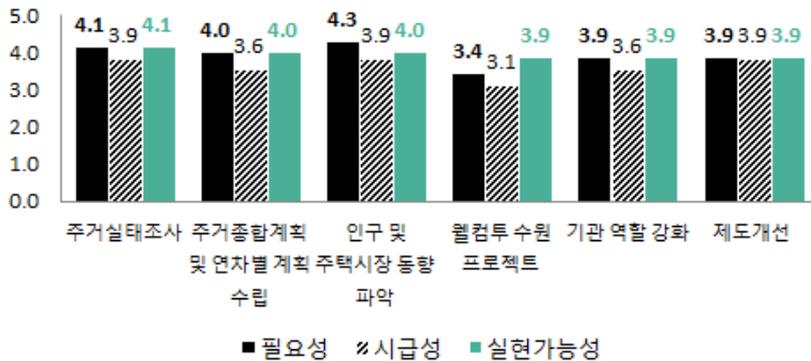
■ 공급 부문

- (단기) LH, 경기도 공급 활용, 매입임대확보
  - 직접 건설할 여건이 미성숙, 직접건설보다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실현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
- (중장기) 직접건설, (도심의 낙후지역, 노후시설)복합화, 생애주기순환단지, 사회, 공동체 주택



■ 시스템 부문

- (단기) 전반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모니터링 주거실태조사, 인구 및 주택시장 동향,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 기관기능강화 역할 강화(주거복지과 신설, 유관기관 기능 강화)
  - 제도 개선(주거복지조례 전면개정 진행 중)
- (중기) 웰컴투수원 프로젝트 시급성과 필요성은 낮게 평가. 중기 검토



〈표 3-12〉 주거분야 추진과제 요약

목표	정책과제	세부프로그램	비고
금융을 활용한 주거안정 지원	주택금융을 활용한 주거지원	기금조성	중장기(2025~)
		시민참여 펀드, 리츠 등 활용	중장기(2025~)
		주거안정 금융지원(자가, 전세, 월세)	중기(2023~)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공동체형성	다양한 공적주택 확보	수원시 매입임대주택 200호 확보	단기(2019~)
		직접건설(수원도시공사, 또는 주택공사 설립 활용)	중기(2023~)
		내, 경기도 공급 활용	단기(2020~)
	지역활력, 커뮤니티 강화	도시내부 저이용, 노후시설 복합 개발	중장기(2025~)
		생애주기 순환형 주거단지	장기(2025~)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공급과 지원	중장기(2025~)
주거복지 시스템 구축	주거관련 모니터링	주거실태조사(격년)	단기(2019~)
		주거종합계획(5년단위), 매년 연차별 계획 수립	단기(2019~)
		인구 및 주택시장 동향 파악	단기(2019~)
	정보제공	웰컴투 수원 프로젝트	단기(2020~)
	기관 역할 강화 제도개선	관련기관 기능 강화 주거복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단기(2019~)

## 2. 추진 과제

### 1) 주택금융을 활용한 주거지원

- 정책목표
  - 자가가구 : 소득 등 가계경제 변동으로 지속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기 어려운 계층의 안정적 거주와 경제력 유지
  - 전월세 가구 :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로 거주하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도모
- 정책수단
  - ① 주거복지 기금 조성 등 주거복지수요 재원마련
  - ② REITs, 펀드 조성 임대주택 건설 확대
  - ③ 자가, 보증금,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 추진 방향
  - (단기) 2020년까지, 금융을 활용한 공적 주택 확보 방안, 주거복지 기금 조성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 수행
  - (중장기) REITs나 펀드 등 금융을 활용한 공적주택 확보와 임대주택 공급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해 사업 확대
- 기대효과
  - 지원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가구들은 내집 마련을 통해서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집 마련이 어려운 가구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주거에 기여

1-1	주거복지 기금조성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기금마련을 통해 실현

■ 정책내용

- 지원대상 : 주거 수요자인 자가 및 임차가구, 공급자(사회적 기업 등)
  - (자가지원) 약간의 금융지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저소득층가구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 등
  - (임차가구지원) 취약계층, 정부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자녀 가구 등 수원시에서 정하는 주거약자
  - (공급자) 수원시내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중에서 수원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급자
- 사례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조성(2017.2),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관련 조례 제정(2017.6) 등

✓ 기금 자원

- 기업 및 시민 등의 기부 (가능성 검토 필요)
- 복권 등 중앙기관의 자원 (협의 필요)
- 주택 및 부동산 등 다양한 지방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보통세)

✓ 기금 용도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자금 지원 사업
-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
- 주거복지향상에 필요한 각종 사업 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 관련 사업 지원

✓ 운영, 관리

- 개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정할 수 없음
- 특별회계·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이 있을 시 주택도시기금 등을 조성하여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 할 수 있음

기금조성 사례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2017.2)

- ✓ 서울시는 증가하는 사회적 금융에 대한 자금수요 충족 및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개정을 통한 공적 재원을 조성
- ✓ 서울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재단을 통한 민간 기부금 으로 구성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7월)
- ✓ 2013년 부터 3년간 사회투자기금 344억원, 민간협력자금 77억원 투입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조례」 제정(2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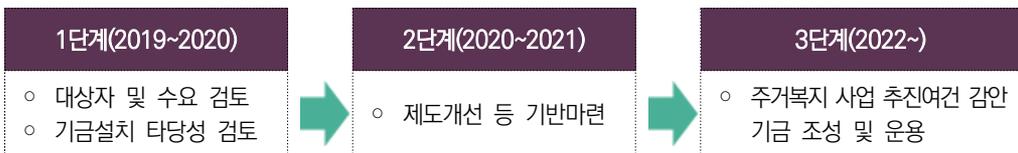
-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사항규정
- ▶자원 : 경기도 보통세의 0.2%이내,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수입금
- ▶기금의 용도
  - ①임대주택공급 및 자금 지원 사업
  - ②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 ③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④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 ⑤주거복지에 필요한 각종 사업
  - ⑥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대효과

- 다양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원활한 주거지원 자금 확보와 활용
- 임차가구 이외에 저소득 자가가구나 청년층의 자가전환에 기여

■ 연차별 추진 계획

- 주거복지 소요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기금설치 타당성 검토 연구
- 기금마련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기반 마련
- 주거복지 사업 추진 여건을 감안해 기금조성 및 운용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1. 수요 및 타당성 검토	○	○			
2. 제도개선 등 기반 마련		○	○		
3. 기금조성 및 운용			○	○	○

1-2	시민참여 펀드, 리츠 조성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주거복지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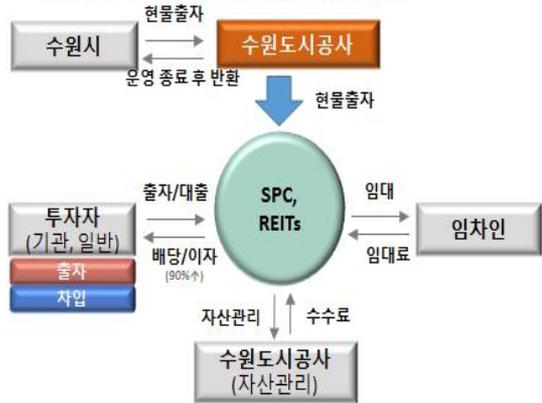
■ 정책내용

- 시민들이 함께 투자하는 펀드를 활용한 공적 주택 건설(임대주택 건설 확대)이나 리츠, SPC등 금융을 활용한 공적 기능을 갖춘 주택 공급 확대

시민투자 펀드를 활용한 사업 추진



SPC, REITs 활용한 중대규모사업추진



- 서울시, 경기도 등 충분한 사례를 검토하고 수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적으로 추진 검토 필요
- 임대주택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운영관리의 중요성도 높음. 현재 수원도시공사가 있음. 그러나 현재 수원도시공사의 조직과 역할로 한계.
-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운영,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주택공사 설립 방안 함께 검토 필요

■ 기대효과

-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원활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 시행

- 원활한 공공주택 확보와 주거안정, 시민참여 의식 고취 등에 기여

■ 연차별 추진 계획

- (단기) 2020년까지, 수요와 활용 가능한 유형 등 심층 연구 수행
- (중장기) 2021년 이후 도시공사, 또는 전문적인 주택공사 설립 등을 통해 REITs나 펀드 등 금융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보와 임대주택 공급, 관리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 사업 가능지, 수요 검토	○	○			
○ 사업추진 기반 마련		○	○		
○ 시범사업 추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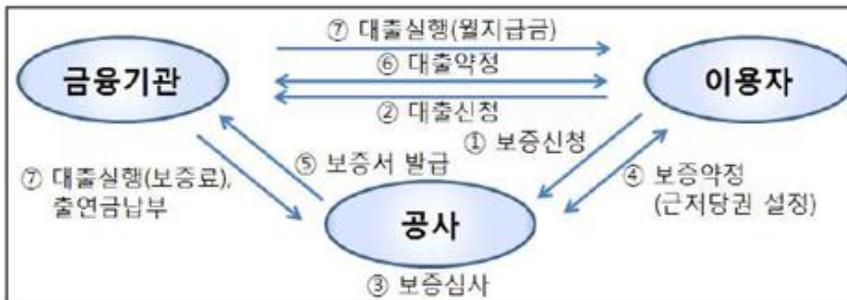
1-3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자가, 전세, 월세 등 점유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도모
- 주거상향을 위한 디딤돌역할 수행

■ 정책내용

- 역모지기를 활용한 자가(전환) 지원
  -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중 자가로 상향을 원하는 가구 지원, 소득 등 가계경제 변동으로 지속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기 어려운 계층의 안정적 거주 도모
  - 주택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 대출, 사망 또는 대출 종료시 주택 매각 등으로 대출금 상환
  - 공적 보증제도 역모기지 『주택연금』 2007년 7월부터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인 1주택자 또는 합산가격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에게 주택연금 지급



자료 : 서민주택금융재단(2016), 주택도시기금 서민주택금융 지원체계 개선 연구

〈주택연금 지급절차〉

- 현재 대상 연령층이 고령층(60세이상)으로 청년층 등 60세이하 연령층 활용 불가.
- 연령층을 낮추는 것과 주택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활용가능한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 주택구입 보증, 보증금 보증 등 지원
  -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주거불안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음

-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원. 민간금융기관을 활용. 또는 신용보강을 통해 지원
- 수원시나 수원시 금융기관이 신용을 보강해주어 대출금리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임대보증금 지원 사례

〈임대보증금 지원 방식 비교〉

	타 지자체		경기도(안)	
지원 방식	직접용자	이차보전	이차보전	
융자금조달주체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	민간 금융기관	
재원	자체 예산	민간 금융기관 자금	민간 금융기관	
정책대상 결정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정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행복주택, 따복하우스 입주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기초생활 수급자	신호부부, 자녀출산가구	
대출조건 및 대출 대상자 결정	지자체	금융기관 (기존 대출상품)		금융기관 (신규 대출상품)
사례지역	경상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화순군	제주 특별자치도	경기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 재정 부담</li> <li>•확장성, 지속가능성 미 약</li> <li>•관리 운영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과미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은 비용으로 많은 지원</li> <li>•이자율 조정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 은 지원 가능</li> <li>•금융기관과 사전 협약 으로 낮은 이자율 책정 가능</li> </ul>

자료 : 봉인식, 2017, p.30

- 자가나 전세 등 보증금 지원
  - 수원시 금융기관 IBK(지역은행)등과 협약하여 저렴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수원시가 지급보증(신용보강)
  - 신용등급 상승으로 저렴한 금리 활용 → 전환용자, 수원시의 재정적 지출을 최소화 하면서 자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월세 등 주거비 지원
- 수원시 주거지원 대상 층 중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 검토. 현재 주거  
급여 중위소득 43%에서 45% 확대,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거비 지원

### ■ 기대효과

- 수원시 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가구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안정성을 확보에 기여

- 내집 마련이 어려운 가구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주거에 기여

■ 연차별 추진 계획

- (단기) 2020년까지, 대상자 및 수요 확인 등 실행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
- (중장기) 2021년 이후 조직 및 제도 등을 갖춘 이후 시범 운영,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 또는 사업중단 등 결정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 수요 검토, 단계별 금융지원 추진 방안 연구 (자가지원, 보증금지원, 월세지원 등)	○				
○ 역모기지, 주택구입 보증 지원			○	○	○
○ 보증금 지원		○	○	○	○
○ 월세지원(다자녀 등) 확대		○	○	○	○

## 2. 공급 지원

### 공급지원 관련 과제 요약

- 정책목표
  - 수원시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고유한 정책 추진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청년층 1인가구(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임시직 등 고용불안가구 등 정부의 주거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지원
- 정책수단
  - ① 주택매입, 수원 휴먼주택 사업
  - ② 직접 건설(공사 활용)
  - ③ LH, 경기도 공급 계획 활용
  - ④ 도시 내 노후, 낙후 시설 복합개발
  - ⑤ 순환형 주거단지
  - ⑥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공급과 지원
- 추진 방향
  - (단기) 2020년까지, 공적 주택 확보 방안과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한 검토와 관련 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심층 연구 수행
  - (중장기) 시범사업 후 확대 검토
- 기대효과와 정책적 과제
  - 수원시 고유의 특성을 감안한 주거정책 시행
  - 다만, 주택의 확보뿐만이 아니라 운영관리도 중요
    - 종합적 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수원도시공사의 조직과 역할로 한계.
    -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운영,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사내 조직 확충 또는 전문적인 주택공사 설립 방안 검토 필요

2-1	수원시 매입임대 200호 확보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 정책목표

- 다자녀 가구 등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주거약자의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안정도모

#### ■ 정책내용

- 정책대상 :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청년층 1인가구(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임시직 등 고용불안가구 등 정부의 주거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 추진 방안
  - 주택을 매입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추진. ①우선 재정을 투입해 매입하는 방안으로 추진 ②중장기적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민관협력(인센티브), 수원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물량의 50%를 건축비만 지급하여 매입

#### 〈주택 매입 주거지원 사업 추진 계획〉

구 분	합 계						2023년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입 (수원휴먼주택)	11,860	296.5	2,668.5	2,965	2,965	2,965	점검 후 확대 추진
매입주택	180	5호	45호	50호	50호	5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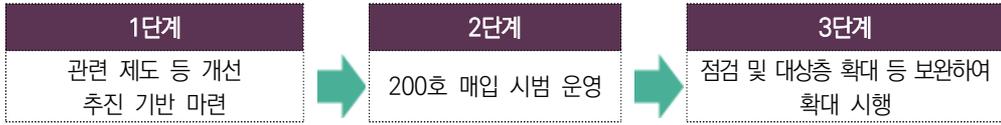
#### ■ 기대효과

-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원활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 시행
- 원활한 공공주택 확보와 주거안정, 시민참여 의식 고취 등에 기여

#### ■ 연차별 추진 계획

- (단기) 2022년까지 200호 시범사업 추진
  - 2018년 5호 매입, 2018년 45호 매입, 2019년~2022년 50호 매입 추진

- (중장기) 2023년 이후 시범사업 점검 후 확대하여 추진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 관련 조례 개선과 추진 체계 정비	○				
○ 매입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	○			
○ 운영결과 평가와 보완하여 확대 시행			○	○	○

2-2	수원시 직접 건설(공사 등 활용)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다양한 유형의 공적 주택공급을 통해 수원형 주거복지 실현 토대 마련
- 다양한 가치, 사회적 기여 확산과 더불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주거에 기여

■ 정책내용

- 정책대상 :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 시행주체 : 수원도시공사 등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 시행 방법
  - 공공보유 부지, 건축물 등 복합개발(주거+상업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 주택공급 + 지역사회 필요시설(문화시설, 어린이집, 도서관, 창업지원센터 등) 복합화
  - 노후 주민센터, 주차장 등 활용 등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 추진
  - 분양뿐만 아니라 및 수익시설 등 임대료 등으로 충당

■ 기대효과

- 다양한 유형의 공적 주택공급을 통해 수원형 주거복지 실현 토대

■ 연차별 추진 계획

- (단기) 유형별 사업 가능부지 검토, 대상지의 사업성 검토, 공사의 기능 등 기반마련
- (중장기) 2023년 이후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하여 추진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 사업성 검토(사업유형, 부지, 사업성 등)	○	○			
○ 시범사업 추진			○		
○ 운영결과 평가와 보완하여 확대 시행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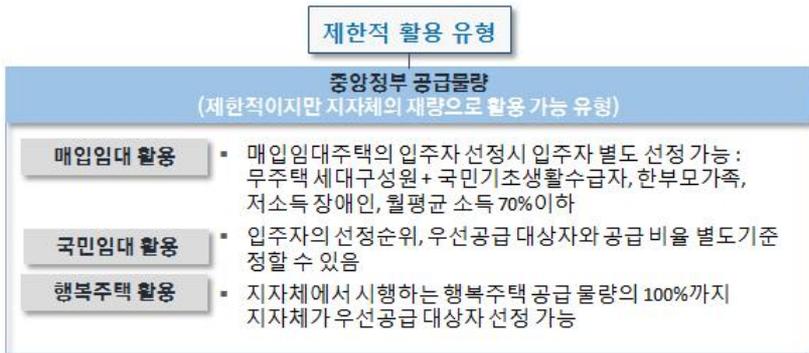
2-3	LH, 경기도 공급 활용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수원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원시 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확충

■ 정책내용

- 제한적이지만, 중앙정부 공급시 수원시 재량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주거지원 제한적 재량권을 활용한 공공주택 확보
  - 지자체는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행복주택 등 지자체가 우선공급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앙정부 공급물량의 제한적 활용 유형



■ 기대효과

- 수원시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공적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 연차별 추진 계획

- (단기) 유형별 사업 가능부지 검토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 대상 가능지 검토	○	○			
○ 사업 추진		○	○	○	○

2-4	도시내부 저이용, 노후시설 복합 개발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의 확충, 노후주거지의 쇠퇴방지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복합 개발

■ 정책내용

- 노후주택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연계한 복합개발 추진(민간-공공 복합개발)
- 공공보유 부지 및 건축물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 정책목표

- 낙후,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설치 필요 지역
- 임대주택과 공공·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주거환경 개선 추진

❖ 정책 수단

- (민간 노후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민간-공공 협력 임대주택 확보
- (공공부지, 민간연계)
  - ✓ 공공시설(부지) 단독 복합개발
  - ✓ 공공시설 + 인접한 민간의 주택 등, 민간-공공 협력 복합개발



■ 기대효과

- 노후주거지 재생과 연계 다양한 유형의 공적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 연차별 추진 계획

- (단기) 유형별 사업 가능부지 검토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 사업가능지와 유형 검토	○	○			
○ 관계자 협의 등 추진 가능성 점검		○	○		
○ 사업 추진			○	○	○

2-5	생애주기 순환형 주거단지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한 주거 형태를 단지내 구축하여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 & 집 걱정 없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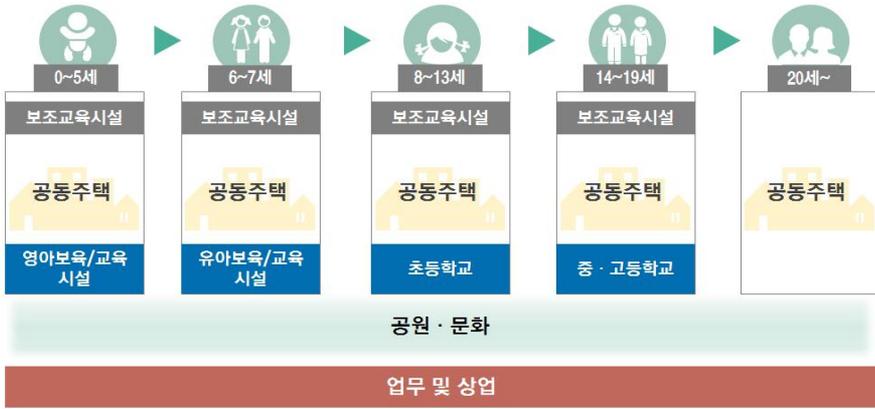
■ 정책내용

- 지속가능 도시 구체화 : 수원형, 안심 희망 주거단지 조성 시범사업
  - 일자리, 주거, 교육 등 3개 핵심분야를 종합한 주거단지 조성
  - 교육관련 시설 입주 시 임대료를 반값으로 낮추어 주고 낮은 학원비 책정 유도
  - 신혼부부의 생애주기 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 형성 유도
  - 지역내 주민들이 공동체 형성,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
  - 필요한 시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합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



-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한 주거 형태를 단지내 구축하여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자녀 연령에 따른 주거 순환 모형



■ 기대효과

-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와 다양한 연령층의 교육수요 고려, 양질의 교육과 저렴한 교육비 책정 유도
- 접근성을 높여 주거와 자녀교육문제를 안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

■ 연차별 추진 계획

- (단기) 유형별(도심내, 신규개발 등) 사업 가능부지 검토, 대상지의 사업성 검토 등. 추진 기반마련
- (중장기) 2023년 이후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하여 추진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 사업가능지와 유형 등 검토	○	○			
○ 시범사업 추진			○		
○ 보완,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 시행			○	○	○

<b>2-6</b>	<b>사회주택, 공동체주택 공급과 지원</b>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주거안정과 주거문화-공동체(communitiy) 증진

■ **정책내용**

- 해외 사례
  - 지방정부가 공급계획 수립, 중앙정부는 자원배분 등 지원 담당
  - 지자체가 관할구역의 시장상황 및 수요를 감안하여 공급량, 공급목표 등을 설정
  - 해외 주요 대도시는 연간 4천~7천호 내외의 공급계획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신규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사회주택으로 지속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
  - 대도시별 연간 공급량 목표는 런던 6천~7천 호, 파리 7~7.5천 호, 암스테르담 3.5천~4천호로 설정

해외 주요 대도시별 공급 목표

구분	주요내용	관련계획
영국 런던	2008년-2016년간 10만 호의 부담가능 주택 공급 목표, 장기적으로는 20년간 34만호 공급(분양:임대=6:4)	런던 주택전략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신규주택의 30%는 사회주택으로 공급하여 연 3.5천-4천 호 공급수준 유지	주택비전
프랑스 파리	연 1만 호의 주택공급량 중 7천-7.5천 호를 사회주택으로 공급 사회주택 재고율을 2025년 25%, 2030년 30%로 단계적 상향	주택 지역계획

출처 : 서울특별시(2016) 및 김리영외 (2018)의 내용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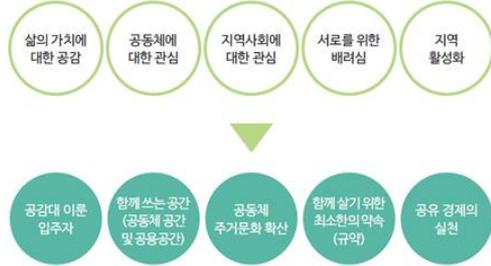
○ 정책수단

- 사회적 기업, 사회주택 사업자 지원을 통해 공적주택, 공유주택(Share house), 공동체 주택 공급하며, 입주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
- 셰어하우스 조성시 디자인 강조해서 이슈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 신진건축사나 공공건축가, 사회적 기업과 연계
- 공동체주택 정보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의식 개선

- 주거안정과 주거문화·공동체(communit) 증진
  - 공동체의 가치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거주,
  - 커뮤니티 공간 또는 프로그램 등 운영 공동체 활성화 기여
- 함께 살아 좋은 집 with 수원, 수원팍

입주민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입주민 유형	프로그램 예
청년·창업인	취업 커뮤니티, 창업 프로그램 등
대학생·노인	동아리 활동, 노인 의료지원 프로그램 등
가족·여성	공동육아 및 공동보육 프로그램 등
기타	코디네이터 지원 및 관리규약 제정



- 수원시 건설, 매입형
  - 입주민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형 공공주택, 셰어하우스 건설
  -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청년층들이 주거+협업공간 (셰어하우스) 조성하여 시너지 극대
- 수원시 지원형
  - 재정, 기금 등 지원, 기타 인센티브를 통한 사회적기업, 사회주택사업자 등이 공급

▪ 기대효과

- 다양한 가치, 사회적 기여 확산과 더불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주거에 기여

▪ 연차별 추진 계획

- (단기)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검토 및 지원방안 등 심층연구 등 기반조성
- (중장기) 유형별 사업 가능성 검토 후 시범사업 추진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 추진여건 검토	○	○			
○ 조례 등 지원기반 마련			○		
○ 시범사업 후 확대 시행			○	○	○

### 3. 주거복지 지원기반 시스템 구축

■ 정책목표

- OECD 수준 이상 공공임대 확보(공공임대주택 4%→8%)를 위한 기반마련
  - 공공임대주택 2018년 기준 4%수준, 가구증가 추세&주택보급률 100%유지 가정
  - 2022년 OECD수준 8%를 달성 위해 2만4천호 추가확보 필요

■ 정책수단

- ① 시민의 니즈 점검 등 모니터링
- ② 정보제공 등 ‘웰컴투 수원’ 프로젝트
- ③ 기관별 역할 강화(수원시, 공사, 지속가능도시재단, 수원시정연구원)



■ 추진 방향

- (단기) 2020년까지, 수원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기반 조성

■ 기대효과와 정책적 과제

- 수원시 특성을 감안한 주거정책 시행 기반 마련
- 수시로 변화하는 시민의 주거니즈 확인과 적절한 정책 수행 기반 마련
  - 종합적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시민니즈의 확인 및 보안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수행 필요
  - 기반이 되는 제도의 개선과 컨트롤 타워로서의 수원시 역할 강화
  -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기능 강화

3-1	시민 주거니즈와 주택시장 모니터링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 정책목표

- 주거실태조사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주거니즈와 정책만족도, 개선 방향 마련
- 주택가격, 전세가 등 가격상승 등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의 사전 검토와 대응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 ■ 정책내용

- 배경
  - 주거문제의 중요성 부각 -> 정책적 대응 필요성 증가
  - 정책환경, 시장여건 변화 -> 주거지원 대상의 여건 변화-> 주거니즈 변화 -> 정책적 대응 필요

##### ① 주거실태조사

- 수원시 주거복지 향상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반가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
  - 주거부담수준(RIR, PIR등), 월세전환율 등 주요 주거 관련 지표 지수화
  - 시민들의 주거니즈, 정책 수요와 평가 등
  - 수원시민의 주거수준, 주거니즈, 정책수요와 평가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격년) 실시
- 특수 정책대상(청년층, 1인 가구, 노인층, 다문화가구 등)별 수시 주거실태조사 실시
  - 청년주거실태조사의 경우,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는 미반영, 청년기본 조례와 연계 등 검토 후 추진
  - 수원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한 상황.
  - 특히,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내에서 청년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음(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제6조)
  - 위 조례의 제15조에 따르면 청년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수원시 청년주거실태조사 및 수원시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 안정적 지속적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

② 주거종합계획(5년 단위) 및 연차별 계획 수립(매년)

- 수원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수원시 주거 종합계획’ 수립
  -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3조에서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원시주거복지시행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
  - 실질적이며 적절한 주거복지사업의 실행을 위한 연차별 전략/예산 계획 등 수립
- 추진사례
  - 성남시(2015년), 성남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연구
  - 전주시(2017년),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 수원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수원시 주거정책의 비전과 목표, 주택수요 추정(자가/임대), 주거복지 시책,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연차별 사업 및 예산 등
  - 추진방안
    -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통해 보완
    -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원시 주거복지 시책 점검, 보완,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수행(주거실태조사와 연동하여 진행)

③ 인구 및 주택시장 동향(분기 또는 반기별) 파악

- 인구동향(출산, 사망, 결혼, 전입, 전출, 순이동 등), 이동현황을 분석, 시사점 제시
- 지역별 가격변동(매매, 전세, 월세),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주요이슈, 도시재생 과 관련한 지역, 기타 중요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사점 제시

■ 기대효과

- 시민니즈를 토대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 마련에 기여
- 주거관련 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 정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 (격년)			
○ 특수가구 대상 수시 주거실태조사	○ (대상별)	○	○		
○ 인구 및 주택(부동산)시장 동향	○ (반기별)	○	○	○	○

<b>3-2</b>	<b>웰컴투 수원 프로젝트</b>	<b>단기(~2020)</b> <b>중기(~2030)</b> <b>장기(~2045)</b>
------------	--------------------	--

■ **정책목표**

- 수원시 전입자, 이주 희망자에게 필요 정보 제공하는 정보체계 구성
- ‘수원앱’ 제작(또는 니뉴얼), 이주센터 운영 및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정책내용**

- 수원시 정보플랫폼 조성
  - 주거, 공원, 공공시설, 어린이집 등 정보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정보(어느 학원, 어린이집이 좋더라, 어느 시설이 혜택이 좋더라 등)까지 제공
  - 결혼 관련 업체(예식장, 예단, 가구 등) 가격 비교라든지, 공공임대주택, 전세 등 주택 정보 통합하여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성
  - 육아나 교육 정보 등 세대별로 구분하여 필요 정보 제공하는 정보체계 구성



■ **기대효과**

- 수원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다양한 소통 기회 제공

■ **연차별 추진 계획**

-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검토 및 지원방안 등 심층연구 후 시범운영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 사업 검토 및 점검	○	○			
○ 사업 추진		○	○		

<b>3-3</b>	<b>기관별 역할 강화</b>	<b>단기(~2020)</b> <b>중기(~2030)</b> <b>장기(~2045)</b>
------------	------------------	--

■ **정책목표**

- 수원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정책내용**

- 주거복지과 신설
  - 현재 수원시 주거복지팀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 증가하는 주거복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필요
  - 매입임대 및 공공임대 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체계 마련(주거복지과(3개팀))를 신설하여 주거복지 전담
- 수원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본부 신(또는 주택공사 신설)
  - 개발사업본부 이외 매입임대 등 전문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운영, 관리(주택 및 입주자)하기 위한 지원부서의 신설과 인력확충
- 지속가능도시재단
  - 주거복지센터는 센터장 포함 3인으로 구성, 125만 시민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중간 역할 수행에 한계. 기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확충
- 수원시정연구원
  - 시민의 주거니즈 모니터링(정기 주거실태조사), 주거정책 지원(주거종합계획 및 연차별 계획 등) 정기적 연구 수행에 따른 연구인력 확충

■ **기대효과**

-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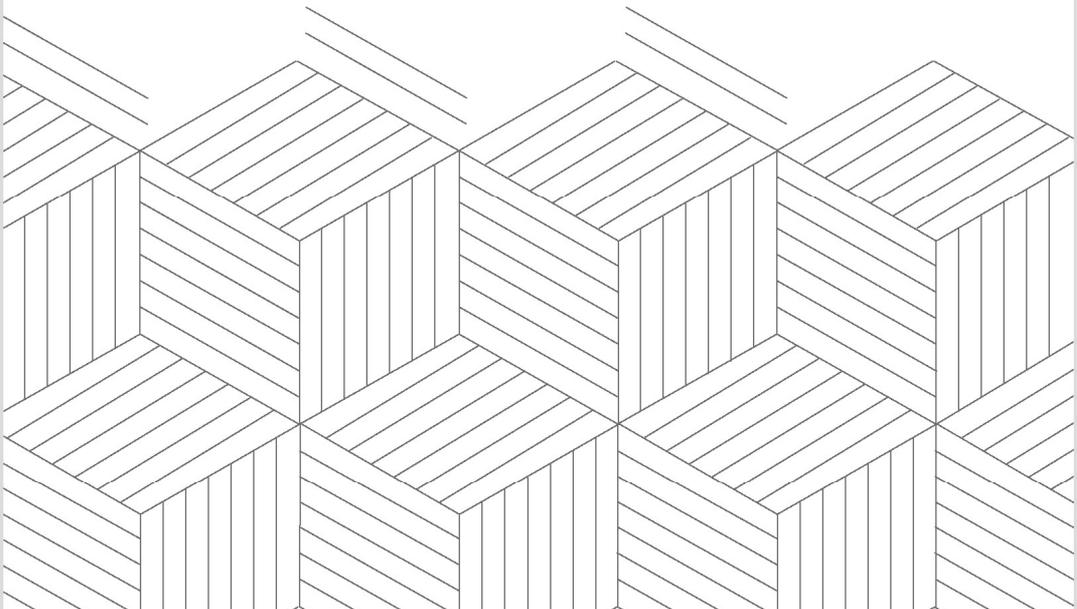
■ **연차별 추진 계획**

- (단기) 수원시 주거복지 추진 사업과 연계한 기반조성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				
○ 기관별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 강화 등		○			

# 제4장 돌봄 및 교육 분야

- 제1절 돌봄 및 교육분야 여건
- 제2절 국내외 정책 및 사례
- 제3절 돌봄 및 교육분야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 제4장 돌봄 및 교육분야

### 제1절 돌봄 및 교육분야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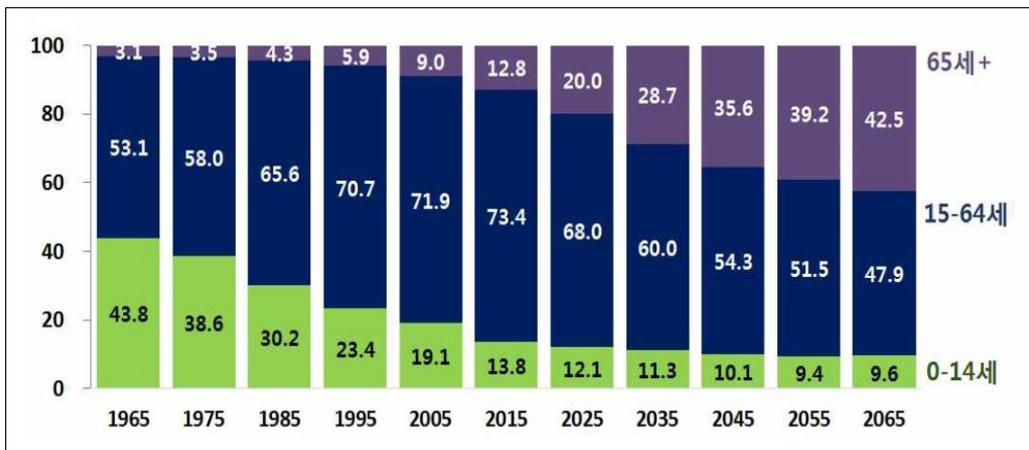
#### 1. 돌봄분야

##### 1) 돌봄 및 사회환경의 변화

###### ■ 인구의 고령화

-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속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25년 20%, 2045년 35.6%, 2065년 42.5%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통계청, 2016)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현상은 사회전반적인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김중훈, 2018)

〈그림 4-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현황 및 예측(1965-2065)



자료 :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 2015-2065년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 이슈의 변화
  - 가족구조 및 가치관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동안 가족이 담당하던 돌봄의 역할 및 주체가 변하고 있음(장혜경 외, 2013). 이로 인해 돌봄과 관련된 주체를 국가 차원의 대응과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국가주도의 돌봄서비스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최성일, 2012)
  - 양육시기 자녀의 돌봄정책은 사회적 지원확대를 통해 자녀돌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부모는 자녀돌봄과 생업의 균형을 실현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받고, 남녀가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희망함(장혜경 외, 2013)
  - 노인의 돌봄과 관련해서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커뮤니티케어’ 등의 국가와 지역 사회 돌봄체계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다원화되는 돌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적 돌봄 방안
  - 일-생활 균형,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대안적 돌봄공동체 조성 등 돌봄에 대응하는 사회조건 재구축과 환경조성에 보다 중심을 두고 사회주체들 간의 협력과 자원의 균형적 분배를 고려하면서 역할과 공급량의 조정이 필요함(장혜경 외, 2013)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돌봄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표 4-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의 변화

분야	환경	가족과 돌봄의 변화
인구	노인세대의 분리 및 노인인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의 고령화로 가구규모 축소와 독거노인가구 및 부부노인가구가 증가</li> <li>○ 노인세대와 성인자녀세대의 분리 가속화 및 노인들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높아짐</li> <li>○ 동년배 노인(비혈연)으로 구성된 공동체 가구 증가 예상</li> </ul>
	혼인 및 양육의 분리와 자녀애착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관계의 다양화로 ‘출산’의 전제조건으로서 제도적 혼인의 의미는 점차 퇴색함</li> <li>○ 이혼 한부모 가족, 미혼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등이 늘어나 다양한 양육형태가 형성됨</li> <li>○ 저출산 경향에 따라 자녀수가 적어지면서 자녀에 대한 애착은 더욱 강화됨</li> </ul>
경제	맞벌이가족 증가와 일가정 양립 욕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남성배우자에 대한 자녀양육 참여 요구가 강화되며, 자녀 돌봄의 역할을 부모가 아닌 사회적 역할로서 인식 확산 및 욕구 증대</li> <li>○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동등하게 부여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li> </ul>

분야	환경	가족과 돌봄의 변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에 따른 생계형 근로 증가와 돌봄 공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취약 가구(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저소득 1인가구, 노인가구 등)의 생계형 노동참여는 가정 내 돌봄공백 유발</li> <li>생계형 고령자 근로의 증가는 자녀세대에 대한 돌봄지원 역할 감소</li> </ul>
사회	돌봄방식의 다양화 및 지역공동체 역할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부문의 발전된 맞춤형료와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킴</li> <li>영유아, 노인 돌봄 등에 대한 정부의 보육·돌봄제도 서비스 확대 개편 요구가 증가하며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 됨</li> <li>홈 네트워킹 기술 발달로 스스로 돌보기 어려웠던 노약자,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을 감소시킴 (AI 기반 케어 시스템, 돌봄 로봇 등)</li> </ul>

자료 : 장해경 외(2013).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Ⅲ)

## 2) 수원시 돌봄 여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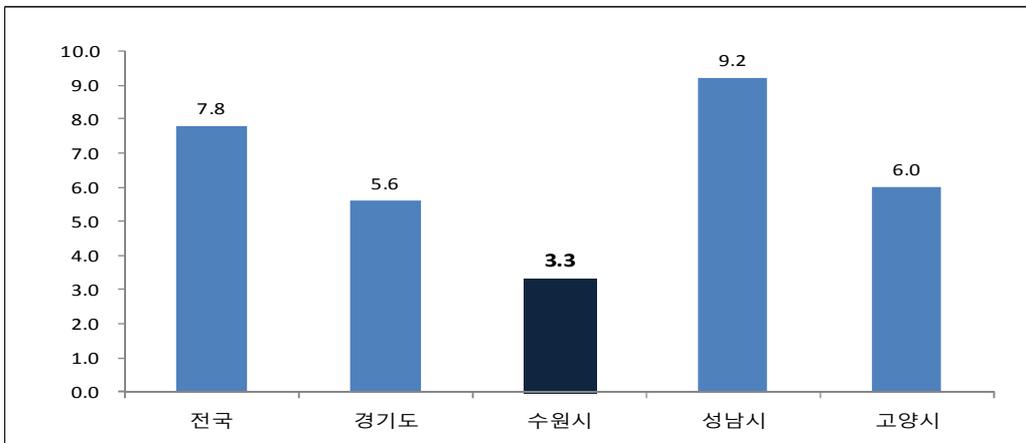
### (1) 영유아

#### ■ 수원시 영유아 보육 현황

- 2017년 12월 말 기준, 수원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3.3%로 전국(7.8%)과 경기도 평균(5.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림 4-2〉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2017년)

(단위 : %)



주 : 비율 = (국공립어린이집 수 /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7년 보육통계」

〈표 4-2〉 지역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17년)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전국	40,238 (100.0)	3,157 (7.8)	1,392 (3.5)	771 (1.9)	14,045 (34.9)	19,656 (48.8)	164 (0.4)	1,053 (2.6)
경기도	11,825 (100.0)	660 (5.6)	66 (0.6)	128 (1.1)	3,854 (32.6)	6,808 (57.6)	67 (0.6)	242 (2.0)
수원시	1,153 (100.0)	38 (3.3)	4 (0.3)	8 (0.7)	364 (31.6)	712 (61.8)	4 (0.3)	23 (2.0)
성남시	692 (100.0)	64 (9.2)	1 (0.1)	8 (1.2)	184 (26.6)	386 (55.8)	6 (0.9)	43 (6.2)
고양시	855 (100.0)	51 (6.0)	3 (0.4)	2 (0.2)	222 (26.0)	544 (63.6)	8 (0.9)	25 (2.9)

주 :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이상 지역만 추출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7년 보육통계」

- 수원지역의 취약보육 관련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138개소, 24시간 6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영아전담, 휴일, 방과후 어린이집은 운영되지 않고 있어 취약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표 4-3〉 취약보육 어린이집 설치 현황(2017년)

(단위 : 개소)

구분	영아전담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전국	469	8,245	252	306	268
경기도	46	1,912	54	31	13
수원시	0	138	6	0	0
성남시	0	82	1	7	0
고양시	3	122	2	0	0

주 :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이상 지역만 추출

자료 1 : 보건복지부(2018). 「2017년 보육통계」

2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info/main.jsp>)

■ 수원시 장애영유아 보육 현황

- 수원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영유아(0~5세) 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다 2017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국,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도 동일한 추세로 나타남
- 수원시 장애영유아는 2013년 200명, 2014년 219명, 2015년 216명, 2016년 226명, 2017년 215명으로 나타남

〈표 4-4〉 연도별 등록 장애영유아 수(0~5세)

(단위 : 명)

구분	전국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2013년	7,442	1,978	200	161	149
2014년	7,657	2,065	219	146	152
2015년	8,122	2,149	216	148	154
2016년	8,598	2,329	226	167	166
2017년	8,983	2,370	215	156	162

주 :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이상 지역만 추출

자료 : 보건복지부(2013~2017). 「장애인 등록 현황」

- 2017년 기준, 수원시지역에서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14개소로 총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어린이집 대비 1.3%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의미함
- 수원시 장애 영유아 관련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수가 적은 성남시(30개소)와 고양시(21개소) 보다도 낮은 상황임

〈표 4-5〉 지역별 장애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현황(2017년)

(단위 : 개소, %)

구 분	전체 어린이집	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전국	40,238	40,238	2.79	178	0.44	946	2.35
경기도	11,825	11,825	2.62	20	0.17	290	2.45
수원시	1,153	1,153	1.30	1	0.09	14	1.21
성남시	692	692	4.48	1	0.14	30	4.34
고양시	855	855	2.57	1	0.12	21	2.46

주 :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이상 지역만 추출

자료 1 : 보건복지부(2018). 「2017년 보육통계」

2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info/main.jsp>)

■ 수원시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

- 2016년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의 수검률은 수원시가 75.8%로 전국(71.9%)과 경기도(70.8%)보다 높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인 ‘영유아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 수원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율은 2014년 74.1%, 2015년 73.0%, 2016년 75.8%로 나타남

〈표 4-6〉 지역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율 현황(2014~2016년)

(단위 :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상자	수검자	비율	대상자	수검자	비율	대상자	수검자	비율
전국	3,162,268	2,206,304	69.8	3,134,526	2,178,441	69.5	3,128,947	2,249,928	71.9
경기도	839,250	583,578	69.5	826,474	563,709	68.2	810,041	573,257	70.8
수원시	78,322	58,049	74.1	79,448	57,964	73.0	79,088	59,911	75.8

주 : 비율 = (수검자/대상자) × 10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4~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 수원지역의 월령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4년 18~24개월, 2015년 30~36개월, 2016년 9~12개월이 가장 높음. 또한 9~12개월에서 5.7%로 가장 많이 증가한데 반해 18~24개월, 54~60개월, 66~71개월에서는 오히려 감소함

〈표 4-7〉 수원시 월령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 현황(2014~2016년)

(단위 : 명, %)

구분	계	4~6 개월	9~12 개월	18~24 개월	30~36 개월	42~48 개월	54~60 개월	66~71 개월
2014년	74.1	80.4	76.3	81.3	82.7	75.4	66.6	54.1
2015년	73.0	79.7	78.9	81.0	80.7	73.2	61.7	51.7
2016년	75.8	82.1	81.5	86.0	81.9	76.5	63.8	55.5
증감률	2.0	2.1	6.8	5.8	-1.0	1.5	-4.2	2.6

주 1 : 비율 = (수검자/대상자)×100

2 : 증감률은 2014년 대비 2016년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4~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지역의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 결과에서는 ‘주의’는 84.8% 증가한데 반해 ‘양호’는 -1.7% 감소하여, 장애 조기발견체계 구축이 요구됨

〈표 4-8〉 수원시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 현황(2014~2016년)

(단위 :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계	58,049 (100.0)	57,964 (100.0)	59,911 (100.0)	3.2
양호	53,131 (91.5)	50,755 (87.6)	52,236 (87.2)	-1.7
주의	2,535 (4.4)	4,141 (7.1)	4,685 (7.8)	84.8
정밀검사필요	2,383 (4.1)	3,068 (5.3)	2,990 (5.0)	25.5

주 : 증감률은 2014년 대비 2016년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4~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 (2) 아동(초등학교 방과후)

### ■ 아동(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현황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은 2004년 정부정책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2009년 ‘종일 돌봄교실’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초등돌봄교실’ 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확대됨
-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별도공간(전용 또는 겸용교실)에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임(김미정, 2018)
- 수원시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2017년 초등학생 수

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2014년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는 4,840명에서 2017년 4,036명으로 감소함

〈표 4-9〉 수원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참여 인원(2014~2017년)

(단위 :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초등학생 수 (1~3학년)	34,220	35,382	35,290	34,339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	4,840	4,464	2,196	4,036
비율	14.1	12.6	6.2	11.8

자료 1 : 교육부(2015~2017). 「교육통계연보」

2 : 수원시 내부 자료

■ 지역아동센터 돌봄 현황

- 지역아동센터는 1985년 도시 빈민가나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아동의 돌봄과 보호, 학습지도 등을 위한 공부방을 시작으로 하였으나, 2004년 법제화되면서 지역 내 대표 아동복지시설로 자리잡음(김미정, 2018)
- 2013~2016년간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52개소에서 2016년 59개소로 3년간 7개소 증가함.
- 그러나 이용 아동은 2013년 1,543명에서 2016년 1,593명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음

〈표 4-10〉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 현황 및 이용 아동 수(2013~2016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전국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	2013년	4,061	728	52	48	40
	2014년	4,059	751	56	50	39
	2015년	4,102	757	59	49	37
	2016년	4,107	763	60	51	3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2013년	109,066	20,969	1,543	1,392	1,074
	2014년	108,936	21,481	1,602	1,404	1,050
	2015년	109,661	21,682	1,657	1,374	1,031
	2016년	106,668	21,111	1,593	1,390	970

주 :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이상 지역만 추출

자료 : 보건복지부(2013~2016).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 (3) 노인(치매노인)

#### ■ 수원시 치매노인 현황

- 수원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6년 기준 100,610명으로 수원시 전체 인구 대비 8.5%이며, 이는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11.0%, 2030년에는 20.5%, 2045년에는 34.6%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노인 인구 증가 및 연령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수원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치매노인 비율은 2016년 8.5%에서 2020년 11%, 2030년 20.5%, 2045년에는 3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돌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

〈표 4-11〉 수원시 노인인구 및 치매노인 수 예측 현황

(단위 : 명, %)

구분	수원시 전체 인구수 (A)	수원시 노인인구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D)	수원시 예측 치매노인 수 (B×D/100)
		인원(B)	비율(C) (B/A×100)		
2016년	1,180,618	100,610	8.5	9.6	9,654
2020년	1,223,496	134,152	11.0	10.4	13,952
2030년	1,295,135	265,818	20.5	10.0	26,582
2040년	1,325,741	407,359	30.7	11.9	48,476
2045년	1,320,397	457,409	34.6	15.06	68,886

주 : 연앙인구는 年央인 7.1일의 인구를 의미하며 연초(1.1일)와 연말(12.31) 인구의 산술평균 개념을 사용하여 계산된 인구로서 소수점 이하 자리수도 반올림 없이 그대로 사용

자료 1 : 수원시정연구원(2016). 「2045 수원시 인구추계 모형 개발 및 예측연구」

2 :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2017). 「2017 대한민국 치매현황」

3 : 보건복지부(2015). 「치매종합관리계획(2016~2020) 수립 연구」

4 : 2016년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청, 2017)

2 : 치매유병률은 보건복지부(2015). 「치매종합관리계획(2016~2020) 수립 연구」

- 2016년 기준, 수원시의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유병률은 9.6%(9,654명)로 경기도의 평균 유병률인 9.7%보다 0.1% 낮은 수준임
- 수원시 4개 구별 치매환자는 장안구(2,939명), 권선구(2,788명), 팔달구(2,106명), 영통구(1,82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치매 유병률은 장안구(10.0%), 영통구(9.8%), 권선구(9.4%), 팔달구(9.1%)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2〉 수원시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및 유병률(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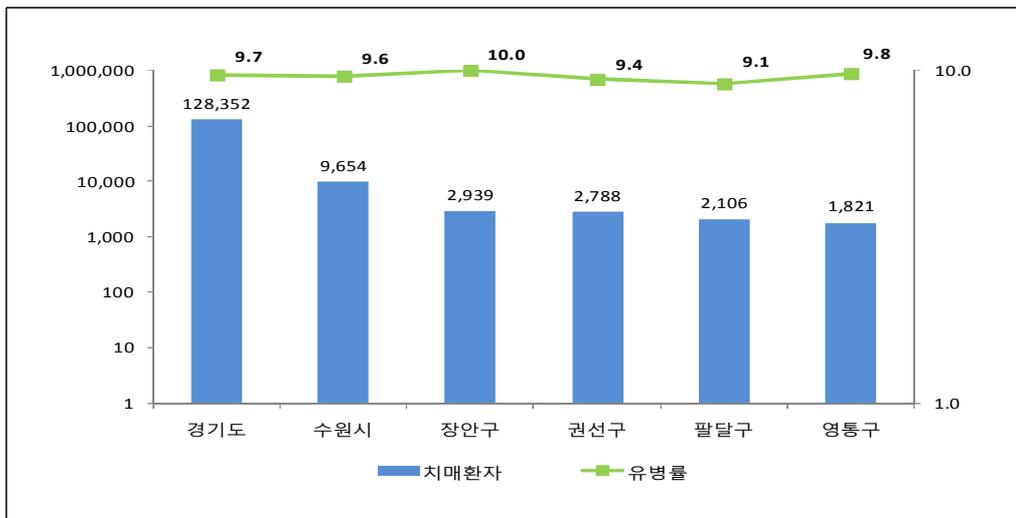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치매환자	128,352	9,654	2,939	2,788	2,106	1,821
유병률	9.7	9.6	10.0	9.4	9.1	9.8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 대한민국 치매현황」

〈그림 4-3〉 수원시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및 유병률(2016년)

(단위 : 명, %)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 대한민국 치매현황」

- 2016년 기준, 수원지역의 경도인지 장애 진단자는 22,456명으로 경기도 진단자인 296,802명인 대비 7.6%로 나타남
  - 경도인지 장애자는 동일연령에 비해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의미함
- 수원시 4개 구의 경도인지 장애 진단자는 권선구가 6,608명(2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안구 6,584명(29.3%), 팔달구 5,102명(22.7%), 영통구 4,162명(18.5%)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3〉 경기도인지 장애 진단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65세 이상 경도인지 장애 진단자	기억상실성		비기억상실성 다중영역	
		단일영역	다중영역	단일영역	다중영역
경기도	296,802	114,500	107,853	68,026	6,401
수원시	22,456 (7.6)	8,792	8,135	5,074	453
장안구	6,584 (29.3)	2,543	2,384	1,519	138
권선구	6,608 (29.4)	2,608	2,394	1,474	131
팔달구	5,102 (22.7)	1,999	1,871	1,129	102
영통구	4,162 (18.5)	1,642	1,486	952	82

주 1 : 수원시 65세 이상 경도인지 장애 진단자 비율은 경기도 대비 비율을 의미함

2 : 수원시 4개 구 비율은 수원시 전체 대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 ■ 수원시 치매관련 기관 현황

- 치매관련 지원 기관은 치매상담콜센터, 치매상담센터, 지역치매지원센터, 장기요양기관, 치매 관련 병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구분됨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경기도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정부시 1개소, 부천시 4개소, 안산시 2개소, 용인시 2개소, 화성시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치매수급자에게 인지 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치매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보건복지부, 2018)

〈표 4-1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 명, %)

계	의정부시	부천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10	1	4	2	2	1

주 1 : 수원시 65세 이상 경도인지 장애 진단자 비율은 경기도 대비 비율을 의미함

2 : 수원시 4개 구 비율은 수원시 전체 대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8 노인복지시설 현황(2017.12.31.기준)」

- 수원시의 치매관련 콜센터 상담건수는 2016년 기준 1,115건으로 치매 환자 천 명당 평균 115.5건으로 나타났으며, 전국(85.6건), 경기도(63.2건) 보다도 이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
- 수원시는 지역치매지원센터 1개소, 치매상담센터 4개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8개소,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치매지원센터는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지역유관 자원 연계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함을 목적함

〈표 4-15〉 지역별 치매관련시설 현황(2016년)

(단위 : 건, 명)

구분	치매상담콜센터		치매상담 센터	지역 치매지원 센터	기타기관		
	콜센터 상담건수	치매환자 1천명 당 평균 이용 건수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치매환자 가족 휴가지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국	56,648	85.6	227	52	4,454	125	31
경기도	8112	63.2	42	7	482	11	3
수원시	1,115	115.5	4	1	18	2	-
성남시	1,153	115.1	3	1	20	-	-
고양시	661	57.6	3	-	34	-	-

주 :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이상 지역만 추출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 수원시의 치매환자 1천명당 기관수는 28.9개소로 성남시(22.4개소) 보다는 많지만 고양시(38.1개소) 보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재가급여 기관은 207개소, 시설급여 기관은 72개소로 확인됨

〈표 4-16〉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및 이용 현황(2016년)

(단위 : 명, 개소)

구분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A)	치매환자 1천명당 기관수 (B/A×1,000)	급여유형					
			전체		재가		시설	
			기관 (B)	이용자	기관	이용자	기관	이용자
전국	661,707	29.3	19,398	214,360	14,211	113,246	5,187	101,114
경기도	128,352	35.5	4,562	46,381	2,963	21,862	1,599	24,519
수원시	9,654	28.9	279	3,579	207	1,576	72	2,003
성남시	10,014	22.4	224	3,426	171	1,877	53	1,549
고양시	11,475	38.1	437	3,976	279	1,949	158	2,027

주 1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로 분류됨  
 2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됨  
 3 : 인구 100만 이상 지역만 추출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 수원지역의 치매 관련 병원은 요양병원 16개소, 병원은 721개소로 나타남
- 수원지역의 치매 협약병원 개수는 수원시가 4개소로 성남시(18개소), 고양시(18개소) 보다 적으며, 협약병원 비율도 전국(2.1%), 성남시(2.4%), 고양시(3.2%) 대비 수원시는 0.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임

〈표 4-17〉 지역별 치매 관련 병원 현황(2016년)

(단위 : 개소, %)

구분	요양병원	병의원	치매 협약병원	협약병원 비율
전국	1,428	32,147	677	2.1
경기도	283	6,748	122	1.8
수원시	16	721	4	0.6
성남시	13	753	18	2.4
고양시	27	560	18	3.2

주 1 : 치매예방교육 = 치매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2 : 협약병원비율 = (병의원 수/협약병원 수)×100

3 : 인구 100만 이상 지역만 추출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 ■ 수원시 치매관련 검진 현황

- 수원시의 치매조기검진 현황은 2016년 기준 선별검사는 수검 대상자 158,000명 대비 수검자가 13,227명이고, 수원시의 선별 수검률은 6.0%로 전국(15.1%), 경기도(11.0%) 보다 낮음
- 정밀검진률도 전국(44.3%), 경기도(28.3%)보다 수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치매관련 검진에 따른 집중적인 관리 강화가 요구됨

〈표 4-18〉 지역별 치매조기검진 현황(2016년)

(단위 : 명, %)

구분	선별검사			정밀검진			감별검진	
	수검대상자 (A)	수검자 (B)	선별 수검률 (B/A×100)	수검대상자 (C)	수검자 (D)	정밀 검진률 (D/C×100)	수검자 (E)	감별 검진률 (E/D×100)
전국	10,672,409	1,611,920	15.1	151,826	67,222	44.3	27,188	40.4
경기도	2,027,196	223,677	11.0	26,128	7,398	28.3	5,229	70.7
수원시	158,004	13,227	6.0	2,348	322	13.7	303	94.1
성남시	164,558	15,259	4.8	1,845	988	53.6	556	56.3
고양시	163,130	17,839	10.9	1,584	249	15.7	210	84.3

주 : 60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며, 인구 100만 이상 지역만 추출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 2016년 기준, 수원지역의 60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9,962명인데 치매등록 관리 대상자는 1,892명으로 치매환자 등록률은 19.0%로 나타남. 이는 전국(47.6%), 경기도(37.8%), 성남시(37.4%), 고양시(29.6%) 대비 매우 낮은 수 치임

〈표 4-19〉 지역별 치매환자 등록 현황(2016년)

(단위 : 명, %)

구분	추정 치매환자 수	치매상담센터 치매등록관리 대상자 수	치매환자 등록률
전국	679,810	323,859	47.6
경기도	132,203	49,973	37.8
수원시	9,962	1,892	19.0
성남시	10,327	3,858	37.4
고양시	11,770	3,485	29.6

주 : 추정 치매환자 수 및 치매상담센터 관리대상자 수는 만 60세 이상을 의미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 2. 교육분야

### 1) 사회환경 변화와 평생교육의 중요성

- 사회환경 변화와 평생교육
  -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대비 20% 이상의 초고령시대(통계청, 2016)가 예상되는 한국은 이와 함께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기술 변화의 대응을 위하여 이전과는 다른 해결책을 요구받고 있음
  - 사회와 기술의 변화가 수요 및 공급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관계라는 관점에서 향후 교육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를 모색해야 함(홍영란 외, 2017)
  -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재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평생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임
  - 평생교육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업으로써 지식기반사회에서 국민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필요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음(김태준 외, 2016)
  - 미래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일과 교육의 진부화(Obsolescence) 속도는 점점 빨

라지고, 기존 교육의 유효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제는 이모작 평생교육이 아닌 다모작 평생교육이 요구되고 있음(이정훈 외, 2018)

- 과거에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에 따라 평생직업을 정하여 평생직장에 근무하였으나 과거 100년의 변화는 이제 10년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각각의 기술들이 융합되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급속하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간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언제든지 새로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능력(Learn how to learn)’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이정훈 외, 2018).
- 평생교육은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평생 현역으로서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임
- 평생교육은 퇴직을 하더라도 노인교육과 자기개발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부가급여를 수혜할 수 있는 기회이자,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노년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 김태준 외(2016)은 평생교육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가복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평생교육 공급주체와 내용을 다양화 하고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할 것을 제안함
- 향후에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지속적인 일자리의 변화 및 초고령화 시대는 이모작 교육을 넘어 N모작의 교육을 요구하며 평생교육의 수요를 창출하게 되어 액티브에이징(Active Aging) 시대를 위해 평생교육은 중요한 사회 인프라로 그 역할이 요구됨(홍영란 외, 2017)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소득분포에 따른 재분배 기능 약화로 계층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학습기회와 학습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평생학습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투자가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개인의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자기개발 활동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이 필요함

-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 된다면 미래 사회는 지속가능할 것이며, 평생교육은 이제 미래 사회의 필요조건이 될 것임

〈표 4-20〉 미래환경 변화와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미래 환경 변화	변화의 내용	평생교육 필요성과 의의
새로운 기술의 발달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사람의 사회생활과 사고방식이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
사회변동과 직업의 변화	생계유지, 자아실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직업의 내용과 형태가 변화하고, 사회변동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출현	일자리와 직무를 포함한 직업의 형태와 필요능력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미래 직업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
소득불평등 심화	소득분포에 따른 재분배 기능 약화로 계층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제고하고, 학습기회와 학습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필요성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 투자가 급격하게 확대	급격한 고령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자기개발 활동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이 필요
복지 수요 확대	사회보험시스템의 확대요구와 복지프로그램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방안 마련 시급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자체가 복지라는 인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자료 : 김태준 외(2016).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Ⅳ):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 2) 수원시 평생교육 여건 현황

### (1) 수원시 평생교육 관련 현황

#### ■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수원시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는 2005년 6월 제정된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수원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됨
- 본 조례는 크게 제1장(총칙), 제2장(평생교육협의회), 제3장(평생학습관), 제4장(보칙)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의 정의는「평생교육법」의 정의와 그 맥을 같이 함
    - 조례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 법이 2016년 5월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반영되면서, 수원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도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이 2017년 7월 17일에 새롭게 신설됨
- 평생학습도시 수원
- 평생학습도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들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주민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도시를 목표로 교육부에 의해 선정된 도시임
    -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가 해마다 선정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현재, 수원시를 포함한 총 155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됨(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 수원시는 2005년 9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휴먼 평생학습도시 수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배움으로 미래의 번영과 안정,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시민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담긴 ‘평생학습도시 선언문’도 채택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음
  - 또한 수원시는 글로벌 학습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2016년 5월에 ‘유네스코 글로벌 네트워크 학습도시’에 가입함

## (2) 수원시 평생교육 기관

- 수원시 평생학습관
- 수원시 주요 평생교육 기관인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

례」 제13조에 의거하여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1일에 개관하여 '희망제작소'가 위탁 운영하고 있음

- '당당한 삶을 지원하는 배움과 실천의 플랫폼' 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강좌 기획 및 실행, 학습 플랫폼 운영,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사 및 연구개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표 4-21〉 수원시 평생학습관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

구분	사업내용
강좌기획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인문학교 : 시민인문학, 교사인문학, 명사특강</li> <li>○ 거북이공방 : 거북이강좌, 공방특강, 오픈데이, 프로젝트 수업</li> <li>○ 더 느린삶 : 더 느린삶, 커뮤니티 텃밭</li> <li>○ 스마트워크 : 시니어 과정, 창업자 과정, 직장인 과정</li> <li>○ 생활문화강좌 : 음악/미술, 건강/체육, 외국어, 컴퓨터, 어린이, 청소년</li> <li>○ 양성과정 : 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시민기자학교, 전문가양성과정</li> </ul>
학습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학교 : 생애주기별 강좌, 부모학습모임, 부모상담사과정</li> <li>○ 누구나학교 : 누구나학교, 누구나서포터즈</li> <li>○ 뭐라도학교 : 교육사업, 사회공헌사업, 커뮤니티 활동</li> <li>○ 도요새책방 : 학습공동체, 학습컬렉션, 책방 워크숍</li> </ul>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학습마을 : 매탄4동, 화서1동, 조원1동</li> <li>○ 학습자원 연계지원 : 시민교육포럼, 찾아가는학교</li> <li>○ 지역학습 역량강화 : 와글와글포럼, 인큐베이팅센터</li> </ul>
조사 및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행사 및 연구 : 수원지역평생학습 지형조사</li> <li>○ 평생학습 인식제고 : 동향리포트 &lt;와&gt;, 평생학습 캠페인</li> </ul>

자료 : 수원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 수원시 평생교육 관련 기관

- 수원시의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기관은 총 75개소(학교부설, 사업장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시민사회 단체 부설, 원격형태, 평생학습관)임

〈표 4-22〉 평생교육법에 의한 수원시 평생교육기관 현황(2017년)

(단위 : 명)

구분	기관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수원시	75	2,453	151,789	1,556	303

자료 : 수원시(2017). 「수원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 「평생교육법」에 의한 수원시 평생교육기관 수는 75개소로, 성남시(67개소), 고양시(68개소) 보다 많으며,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학교부설(6개소), 사업장 부설(6개소), 언론기관 부설(17개소), 지식·인력개발 형태(10개소), 시민사회단체 부설(13개소), 원격형태(10개소), 평생학습관(4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표 4-2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수 비교(2017년)

(단위 : 개)

구분	계	학교부설	사업장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형태	시민사회 단체부설	원격형태	평생 학습관
전국	4,015	417	424	707	579	515	949	424
경기도	7,33	74	113	146	116	120	114	50
수원시	75	6	15	17	10	13	10	4
성남시	67	4	7	12	20	7	15	2
고양시	68	2	12	13	12	13	15	1

자료 : 수원시(2017). 「수원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주 : 인구 100만 이상의 지역만 추출

- 수원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중 프로그램 수가 가장 많은 주민자치센터는 영통구가 264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안구 228개, 권선구 196개, 팔달구 134개 순으로 나타남

〈표 4-24〉 수원시 구별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2016년)

(단위 : 개)

구분	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계	822	228	196	134	264

자료 : 수원시(2017). 「수원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 (3)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현황

#### ■ 수원시의 등록장애인 현황

- 수원시 등록장애인은 2017년 기준 41,908명으로, 2013년 대비 5.1% 증감률을 보여 경기도(5.3%)와는 비슷한 수치이나, 전국(1.8%) 대비 높은 증감률을 보임

〈표 4-25〉 전국 및 경기도 지차체 등록장애인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전국	2,501,112	2,494,460	2,490,406	2,511,051	2,545,637	1.8
경기도	506,464	508,330	512,882	522,437	533,259	5.3
수원시	39,856	40,406	40,693	41,411	41,908	5.1
고양시	36,132	36,584	37,366	38,215	38,919	7.7
부천시	35,604	35,345	35,204	35,860	36,426	2.3
성남시	35,921	35,479	35,150	35,156	35,312	-1.7
용인시	30,814	31,157	31,444	32,279	33,071	7.3

주 1 : 매년 연말 기준이며, 증감률은 2013년 대비 2017년의 증감률을 의미함

2 :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 5개 지역만 추출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3~2017). 장애인 등록 현황

■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현황

-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장애인야학’이 대표적이거나 이외에도 여러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7)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2016년 기준 경기도에 총 11개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수원시에 3개가 설치되어 있어 경기도 내에서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음

〈표 4-26〉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2016년)

(단위 : 개)

계	수원시	의정부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포천시
11	3	1	1	1	1	1	1	1	1

주 :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 경기도교육청(2017). 「2016년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성과 사례집」

- 수원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령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41~50세(24.6%)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1~40세(19.7%), 51~60세(18%), 21~30세(17.2%), 61~70세(14.8%), 71세 이상(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7〉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령별 참여 비율(2016년)

(단위 : 명, %)

계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122 (100.0)	1 (0.8)	21 (17.2)	24 (19.7)	30 (24.6)	22 (18.0)	18 (14.8)	6 (4.9)

주 : 계는 3개 평생교육시설을 합친 수치임

자료 : 경기도교육청(2017). 「2016년도 평생교육시설 운영 성과 사례집」

## 제2절 국내외 정책 및 사례

### 1. 돌봄분야

#### 1) 돌봄 관련 정책 동향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항에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자녀 양육기 및 고령자의 ‘돌봄 분야’는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임
    - 일반적으로 일·가정 양립지원 등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다양한 돌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공서비스로서의 돌봄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변수정 외, 2018)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 ‘저출산 대응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출산율 하락 추세 반전을 위해 설정한 추진

과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을 제안함

-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시설 부족 등 자녀 양육 환경이 미흡한 점 등을 출산과 양육의 장애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대책에 접근함
- 정책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 가정이고, 보육 지원 내용이 정책의 중심을 이루었음. 고령화 대책 분야의 주요 내용은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을 목표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추진 과제, 1)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2) 건강·의료보장체계 구축, 3) 노인 친화적 사회적 기반 조성을 제시함

####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추진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를 위해서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 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 친화 직장 환경 조성을 강조,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가족 형성 여건 조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 양육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을 제시함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그리고 아동정책 추진 기반 조성 등을 강조하고 2차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부각됨
- 고령화 분야의 주요 정책은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노인 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보건소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지속,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조정 및 자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고령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제도 강화를 제시함
-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은 내용상 자녀 양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자녀가 있는 가족이 정책의 중심이 되는 기조를 보였으며 보육 및 돌봄지원에서 부모의 근로형태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체계가 미흡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

족하며 초등 저학년 돌봄 여건의 미흡 등의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됨 (유혜미 외, 2017)

-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시간과 근로시간 불일치 등으로 취업여성가구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저하 및 사적 양육부담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과 부모의 출퇴근 시간 불일치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돌봄 대체 사교육 유발 등의 양육 부담이 가중 되는 등 정책의 제도적 한계점이 야기됨

####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보육 투자는 양적 확충에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질적 성숙 단계로 도약하고 저출산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 함(대한민국정부, 2016)
- 제3차 계획에서는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과 보육 환경의 개선,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가 제시, 영유아 뿐만 아니라 취학 이후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서비스의 확충 및 질 제고, 아이돌봄서비스는 공공 부문 내실화와 민간 시장관리를 모두 추진하여 수요자의 체감도 제고를 골자로 함
-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이슈에 대하여 정책적 방안을 크게 2가지로 제시함
  - 첫 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으로 가구특성(다자녀, 임신, 조손, 한부모, 가족돌봄, 저소득층 등) 및 부모여건(질병, 장애, 전일제 근무, 구직 등)에 따라 장시간(1일/12시간), 맞춤형(6~8시간) 등의 돌봄서비스를 신설하고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 수요 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 지원도 포함하고 있음
  - 두 번째는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를 목표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확충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2018년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그 궤를 함께 함
- 고령장애에 대한 돌봄지원 정책은 ‘고령자의 건강생활 보장’ 계획에 주로 다루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의 돌봄 정책을 비중있게 제시함

〈표 4-2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대상별 돌봄 정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 선천성 장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건강보험적용 확대</li> <li>-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증후군 등으로 인해 언어습득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등 공공 어린이집 확충 및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180개소, 공공형 150개소, 직장 80개소 신규 확충</li> <li>-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 '16년 30% → '17년 32%</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형, 지자체 협업형 등 다양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20개소 추가설치)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단가 상향(단독 3 → 4억원, 공동 6 → 8억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 이용연령 확대 및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일반 이용연령) 24개월 이하→36개월 이하, (돌보미 양성) 1.9만명→2.1만명</li> </ul> </li> </ul>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돌봄교실 지속 확충 및 내실화(4천명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후돌봄시간 자율 연장 운영(17시~19시),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전환 확대('16년 신축 218실 → '17년 신축 200실, 전환 90실, 리모델링 1,706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 이용연령 확대 및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일반 이용연령) 24개월 이하→36개월 이하, (돌보미 양성) 1.9만명→2.1만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 시범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li> </ul>
노인 (치매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 예방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예방수칙에 대한 인식 제고, 치매예방운동 확산 ('16~)</li> <li>- 치매정보, 돌봄방법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도 가능한 치매 파트너스 확대</li> <li>- 치매고위험군 판정 시 비급여 치매검사 급여화('17), 치매고위험군 (만75세 이상 독거 노인)대상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실시('16)</li> <li>- 치매유병률 조사('16), 치매연구·통계연보 발간('17~), 치매예방 연구*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 및 가족돌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 병설 유도 등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전문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치매노인의 자율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장기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확대 방안 마련</li> <li>- ('17~) 전국 78개의 공립요양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li> </ul> </li> </ul>

자료 1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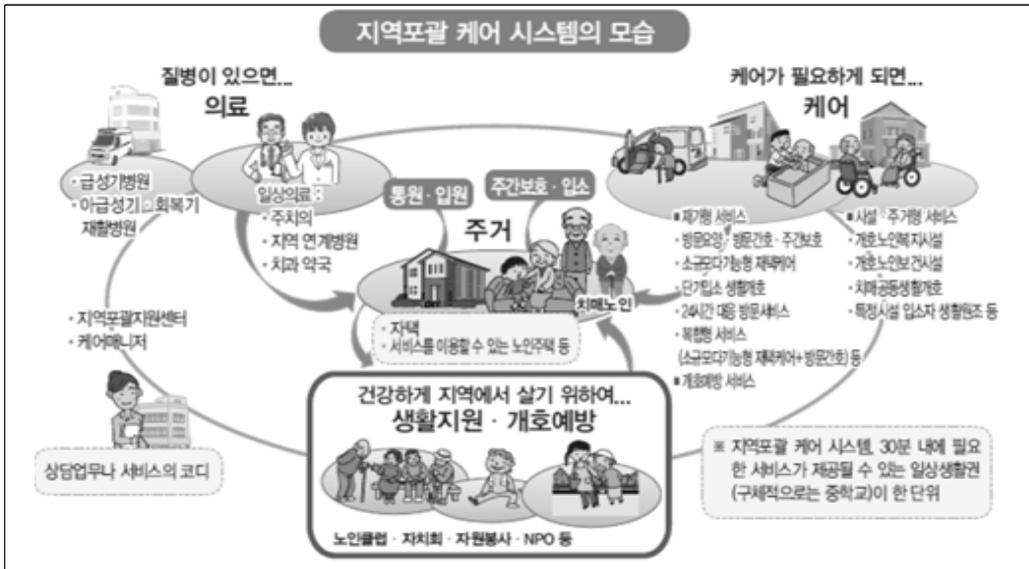
2 : 보건복지부(2017). 「보도참고자료: 정부, 저출산 대책 보다 강력히 추진!」

## 2) 국내외 사례

### ■ 일본(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노인이 거주 가능한 ‘삶의 장’을 토대로 의료와 개호(돌봄), 예방, 생활 지원의 네 가지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전개하여 노인 생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고령자가 중증 케어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익숙한 지역에서 자기만의 삶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케어·예방·주거·생활지원을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실현, 또한 치매노인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치매노인이 지역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이해와 협력 속에서 지역의 자주성과 주체성에 근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 가는 시스템임(조미정 외, 2017)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거주지에서 30분 이내에 보건·의료나 개호서비스 등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 권역을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영리·비영리, 법인·개인 등을 불문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체가 포함됨

〈그림 4-4〉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자료 : 조미정 외(2017). 「부산형 지역노인돌봄체계 활성화 방안」

### ■ 영국(방과 후 학교)

- 영국의 초등학교 방과후 서비스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각종 서비스와 활동을 의미함
- 방과후 서비스의 대상은 모든 아동이지만 주요 관심 대상층은 저소득층 및 교육 소외계층이며, Every Child Matters(모든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 제공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개혁 차원의 국가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정익중 외, 2009)
- 영국의 방과후 정책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가의 정책 중의 하나로서, 저소득층의 보육 이용료를 낮추어서 모든 아동들이 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학습능력을 최대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국 방과후 정책의 목표임
- 영국의 대표적인 방과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서 ‘열린학교(Extended School)’가 있으며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아동의 성장배경이나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19세 이하 모든 아동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열린학교(Extended School)’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는 학교당국에 학교시설을 자유롭게 임대해 줄 수 있는 임대권을 부여하였고, 학교는 형편에 따라 열린학교를 국내의 방과후학교와 같이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하기도 함
  - 또한 학교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단위 지역구 학교별로 체육활동, 미술활동, 컴퓨터 등을 특성화 교실로 운영하여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기관이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이정림 외, 2013)
- 열린학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NRT(The National Remodeling Team)를 구성하였고 NRT는 지방정부와 협력 및 방과후 서비스 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열린학교 서비스를 지원함
- 또한 교육법(Education Act, 2002)에서는 학교가 방과후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동의 부모나 지자체 관계자들의 자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방과후 활동 발전에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 통로를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KDI, 2009)

〈표 4-29〉 영국 열린학교(Extended School) 핵심 서비스 주요내용

항목	서비스 주요 내용
다양한 활동 참여 (Varied Menu of Activities)	학기 중 운영, 'Study Support'를 포함하여 여가활동, 운동, 음악, 예술, 공예, 자원봉사 활동 등을 지원.
보육서비스 (Childcare)	초등학생 대상, 년 48주 운영 아침 8시-저녁 6시까지 보육서비스 제공, 예술, 스포츠 등 높은 수준의 활동
부모 양육지원 서비스 (Parenting Support)	양육자에게 양육정보, 아동양육 교육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아동의 주요 전환기에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 부모 집단 활동지원, 전문서비스 연계
전문적 서비스로의 신속한 의뢰지원 서비스 (Swift and Easy Access: SEA)	아동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신속히 대처하고 서비스 연계, 심각한 문제는 학교 외부에 신속히 의뢰하여 전문서비스 제공
학교 시설의 개방 (Community Access to School Facilities)	연중무휴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 학교개방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가 지원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 2. 교육분야

### 1) 평생교육 관련 정책 동향

#### (1) 평생교육정책 현황

- 1999년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운 법적 체계와 각종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됨
- 2000년대부터는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평생교육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분야별 필요 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 중심의 평생교육으로 확장됨
- 이와 관련하여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중심대학, 학습계좌제 등이 진행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추진 체계도 마련되었음(홍영란 외, 2017)

#### (2) 평생교육 종합계획

- 평생교육이 하나의 국가적 정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이 계기가 됨. 이는 평생교육을 단위 사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 차원의 정책 틀에 대하여 시기 구분을 통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평

평교육 종합계획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수립됨

- 제1차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2002~2006)
  - 지식근로자 및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을 추진 방향으로 인적자원개발과 교육개혁의 원리로 평생교육을 주목했으며, 평생학습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대비가 주요 정책임
- 제2차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2008~2012)
  -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추진 계획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중장년층의 생애 주기 세분화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추진(성인전기, 중기, 후기) 및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특화가 주요 정책 내용임
-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
  - 개인의 행복과 100세 시대 사회번영을 이끄는 요소로 ‘평생학습’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정책은 성인 및 고령층에게 고용가능성 촉진을 위한 평생교육 제공, 단순한 성인의 재교육 차원이 아닌 생애 전환 학습이 가능한 평생교육을 강조함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직업 세계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주요 추진 방향이며, 시간적·경제적 제한 완화로 평생학습권 실질적 보장 및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학습비 부담 경감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주요 정책 내용임

〈표 4-30〉 평생교육진흥 종합(기본)계획 비교 (1차~4차)

구분	추진방향	정책내용
1차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 (2002~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기반사회 지식근로자,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li> <li>○ 인적자원개발과 교육개혁의 원리로서 평생학습정책 가이드라인을 개발</li> <li>○ 인생 80년형 고령화 사회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층(30~54세)으로 이동함에 따라 신규 노동력의 공급부족이 예상됨으로 인생 80년형에 맞게 재편</li> <li>○ 중장년층을 노동시장 백업 요소로 상정 고령인구에게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 교육 제공</li> </ul>
2차 평생학습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내용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층 생애 주기 세분화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추진 (성인전기, 중기, 후기)</li> </ul>

구분	추진방향	정책내용
종합계획 (2008~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와 대학의 성인의 생애 주기 특성에 따라 분업체계 형성</li> <li>◦ 고용 가능성 촉진을 위한 평생학습에 집중</li> <li>◦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 '평생학습(고용가능성 증진을 위해 성인의 대학 안으로의 재진입 본격화) 중심대학' 운영</li> <li>◦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 후기 평생학습의 구체화: 인문학 교양교육, 지역사회 참여교육, 환경변화 적응 및 세대간 적응 프로그램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특화 (지역중심평생교육기관 전담)</li> </ul>
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2013~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행복과 100세 시대 사회변영을 이끄는 요소로 '평생학습' 인식</li> <li>◦ 100세 시대 도래,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책환경 변화에 작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자원 감소에 따라 성인의 고등교육 회귀가 고등교육정책 보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됨</li> <li>◦ 성인의 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환 학습이 문제</li> <li>◦ 중장년층이 저성장 및 청년층 중심으로 돌아가는 노동시장 구조를 혁신하는 타겟으로 상정, 본격적으로 중장년층의 생애 전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li> <li>◦ 성인 및 고령층에게도 고용가능성 촉진을 위한 평생교육 제공</li> </ul>
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직업 세계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li> <li>◦ 재직자 등 성인의 자발적 평생학습 지원</li> <li>◦ 장애인, 저소득 층 등 소외계층이 학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 확대</li> <li>◦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li> <li>◦ 산업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및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 역량 강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적, 경제적 제한 완화로 평생학습권 실질적 보장, 학습능력 진단 및 진로설계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준과 적성에 맞는 학습 참여 유도</li> <li>◦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학습비 부담 경감</li> <li>◦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강화</li> <li>◦ 미래 사회 변화 대비, 4차 산업혁명 관련 온라인 콘텐츠 개발 활성화 및 제공</li> <li>◦ 매치업(Match業, 산업맞춤 단가지직무인증과정) 시범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해 직업교육 혁신 모델 제시</li> </ul>

### (3)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동향

#### ■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 장애인 평생교육은 일반적인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및 장애인의 역량 강화, 장애인의 자기결정 등의 실질적 개념까지 포함하며 지역사회 통합 또는 적응 과정에 초점을 두고 학교교육과 연계된 계속교육으로서의 개념이 포함된 의미로 이해 될 수 있음(이정미, 2015)
- 장애인 평생교육을 처음 언급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제1항

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개념으로서 ‘계속교육’을 언급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이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성인들에게 학교 정규과정을 마친 후에도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최은수 외, 2013)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에서 이전과 다르게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되었음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 설립·운영 및 프로그램 개설 저조로 인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부족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이 미약한 점,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및 관련 인력을 육성 체계 등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장애인의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정책을 제시함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을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앙·지역단위 역할 정립을 통한 유관 기관 간 협의회 활성화를 토대로 연계 및 협력 모델 개발을 도출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제를 확고하게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김주영, 2018)

〈표 4-31〉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중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학습비 부담 경감</li> </ul> </li> <li>○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체계 구축)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하고, 국가, 시·도 간 분담체계 구축</li> <li>- 지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역할 분담</li> <li>- (추진 실적 평가)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추진정도를 매년 평가하여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보고</li> </ul> </li> <li>○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제도 접근성 제고)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및 평생학습계좌제 등에 시·청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li> <li>-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학력보완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확대</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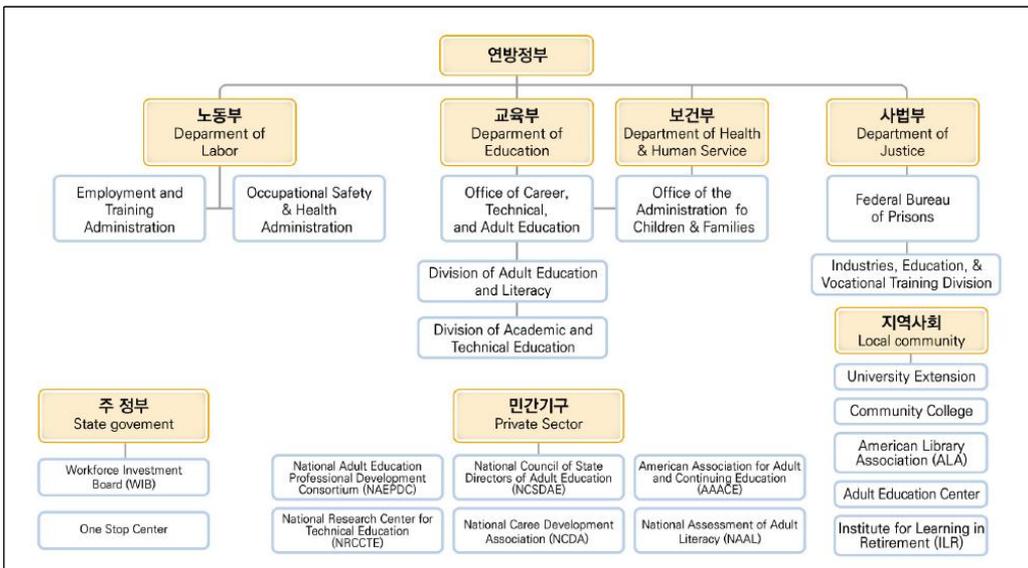
자료 : 교육부(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 2) 국내·외 사례

### ■ 미국

- 미국의생애주기별 평생학습정책의 우수사례로 ‘미국의 플러스50 이니셔티브 (The Plus 50 Initiative)’ 사업을 들 수 있음
  - 이 사업은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대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돕는 것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제2의 경력을 갖도록 돕기 위해 계획됨
- 핵심 프로그램은 ‘플러스 50 앙코르 완성 프로그램(the Plus 50 Encore Completion Program)’으로, 이는 지금까지 전 미국의 100개 지역대학에서 운영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약 만 명의 50세 이상의 베이비부머들이 교육,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 취업을 돕는 학위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함
- 50세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단순히 수업의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요구 및 심리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플러스 50 자문가(Plus50 Advisors)들이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4-5〉 미국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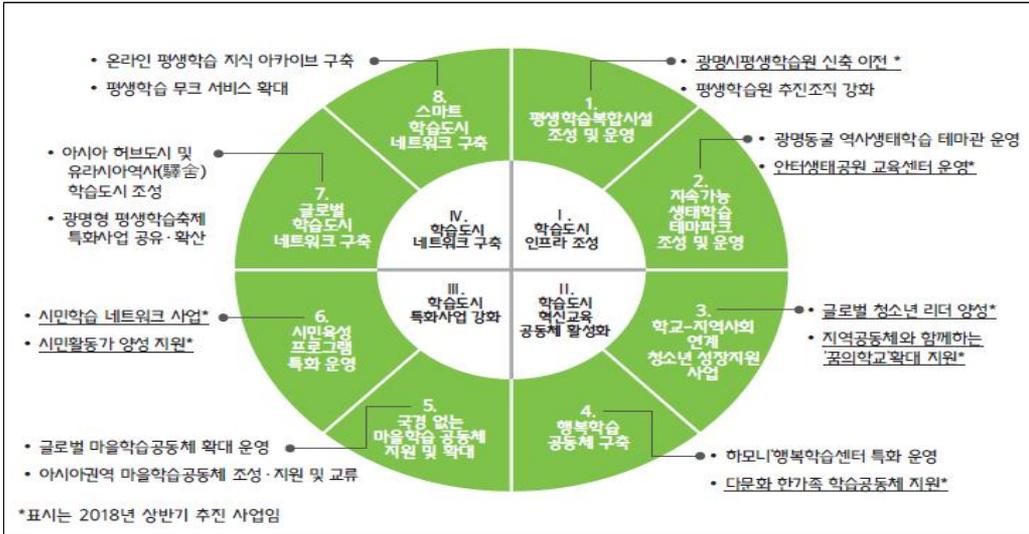


자료 : 김태준 외(2016).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IV):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 광명시

- 광명시는 ‘사람중심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학습도시로서 국내 최초로 2017년 10월에 ‘유네스코 글로벌 네트워킹 아시아·태평양 회의’를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7년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4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로 지정됨
  -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자립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의 발굴·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광명시평생학습원, 2018)
- 광명시의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의 지정배경 및 필요성은 ① 시민의 높고 다양한 학습욕구와 수요를 충족하고, 성과를 제고하여 지역 발전 도모, ② 역사와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구축된 평생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모색, ③ 글로벌 수준의 학습도시를 지향함으로써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학습형 일자리 확대 등으로 제시됨
- 평생학습특구의 사업 내용은 ‘시민이 주도하고 세계가 함께하는 최고의 평생학습 가치창출’을 목표로 2018년 ~ 2022년까지 5년간 학습도시 인프라 조성, 학습도시 혁신교육 공동체 활성화, 학습도시 특화사업 강화, 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 4대 분야, 8대 특화사업, 16개 세부사업을 신규 발굴하고 추진
- 평생학습 복합시설 조성 및 운영, 학교-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시민육성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활동가, 청년 리더, 은퇴이후 중장년 및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학습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외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을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광명시평생학습원 홈페이지)

(그림 4-6) 광명시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사업 내용



자료 : 광명시평생학습원(2018). 「2017 연간 보고서」

■ 고양시(장애인 평생교육)

- 고양시의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획 확대를 목적으로 고양시 평생교육과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등을 위한 '고양시성인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2013년부터 평생교육 나눔캠페인으로 진행된 '1강좌 1자리 나눔운동'은 성인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희망하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과 협약·결연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1자리(혹은 1강좌)나눔을 실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임(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7)
- 대상은 고양시 소재 평생교육기관 및 고양시 거주하는 성인 장애인이며, 진행형태는 ① 1자리 나눔(개별참여) : 특정강좌 1자리는 장애인을 위한 우선 접수기회 제공 또는 교육비 감면혜택 제공, ② 1강좌 나눔(집단참여) : 집단참여자(단체, 시설 등)를 위한 일일 또는 단기강좌 나눔, ③ 교육실나눔 : 장애인 평생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실(공간) 나눔 등의 형태로 운영됨
- 고양시 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 전달 및 지속적으로 협약기관을 확대하여 총 35개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나눔에 동참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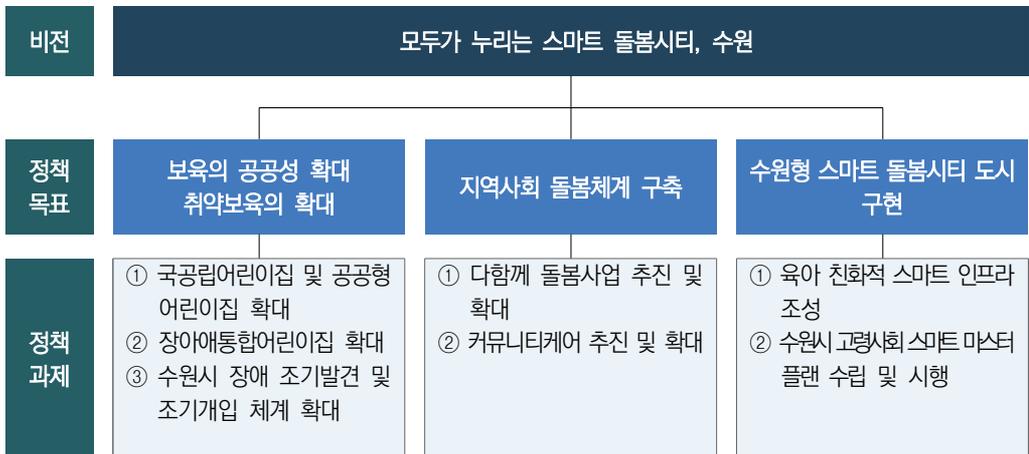
### 제3절 돌봄 및 교육분야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 1. 돌봄분야 정책방향

##### 1) 돌봄분야 비전 및 정책목표

- 돌봄분야 비전은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돌봄시티, 수원’으로 설정함
  - 장애 영유아 등을 차별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친화적인 돌봄시티를 구현하고자 함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취약보육의 확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수원형 스마트 돌봄시티 구현’과 같이 3개의 목표를 제시함
  - 첫 번째 정책목표인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취약보육의 확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확대’와 같이 세 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 두 번째 정책목표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에서는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및 확대’와 ‘커뮤니티케어 추진 및 확대’를 제시함
  - 세 번째 정책목표인 ‘수원형 스마트 돌봄도시 구현’에서는 ‘육아친화적 인프라 조성’ 및 ‘수원시 고령사회 스마트 마스터 플랜수립’을 제시함

〈그림 4-7〉 돌봄분야 비전 및 정책목표



## 2) 추진과제 요약

〈표 4-32〉 돌봄분야 추진과제 요약

목표	정책과제	세부프로그램	비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중기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확대	중기
취약보육의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	중기
		취약보육 현장 컨설팅 교육	중기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및 내실화	장기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확대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확대	단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다함께 돌봄 사업 추진 및 확대	돌봄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단기
		다함께돌봄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단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확대	단기
		마을공동체 돌봄사업 시행 및 인력양성	중기
	커뮤니티케어 추진 및 확대	커뮤니티케어 수립 관련 실태 및 기초 연구	단기
		커뮤니티케어 추진 체계 구축 및 확대 시행	장기
수원형 스마트 돌봄 시티 구현	육아친화적 스마트 인프라 조성	육아친화적 인프라 조성(접근성, 여가문화 등)	장기
		스마트 기반 육아 인프라 정보 제공기반 구축 부모교육 확대	장기
	수원시 고령사회 스마트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행	수원시 고령사회 마스터 플랜 수립	단기
		스마트기술을 기반한 노인 서비스 전략 수립 및 개발	장기

### 3) 돌봄분야 세부추진과제

1-1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어린이집 확대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
-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정책내용

-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확대

■ 기대효과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	○	○	○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확대	○	○	○	○	○

1-2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장애 영유아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보육의 기회 제공
- 취약보육의 확대 및 양·질적 확대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정책내용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장애통합어린이집 전환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
- 수원시 표준형 어린이집 설계도면 제작
- 취약보육 현장 컨설팅 교육
- 장애통합반 일반보육교사 수당 및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 기대효과

- 장애 영유아의 기본권(보·교육권) 보장
- 취약보육의 양적 인프라 확대
- 취약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	3개소	3개소	3개소		
수원시 표준형 어린이집 설계도면 제작		○			
취약보육 현장 컨설팅 교육		○	○	○	○

<b>1-3</b>	<b>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확대</b>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수원지역의 발달지연 의심 아동을 위한 조기발견 체계 구축
- 2차적 장애 예방과 장애의 중증화 예방
- 발달기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조기개입 서비스 지원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정책내용**

- 수원형 장애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모형 개발
-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체계 구축 로드맵 작성
- 지역사회 조기발견 및 지원기관 협약 및 시범사업 실시, 확대

■ **기대효과**

-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통한 발달지연 의심 아동의 조기발견 구축
- 복지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발견 및 개입
-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조기 개입서비스 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및 모형 개발(2018년)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모형 시범사업	○	○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확대 시행			○	○	○

1-4	다함께 돌봄 사업 추진 및 확대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 정책목표

- 지역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
- 돌봄수요 파악, 가용자원 연계,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마을돌봄(다함께 돌봄사업) 로드맵 마련

####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 정책내용

- 저소득층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단위 방과 후 돌봄(지역아동센터) 이외에, 모든 초등학생 대상의 상시·일시 마을돌봄(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6~12세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중심 돌봄서비스 총괄 연계(초등 1, 2학년 → 전 학년 확대)
- 다함께 돌봄 사업의 분절적 운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한 전달체계 정립
- 학교돌봄 외에 마을돌봄 이용을 희망하는 잠재적 수요를 파악 후, 맞벌이가정의 저학년 돌봄 수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계획 수립 및 추진
  - 다함께돌봄센터 수원시('18년: 1개소, '22년 까지 46개소 설치)

#### ■ 기대효과

-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및 출산포기 방지 효과
- 마을 돌봄 체계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돌봄 관련 일자리 창출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다함께돌봄 사업 실태 및 수요 조사	○				
다함께돌봄 사업 컨트롤 타워 구축	○	○			
다함께돌봄 센터 단계별 설치	○	○			
다함께돌봄 센터 확대		○	○		

1-5	커뮤니티케어 추진 및 확대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정책내용

- 커뮤니티케어 관련 실태조사
- 커뮤니티케어 관련 추진체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기대효과

- 지역 사회 내 노인 및 장애인 돌봄공동체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커뮤니티케어 수립 기초 연구	○				
커뮤니티케어 추진 체계 구축 및 모형 개발	○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실시	○	○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확대		○	○	○	○

1-6	<b>육아친화적 인프라 조성</b>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가족과 아이가 행복한 으뜸도시로서의 이미지 수립
- 육아친화적인 도시 인프라 조성
-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먹거리, 실거리, 놀거리 개발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정책내용**

- 가족과 아이의 심표를 위한 인프라 확대
  - 수원시 대표 관광지의 유아휴게시설 확대
  - 기존 유아휴게실(수유실)의 리모델링을 통한 청결도 및 안정성 확보
  - 유모차 끌기 좋은 도시(도로 정비 등) 조성
- 가족과 아이가 즐거운 프로그램 및 앱 개발
  - 수원시내 대표 관광지 또는 힐링공간을 중심으로 전용 키즈 존 설치 등
  - 주 양육자를 위한 수원지역 놀거리, 먹거리, 실거리 관련 마더맵 제작
- 엄마와 아이가 즐거운 'With Kids Zone' 조성
-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부모코칭사업 확대(인식개선)

■ **기대효과**

- 지역사회 내 육아친화적인 인프라 구축
- 가족과 아이가 즐거운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 개발
- 육아 관련 정보접근성 제고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엄마와 아이를 위한 편의 스마트 인프라 조성		○	○	○	○
영유아 관광정보 제공 기반 마련		○	○	○	○
부모교육 확대		○	○	○	○

1-7	수원시 고령사회 스마트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시행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2045년 고령사회 시나리오를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비전, 영역별 정책과제 제시, 2045년 65세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33.9%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됨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안전·정서 지원체계 마련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정책내용

- 수원시 고령사회 스마트 플랜(소득, 건강, 정서 등) 수립
-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노인 건강·안전·정서 지원 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과 보건 의료 산업을 융·복합한 스마트 헬스(Smart Health) 등 개발(대상 : 치매, 독거노인 등)

■ 기대효과

- 수원시 노인정책 수립의 가이드라인 제시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 수요 대응
- 수원시 고령친화도시의 정책방향 설정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복지 수요자 사례관리

■ 연차별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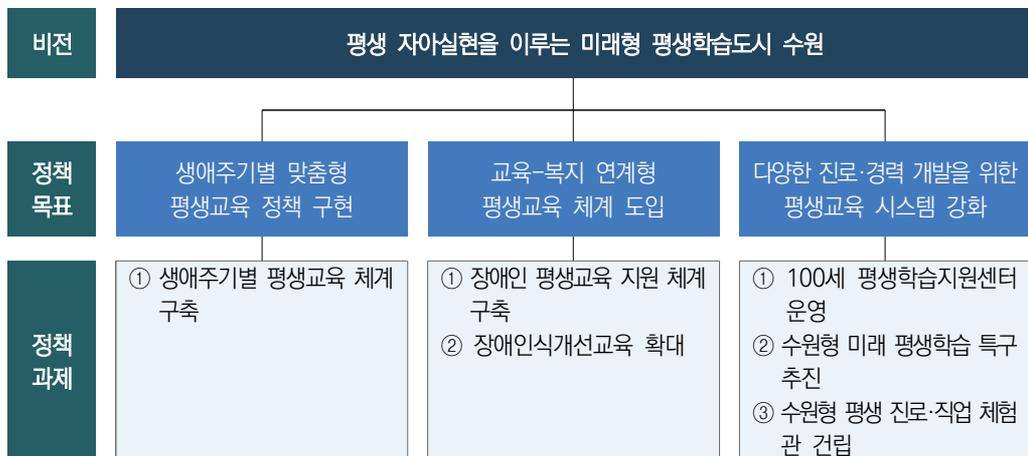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수원시 고령사회 마스터 플랜 수립		○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노인 건강·안전·정서 스마트 서비스 전략 수립 및 개발		○	○	○	○

## 2. 교육분야 비전 및 정책목표

### 1) 비전 및 정책목표

- 교육분야의 비전은 ‘평생 자아실현을 이루는 미래형 평생학습도시 수원’으로 설정함
  - 급격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평생에 걸친 재교육과 역량 개발을 통해 평생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미래형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 구현’, ‘교육-복지 연계형 평생교육 체계 도입’, ‘다양한 진로·경력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강화’와 같이 3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함
  - 첫 번째 정책목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 구현’에서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체계 구축’이라는 한 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 두 번째 정책목표인 ‘교육-복지 연계형 평생교육 체계 도입’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와 같이 두 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 세 번째 정책목표인 ‘다양한 진로·경력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강화’에서는 ‘100세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 ‘수원형 미래 평생학습 특구 추진’, ‘수원형 평생진로·직업 체험관’과 같이 3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그림 4-8〉 교육분야 비전 및 정책목표



## 2) 추진과제 요약

〈표 4-33〉 교육분야 추진과제 요약

목표	정책과제	세부프로그램	비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 구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체계구축	수원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 조사	단기	
		수원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연구	중기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중장기	
		수원시 평생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중장기	
교육·복지 연계형 평생교육 체계 도입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조사	단기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연구	단기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장기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점검단 구성 및 운영	장기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확대	수원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협의회 구성	단기	
		교육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단기	
		온라인 공유 체계 및 매뉴얼 개발	단기	
		전담 강사 양성	중기	
		100세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	100세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단기
			100세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개발 및 양성	단기
100세 평생학습 지원 센터 지정 및 운영	장기			
다양한 진로·경력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강화	수원형 미래 평생학습 특구 추진	수원형 미래 평생학습 특구 추진 기초 연구	단기	
		수원형 미래 평생학습 특구 추진 체계 구축	단기	
		수원형 미래 평생학습 특구 지정 및 운영	장기	
	수원형 평생 진로·직업 체험관 건립	수원형 평생 진로·직업 체험관 건립 기초 연구	단기	
		수원형 평생 진로·직업 체험관 건립 추진 체계 구축	단기	
		수원형 평생 진로·직업 체험관 시설 구성(안) 도출	중기	
		수원형 평생 진로·직업 체험관 건립 및 운영	중장기	

## 3) 교육분야 세부추진과제

2-1	<b>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체계 구축</b>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 정책목표

-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생애가치의 이해 제고 및 개인별 맞춤형 생애능력 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 수원시민의 생애주기별로 수행해야 할 생애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평생 학습프로그램 지원

##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	○

## ■ 정책내용

- 수원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
  - 수원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동하여 실시(5년 단위)
- 수원시 시민의 전 생애별 균형 있는 일-학습 체계 구축
  - 평생 자아실현 학습 체계 구현을 위한 맞춤형 생애능력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 평생 자아실현 생애능력개발 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평생 자아실현 생애능력개발 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구성(案)

구분	프로그램 내용
1020(진로지도 및 코칭)	진로지도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꿈, 재능 개발 등)
2030(직업 및 경력개발)	생애직업역량 및 경력개발 교육, 상담/코칭
4050(세컨드라이프)	제2인생 설계 및 상담/교육(이전직, 창업, 여가 등)
6080(양코르라이프)	성공적인 노화과정 상담 및 교육(삶과 일, 건강, 봉사 등)
8099(웰다잉 준비)	웰다잉 교육 및 상담/코칭(자서전 쓰기, 죽음준비 등)

- 수원시 평생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평생교육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관 부서, 기관, 단체 등과 연계 추진
  -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정책 추진의 일원화 및 운영 효율성 증대

■ 기대효과

-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개인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 제고를 통한 행복 추구 함양
- 저출산, 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의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을 선도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수원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	○				
수원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연구	○	○			
수원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		○	○	○	○
수원시 평생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	○

2-2	<b>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b>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 정책목표

-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유관 부서, 기초지자체,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추진체계 확립
- 장애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 연계 방안 마련

####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	○

#### ■ 정책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행을 위한 전략적 기능 수행
  - 관련 부서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한 총괄 지원 체계 확립
- 장애인 평생교육 종합 지원 계획 수립
-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기능을 담당할 협의체 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가능
-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점검단 구성 및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부서의 역할 분담·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 제도개선 등 모니터링 활동

#### ■ 기대효과

-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소통을 통해 중복지원의 예방과 효과성 증대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의 내실화 도모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연구	○	○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	○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점검단 구성 및 운영		○	○	○	○

2-3	<b>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b>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차별 해소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	○	○

■ 정책내용

- 수원시 장애인식개선 교육협의회 구성
- 수원시 장애인식개선 교육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 인식개선 관련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 전담 강사 양성(장애인 당사자 포함)

■ 기대효과

- 장애인 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 장애인 특성 이해 및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강화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수원시 장애인식개선 교육협의회 구성	○				
교육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	○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	○			
전담 강사 양성		○	○	○	○

<b>2-4</b>	<b>100세 평생학습 지원 센터 운영</b>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수원시민의 학습, 진로, 생애주기별 이슈 해결을 위한 지원 센터 운영
-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 및 코칭 지원을 위한 100세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	○

■ **정책내용**

- 대상별(생애주기) 학습, 진로, 생애주기별 이슈 해결을 위한 상담, 코칭,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100세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
  - 시니어뱅크를 활용하여 분야별로 고학력 전문직 은퇴자와 전문 기능인 등을 100세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로 양성
  - 100세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및 배치

■ **기대효과**

-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의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 선도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인구절벽을 위시한 100세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100세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				
100세 코티네이터 양성 과정 개발 및 양성	○	○			
100세 평생학습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	○	○	○

2-5	수원시 미래 평생학습특구 추진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정책목표

- 수원시 지역자원, 주민,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 특구 조성
- 수원시 평생학습형 미래교육특구 추진 및 운영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	○	○

■ 정책내용

- 수원시 평생학습형 미래교육특구 지정 추진
  - 학교, 공공기관 및 학습 기관 등 수원시 내 다양한 자원들이 미래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미래교육의 장소로서 상징성 부여, 수원시만의 특별한 학습도시 브랜드 창출
- 수원형 미래 평생학습특구 지정을 통하여 해당 지역 내 미래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평생 진로·직업 체험관’ 설립 및 다양한 4차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책 확보
  - [유사사례] 광명시 →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선정 (2017.4.12.)

■ 기대효과

- 미래교육의 주요대상을 청소년뿐 만 아니라 청년, 여성, 노인,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중장년 층 모두 참여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수원형 미래 평생학습특구 추진 기초 연구		○			
수원형 미래 평생학습특구 추진 체계 구축		○			
수원형 미래 평생학습특구 지정 및 운영		○	○	○	○

2-6	수원형 평생 진로·직업 체험관 설립	단기(~2020) 중기(~2030) 장기(~2045)
-----	---------------------	-------------------------------------

#### ■ 정책목표

- 2045년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 연령 대상의 진로·직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체험을 통하여 적합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원시 주도적 인프라 설립
- 실제 직업 체험을 통한 미래의 설계

#### ■ 대상

구분	영유아기 (만0세~5세)	아동청소년 (만6세~17세)	청년 (만18세~39세)	중장년 (만40세~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대상	○	○	○	○	○

#### ■ 정책내용

- 현재 진로직업 체험관은 주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음. 변화하는 미래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직업 체험이 가능한 체험관 건립이 필요하며, 수원시에는 관련 기관이 전무한 상황
  - [유사사례] : 파주시\_체인지업 캠퍼스, 성남시\_한국잡월드, 용인시\_에버랜드 미래직업 체험관 ‘플랩(PLAB)’
- 아동, 청소년, 초중고,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전시·체험서비스 및 프로그램 설계/운영
- 체험관 건립 후 각급 학교, 공공기관, 연구기관,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기관, 기업 등 유관기관과 연계·운영 될 수 있도록 구현
- (구성 案 진로개발과정인 진로탐색(관심-구체화-명료화) 3단계에 따라 3개의 관으로 구성 (미래직업탐색관, 미래직업체험관, 미래직업정보관)

#### ■ 기대효과

- 수원시민의 평생 진로·직업 탐색이 가능하여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 실제 직업체험을 통한 미래의 효과적인 설계

■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수원형 평생 진로·직업 체험관 건립 기초 연구		○			
수원형 평생 진로·직업 체험관 추진 체계 구축		○			
수원형 평생 진로·직업 체험관 운영(안) 도출			○		
수원형 평생 진로·직업 체험관 건립 및 운영			○	○	○

## | 참고문헌 |

- 관계부처합동(2018), 은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 광명시평생학습원(2018), 2017 연간보고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7),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
- 교육부(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 교육인적자원부(2002), 제1차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
- 교육인적자원부(2007), 제2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08~2012]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보도자료) 치매가 보내는 경고, 경도인지장애 질환에 대한 초기 진찰이 중요
- 김두영(2013),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숙 외(2명)(2009),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성근 외(1명)(2015), 사회취약계층의 안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김수현(2013. 9),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과제, 복지동향, 통권 제179호
- 김승보 외(1명)(2007), 평생학습사회만들기: 교육에서 학습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은지 외(6명)(2017),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1): 여성·가족 관점의 진단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재희(2016), 성인 장애인의 생애단계별 경제활동참여 변화유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주영(2018),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실행과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 방향 및 과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제4권 제2호, pp1~28
- 김태준 외(7명),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분석 연구(IV):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 김한별(2010), 평생교육론, 학지사
- 노일경 외(2012), 40~50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제2인생 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략, 교육과학기술부·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방하남 외(1명)(2012), 취약계층의 객과적 정의 및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변수정 외(1명)(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
- 보건복지부(2017),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 손문금(2012), 서울시 돌봄사업 확대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돌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수원시(2017), 수원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 신덕상(2011), 취약계층의 인적자본이 사회적 배제 극복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희택(2012), 경기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복지욕구 연구, 경기복지재단
- 오세근(2010). 요양보호사 수발노동의 실태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여부 판별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통권 제20호, pp101-136
- 유해미 외(2명).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적합성 분석 연구: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윤소영 외(5명),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준섭(201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연구, 법제처
- 이중섭 외(1명)(2014),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모형개발 및 사업제안, 전북발전연구원
- 이정미(2017), 대구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 기초연구: 중장년층 및 노년층 평생학습 참여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원·대구평생교육진흥원
- 장혜경 외(5명),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석광(2011), 학교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부천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옥분(2007), 전생애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 학지사
- 정혜원(2014), 경기도 가족 변화와 정책 대응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조홍식 외(2014), 돌봄서비스 정책 비교연구, 보건복지부
- 차갑부(2004), 평생교육의 이해, 학지사
- 최선(2013), 노인의 미술교육에 대한 요구조사 : 생애주기별 미술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2012),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생애주기별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4호, pp157~184
- 최운실 외(2명)(2003), 생애단계에 따른 평생교육 체제 모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 최성일(2012), 이슈브리프: 경기도형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방안의 모색,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정은(2014), 새사연 이슈진단: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새로운 사회를 여는연구원
- 하성규.(2006). 주택정책론, 박영사

- 하성규 외.(2006). 주택·도시·공공성, 박영사
- 하성규 외.(2012). 한국주거복지정책, 박영사
- 한국도시연구소.(2011).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평론
- 한승희(2003), 제21차 KEDI 교육정책포럼 참여정부의 평생교육정책 탐색 : 소외집단을 위한 평생교육기회확충, 한국교육개발원
- 허주희(2016), 여성의 생애주기별 구매특성을 반영한 TV홈쇼핑 편성마케팅 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영란 외(4명)(2016),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I): 고등·평생교육 영역,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 외(4명)(2017),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II): 평생교육 영역, 한국교육개발원

경기도시공사([www.gico.or.kr](http://www.gico.or.kr))

국토교통부 ([www.molit.go.kr](http://www.moli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http://soco.seoul.go.kr/soHouse>)

SH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ww.i-sh.co.kr>)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 부록 1. 설문조사지

## 수원시 주거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시간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춘도시 수원 2046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주거, 돌봄 분야 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순수한 학문적 목적과 행정에서의 수원시 주거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기관 : 수원시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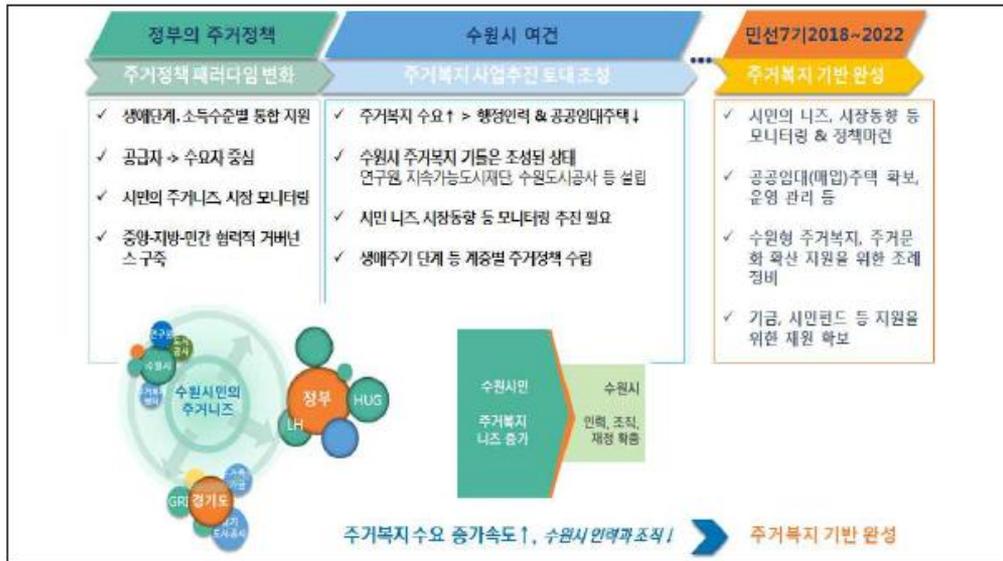
■ 담당연구원 : 김리영 전문연구원 (전화) 031-220-8023  
 (이메일) leeyoung9156@daum.net

### 1. 주요 메가 트렌드에 대한 중요요인 평가

◎ 다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설문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미래 주요 메가트렌드(Mega Trend)
  - 미래 주택 및 주거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과 변화를 말하며,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지방분권 및 행정체계 변화와 관련한 트렌드와 이슈가 해당됨
  - \*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 \* 저성장 및 양극화
  - \* 금융발달과 가계부채
  - \* 지방분권 및 행정체계 변화 등
-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문1. 다음은 주택주거문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정리한 것입니다. 수원시 주거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도를 각각의 이슈별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이슈	내용	중요도 평가				
		①	②	③	④	⑤
(1) 저출산 및 비혼 증가	초혼연령증가, 경제적 여건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출산을 감소와 비혼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2) 고령화 심화	의료기술의 발달, 저출산 증가 등으로 인한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3) 1~2인 가구 증가	비혼, 이혼, 사별,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1~2인 가구 증가	①	②	③	④	⑤
(4) 외국인 가구 증가	이민, 취업, 난민 등 다양한 이유로 유입되는 외국인 인구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5) 도시-비도시 지역간 인구편차 심화	도시지역으로 이주 증가, 비도시권 고령화 등에 따른 도시-비도시 지역간 인구편차 지속	①	②	③	④	⑤
(6)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노동으로 얻는 소득과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계층이나 집단 간에 격차 심화. 중간계층이 사라지고 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 심화	①	②	③	④	⑤
(7) 공유경제 시장 확대	소유대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협력 소비 방식의 경제활동, 집, 자동차 등을 공동으로 대여하는 공유문화 확대로 주택 등 부동산 소비패턴 변화	①	②	③	④	⑤
(8) 사회적금융 확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성 부각 사회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현재 여건 하에 수요자에 대한 대출 및 투자 수요가 증가	①	②	③	④	⑤
(9)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지원 등을 위한 행정사무 및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전 조세 및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①	②	③	④	⑤
(10) 시군구 등 행정구역 개편	중앙정부, 광역도, 50만이상 대도시 중심의 행정체계(광역시 폐지 및 소규모 시군의 역할 변화) 인구감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시군 통합으로 행정구역 개편	①	②	③	④	⑤

문2. 4개 영역에 대해 필요성, 시급성, 시행 가능성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필요성					시급성					실행 가능성				
	필요 없음 <---> 매우 필요					시급하지 않음 <---> 매우 시급					실행 불가 <---> 실행가능성 높음				
(1) 공공임대주택 공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수요자 금융지원 (구입, 전세, 월세보조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주거상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주거지원 대상 발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3. 다음은 영역별로 현재 정력수립과 집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의견과

향후 수원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적절한 역할 비중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행 주체별 역할					
	중앙정부	광역자치	기초자치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	민간	합계
재 요 합 비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					100%
	수요자 금융지원 (구입, 전세, 월세보조 등)					100%
	주거상담					100%
	주거지원 대상 발굴					100%
바 람 의 역 할 비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					100%
	수요자 금융지원 (구입, 전세, 월세보조 등)					100%
	주거상담					100%
	주거지원 대상 발굴					100%

## II. 주거분야 향후 과제별 평가

● **수요지원 :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설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기금조성

- 개념 :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기금마련을 통해 실현
- 财源 : 기업 및 시민 등의 기부, 복권 등 중앙기관의财源, 지방세 등 검토
- 사례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조성(2017.2),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관련 조례 제정(2017.6) 등

#### ✓ 기금 财源

- 기업 및 시민 등의 기부 (가능성 검토 필요)
- 복권 등 중앙기관의 财源 (협의 필요)
- 주택 및 부동산 등 다양한 지방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보통세)

#### ✓ 기금 용도

- 임대주택의 공공 및 자금 지원 사업
-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
- 주거복지향상에 필요한 각종 사업 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 관련 사업 지원

#### ✓ 운영, 관리

- 개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성할 수 없음
- 특별회계·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이 있을 시 주택도시기금 등을 조성하여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 할 수 있음

### 기금조성 사례

####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2017.2)

- ✓ 서울시는 증가하는 사회적 규공에 대한 지급수요 충족 및 금융사과 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개정을 통한 공적 财源을 조성
- ✓ 서울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财源을 통한 민간 기부금 으로 구성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7월)
- ✓ 2013년 부터 3년간 사회투자기금 344억원, 민간협력자금 77억원 투입

####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관리조례, 제정 (2017.6)

-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财源 : 경기도 보통세의 0.2%이나,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수입금
- ▶기금의 용도
  - ①임대주택공급 및 자금 지원 사업
  - ②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 ③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④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 ⑤주거복지에 필요한 각종 사업
  - ⑥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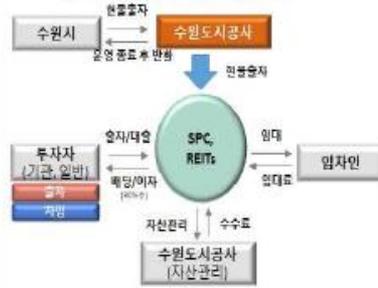
### □ 시민참여 펀드, 리츠

- 시민투자 펀드를 활용한 공적 주택 건설(임대주택 건설 확대)

#### 시민투자 펀드를 활용한 사업 추진



#### SPC, REITs 활용한 증대규모사업 추진



### □ 주거안정 금융지원

- 자가 : 역도지기를 활용한 자가 상환 지원
- 전세 : 보증금 지원, 신용보강, 저리 대출
- 월세 : 월세보조(현재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에서 45% 확대)

문1. 수요지원(금융지원) 방안 3가지에 대해 필요성, 시급성, 시행 가능성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이슈	필요성					시급성					실행 가능성				
	필요 없음 <--->	매우 필요				시급하지 않음 <--->	매우 시급				실행 불가 <--->	실행가능성 높음			
(1) 기금조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시민참여 펀드, 리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주거안정 금융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2. 수요지원(금융지원) 방안 3가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보완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주요 이슈	추진시기		기타 의견 (고려 또는 보완사항)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단기 (~2022년)	중장기 (2023년~)	
(1) 기금조성	①	②	
(2) 시민참여 펀드, 리츠	①	②	
(3) 주거안정 금융지원	①	②	

● **공급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질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매입임대 200호 확보

- 수원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 물량의 50%를 건축비만 지급하여 매입 : 민간협력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
- 2022년까지 200호 시범사업 추진 → 중장기적으로 물량 확대

직접 건설(수원도시공사)

- 수원도시공사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 공공보유 부지, 건축물 등 복합개발(주거+상업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LH, 경기도 공급 활용

- 제한적이지만, 수원시 재량으로 활용 가능한 공급지원 방안
- 행복주택 등 지자체가 우선공급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도시내부 저이용, 노후시설 복합 개발

- 노후주택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연계한 복합개발 추진(민간-공공 복합개발)
- 공공보유 부지 및 건축물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 **정책목표**

- 낙후,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설치 필요 지역
- 임대주택과 공공, 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협동의 주거환경 개선 추진

❖ **정책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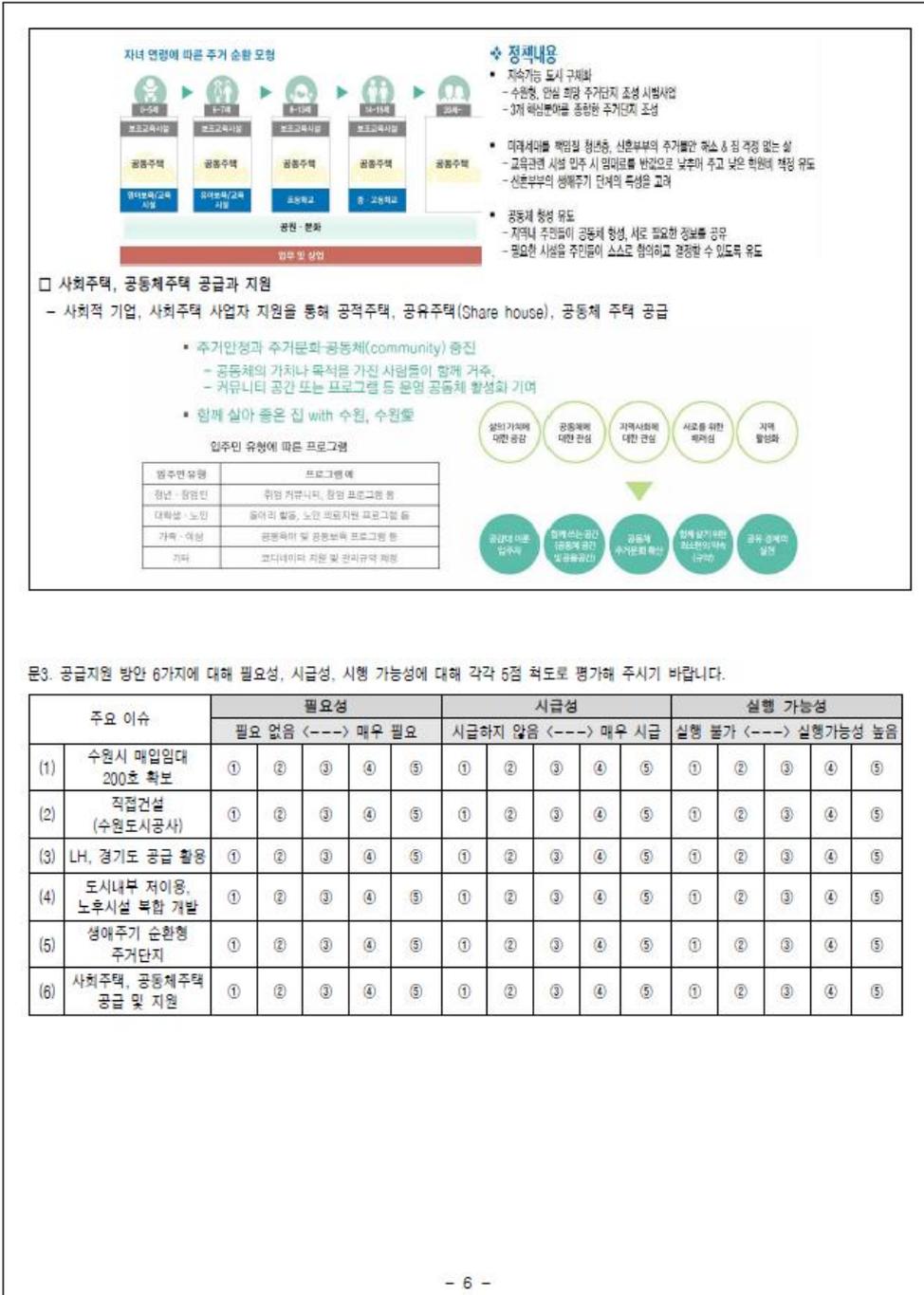
- (민간 노후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민간-공공 협력 임대주택 확보
- (공공부지, 민간연계)
  - ✓ 공공시설(부지) 단독 복합개발
  - ✓ 공공시설 + 안원한 민간의 주택 등, 민간-공공 협력 복합개발

(1) 민간소유도지, 민간-공공 협력 임대주택

(2) 민간 + 공공 도지, 민간-공공 협력 임대주택

생애주기 순환형 주거단지

-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한 주거 형태를 단지내 구축하여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문4. 수요지원(금융지원) 방안 3가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보완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주요 이슈	추진시기		기타 의견 (고려 또는 보완사항)
	단기 (~2022년)	중장기 (2023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 수원시 매입임대 200호 확보	①	②	
(2) 직접건설 (수원도시공사)	①	②	
(3) LH, 경기도 공급 활용	①	②	
(4) 도시내부 저이용, 노후시설 복합 개발	①	②	
(5) 생애주기 순환형 주거단지	①	②	
(6)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공급 및 지원	①	②	

◎ 기타 시스템구축 방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설문에 인쇄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실태조사(격년)
- 수원시민의 주거수준, 주거니즈, 정책수요와 평가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
  - 수원시 주거복지 향상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
- 주거종합계획(5년 단위) 및 연차별 계획 수립(매년)
- 주거복지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 수립
  -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원시 주거복지 시책 점검과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수행(주거실태조사와 연동하여 진행)
- 인구 및 주택시장 동향(분기 또는 반기별) 파악
- 인구동향(출산, 사망, 결혼, 전입, 전출, 순이동 등), 인구이동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 제시
  - 지역별 가격변동(매매, 전세, 월세),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주요이슈, 도시재생과 관련한 지역, 기타 중요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사점 제시
- 웰컴투 수원 프로젝트
- 목표 : 청년층 인구 유입, 수원시 정보제공 및 이주를 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 향상, 수도권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공 및 홍보효과 기대
  - 정책수단 : 이주환영센터(주민센터 등 검토), 앱(수원시 정보제공 홈페이지)을 통해 주거, 문화, 공공서비스 등 맞춤형 정보 제공, 공연 및 문화행사 무료초대권 제공, 무료행사 정보제공 등 이주 청년층 홍보대사 활용(주거지원 등 지원 받은 청년층 선정)
- 기관 역할 강화
- 주거복지와 신설 : 매입임대 및 공공임대 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체계 마련
  - 수원도시공사 : 매입임대 등 주택 사업을 위한 지원부서의 신설과 인력확충
  - 지속가능도시재단 : 주거복지센터에서도 관련 기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확충
  - 수원시정연구원 : 시민의 주거니즈 모니터링, 주거정책 지원(주거복지지원센터 조성 등)
- 제도개선 : 주거복지 조례 제정 등
- 주거복지 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 수원시 주거복지 시책 추진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등

문5. 공급지원 방안 6가지에 대해 필요성, 시급성, 시행 가능성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이슈	필요성					시급성					실행 가능성				
	필요 없음 <---> 매우 필요					시급하지 않음 <---> 매우 시급					실행 불가 <---> 실행가능성 높음				
(1) 주거실태조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주거종합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인구 및 주택시장 동향 파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웰컴투 수원 프로젝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기관 역할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제도개선 : 주거복지 조례제정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6. 수요지원(금융지원) 방안 3가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보완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주요 이슈	추진시기		기타 의견 (고려 또는 보완사항)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단기 (~2022년)	중장기 (2023년~)	
(1) 주거실태조사	①	②	
(2) 주거종합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①	②	
(3) 인구 및 주택시장 동향 파악	①	②	
(4) 웰컴투 수원 프로젝트	①	②	
(5) 기관 역할 강화	①	②	
(6) 제도개선 : 주거복지 조례제정 등	①	②	

### Ⅲ. 종합 평가

문1. 다음은 앞서 설명한 수원시에 적용 가능한 주거정책 방향을 열거한 표입니다. 아래 세부 프로그램 중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없이 3가지 선택, 번호 기재) : (    ), (    ), (    )

문2. 아래 세부 프로그램 중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없이 3가지 선택, 번호 기재) : (    ), (    ), (    )

문3. 아래 세부 프로그램 중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없이 3가지 선택, 번호 기재) : (    ), (    ), (    )

구분		세부프로그램	비고
수요 지원	금융지원	1. 기금조성	
		2. 시민참여 펀드, 리츠	
		3. 주거안정 금융지원	
공급 지원	공공주택 확보	4. 수원시 매입임대주택 200호 확보	
		5. 직접건설(수원도시공사)	
		6. LH, 경기도 공급 활용	
		7. 도시내부 저이용, 노후시설 복합 개발	
	8. 생애주기 순환형 주거단지		
공동체성 강화	9.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공급과 지원		
기타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10. 주거실태조사(격년)	
		11. 주거종합계획(5년단위), 매년 연차별 계획 수립	
		12. 인구 및 주택시장 동향 파악	
	정보제공	13. 웰컴투 수원 프로젝트	
	기관 역할 강화	14. 관련기관 기능 강화	
제도개선	15. 주거복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 2. 수원시 핵심리더양성 과정 제안 정책과제

NO	제 안	정책과제
1	수원시 핵심리더양성과정 제4기 제1조	- 꿈, 호기심, 상상력을 키워주는 미래놀이 공간 조성 - 엄마·친구야!!! 우리 학교 가서 놀자
2	수원시 핵심리더양성과정 제4기 제2조	주민 밀착형 독서환경 조성 방안
3	수원시 핵심리더양성과정 제4기 제3조	수원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
4	수원시 핵심리더양성과정 제4기 제4조	- 행복한 노년을 위한 - 수원시 독거노인 주거복지 활성화 방안
5	수원시 핵심리더양성과정 제4기 제5조	- 100세 시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 신중년층 일자리 활성화 방안

## 1. 수원시 핵심리더양성과정 제4기 제1조

## - 꿈, 호기심, 상상력을 키워주는 미래놀이 공간조성 - 엄마·친구야!! 우리 학교 가서 놀자

### ■ 추진배경

- 저 출산 등으로 학령인구 및 학교 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증가
- 늘어나는 유휴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지역여론 및 의견 대두
- 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문화시설(문화센터 등) 및 놀이 공간 확충에 지역주민들의 욕구 증대
-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 공간조성 필요성 증대
- 학교, 교육청, 수원시, 지역사회 간 협력하여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생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구축

### ■ 현황 및 국내 운영현황 사례분석

- 초·중등학교 학생 수 감소 유휴교실 발생
  - 현재 유휴교실이 방과후 교실, 특별교실(과학실, 가사실, 미술실)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구도심의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로 활용되지 못한 유휴 교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유휴 교실 활용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활용을 위한 대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유휴교실 공간 조성사례 분석
  - 지역특성에 따라 유휴교실 사용용도가 다양하였으며, 향후 공간 조성 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맞춤형 시설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문제점

- 유휴교실 조성 전
  - 인식문제 : 학교장 및 교직원의 의지부족, 학부모의 반대
  - 교실활용 : 여유교실 타 용도 전환사용에 관심 없음
- 유휴교실 조성 후
  - 관리부문 : 보안문제, 안전사고 우려
  - 운영부문 : 담당자부재, 운영주체 불분명, 재정문제

■ 추진과제

- (인식문제) 학교장, 교직원 의지부족과 학부모 반대 장애요인 해결
  - 사업시작 전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문조사 및 학교의견을 수렴하여 공간조성 시 반영.
  - 가치) 미래놀이공간 협의체 구성에 따른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유희교실을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
  - (장애요인 해결방안) 사업추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학교에서 요청 시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사업비 지원
- (교실활용) 수원시와 학교 간 운영주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이나 운영규정(안) 제정
  - 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규정안 제정
- (관리부분) 보안 및 안전사고는 위탁 운영업체 선정
  - 학교 내 보안, 안전사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범위, 인력배치 등은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업체 선정
  - 수원시: 사업비 교부, 학교장: 위탁업체 선정
- (운영부분) 시설 조성 전·후 재정문제(추후 조정 가능)
  - 조성 전 : 수원시&교육청의 조성비 부담율 50%:50%(수원시 교육경비 기본계획에 의거 1억원이상 사업 부담비율)
  - 조성 후 : 시설운영비, 소모품비, 시설관리비는 수원시 부담(시설 개방시)

■ 기대효과

-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확장하여, 학교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신규건립에 따른 예산의 중복투자 발생 예방에 기여함.
- 학생에게는 보다 향상된 교육환경 제공과 지역주민에게는 부족한 체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평생교육의 장 제공
  - 학교 유희시설의 적극 활용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역복지시설 확충에 기여함.

## I. 추진배경

- 저 출산 등으로 학령인구 및 학교 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증가
  - 현재 유휴교실은 학교장 책임하에 불필요한 특별교실 조성 및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로 사용하여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유휴교실을 활용한 공간 조성으로 학교와 수원시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기반 구축(방과 후 교사, 안전요원 등)
  
- 늘어나는 유휴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지역여론 및 의견 대두
  -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도 빈 교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안전체험교실, 실내스포츠 공간 등
  - 영유아 및 학생에게 부족한 실내놀이터를 조성
  
- 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문화시설(문화센터 등) 및 놀이 공간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 증대
  - 신축건물 건립 시 토지매입비, 시설공사비, 물품구입비 등 많은 예산 필요
    - 기존학교(유휴교실, 미 마감교실)등을 활용한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 조성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투자의 효율성 확보
    - 문화센터 신축(약80억원, 2017년 연무동 문화센터), 유휴교실 20개활용 시(약10억원, 리모델링)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조성 및 시설 확충
    - 지역사회에 부족한 도서관, 마을극장, 힐링카페, 노인복지시설 구축
  
-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 공간조성 필요성 증대
  -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학부모등 학교체육관건립 신청 민원이 증가
    - 체육관 건립비용은 초등학교 기준 (학교당 26억원정도 소요)(사업비 지원기준 : 국비 70%, 시비 30%)
    -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강당 및 작은 실내체육관을 조성하여 우천 시 또는 동절기에 실내 체육수업, 입학·졸업 등 행사 진행
  
- 학교, 교육청, 수원시, 지역사회 간 협력하여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생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구축

## II. 현황 및 국내 운영현황 사례분석

### ■ 초·중등학교 유휴교실 현황 및 학생 수 감소현황

#### ○ 초·중등학교 유휴교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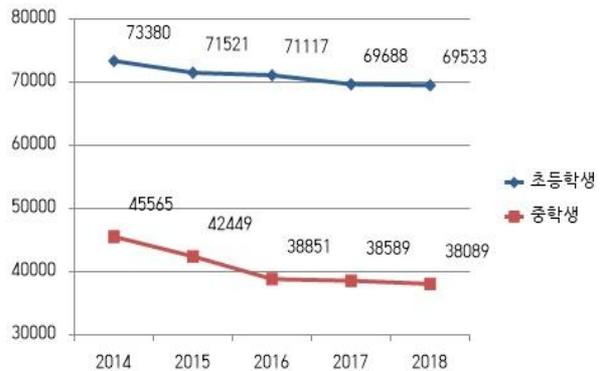
(단위:개교)

구분	학교수	전 체 교실수	활 용 교실수	유휴교실 현황			비고
				소계	특별교실	미사용	
합계	153	4,957 (100%)	3,853 (77.7%)	1,104 (22.3%)	1,004	100	
초등학교	97	3,389	2,623	766	690	76	
중 학교	56	1,568	1,230	338	314	24	

#### ○ 관내 초·중등학교 년도별 학생 수 감소현황

(단위:명)

연도	학생수(명)	
	초등학교	중학교
2014년	73,380	45,565
2015년	71,521	42,449
2016년	71,117	38,851
2017년	69,688	38,589
2018년	69,533	38,089



#### ○ 시사점

- 2018년 현재 수원시 관내학교 유휴교실비율 : 22.3%
- 최근 5년간 관내 학생 수 감소율 : 초등학생 5.2%, 중학생 16.4%
- 학생현황 분석결과 매년 평균 2% 내외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현재 유휴교실이 방과후 교실, 특별교실(과학실, 가사실, 미술실)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구도심의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로 활용되지 못한 유휴 교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유휴 교실 활용 문제가 사회 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빈 교실 활용을 위한 대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 교육청과 수원시, 유관기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2018년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41개동 669개 프로그램)

○ 【대상 : 학생】

강좌명	운영수	강좌명	운영수
그림 그리기	39	수학·과학	8
영어회화	28	음악출넘기	7
중국어회화	17	주산·암산	6
한자교실	10	발레	6
종이접기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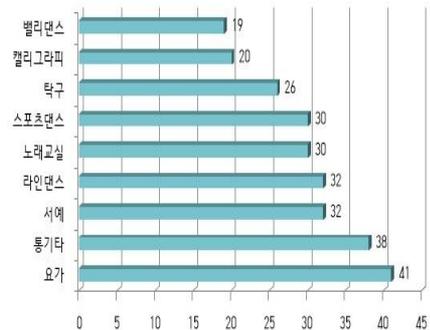


▶ 기타프로그램 :

이야기역사 5, 일본어 5, 정보교실 5, 독서논술 4, 국선도 3, 구연동화 1, 어린이바둑 1

○ 【대상 : 일반인】

강좌명	운영수	강좌명	운영수
요가	41	스포츠댄스	30
통기타	38	탁구	26
서예	32	캘리 그래피	20
라인 댄스	32	발리댄스	19
노래교실	30		



▶ 기타프로그램 :

한지가족공예 6, 전통무용 7, 꽃꽂이 11, 난타 12, 사물놀이 12, 손뜨개 11, 우쿨렐레 9, 방송댄스 14, 사진촬영 6

○ 시사점

- 동 주민자치센터 내 학생 및 주민운영 선호도 조사결과 단독주택이 많은 구도심과 아파트 밀집지역의 동 주민센터에 따라 선호하는 강좌(프로그램)가 다르게 나타남
  - ⇒ 단독주택 : 노래교실, 댄스교실, 탁구 등 중장년 프로그램 선호
  - ⇒ 아파트지역 : 자녀(학생) 중심 학습프로그램, 요가, 통기타 등
- 동 주민자치센터 선호도 조사결과를 유희교실 공간 조성 시 반영
  - ⇒ 현황 이외에 학교주변의 지역적 특성과 협의회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 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학생, 주민 이용률UP)

- 유휴교실 공간 조성사례 분석
  - 유휴교실 공간조성 현황(우리시, 타시도)

구분	수원시	경기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학교수	2	19	1	2	1	13
활용 용도	·청소자유공간 ·안전체험교실	·안전체험교실 ·도서관 ·통합예술공간 ·공립형 지역 아동센터	·문화·예술공 간 ·체육활동공간 ·지역평생교육 ·공부방	동네 공부방	영동한FM살 롱 (영화보는 공간)	· 실내 놀이터

- 시사점
  - 지역특성에 따라 유휴교실 사용용도가 다양하였으며, 향후 공간 조성 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맞춤형 시설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수원시 유휴교실 조성학교 운영현황 벤치마킹》

#### 1 세류중학교

- 면 담 자 : 9명
  - 세류중(3명) : 행정실장, 청소년자유공간 운영담당자(2명)
  - 수원시(6명) : 1조 팀원
- 면담내용 : 학생 이용현황,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운영시기 : 2018. 1월
- 이용시설 : 북카페,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편치방
- 시설이용실적(1월~3월)

구분	북카페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편치방
합계	2,448	3,180	1,764	587	708
1월	192	623	408	-	53
2월	260	628	491	80	92
3월	1,996	1,929	865	507	563

- 이용실적 증가요인 :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시 시설이용 대상인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학교장, 교육전문가, 교육청, 수원시 등 관계자들로 협의체를 10명~15명 이내로 구

성하여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조성

- 현재까지 운영의견(권선청소년 수련관 2명)
  - 3월까지 학생들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학생안전 및 보안, 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해결되면 지역주민 요청 시 개방 가능하며, 현재 주말에는 인근지역학생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률 증가추세임.
  - 학부모 및 학생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활용용도 및 수요는 많음

**2 매향여자정보고(특성화고)**

- 면 담 자 : 7명
  - 매향여자정보고(1명) : 법인국장
  - 수원시(6명) : 1조 팀원
- 이용시설 : 일반교실 외 특별교실을 활용하여 제과 제빵, 바리스타 교실, 예절교육실, 네일아트, 헤어미용실 조성
- 현재까지 운영의견
  - 중학교에서 직업체험처로 방과 후 이용률이 높으며, 고등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으로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신청이 많음.
  - 외부인 출입 개방 시 안전 및 청소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 특성으로 학생 외 일반인들이 바리스타 교실을 미 신청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로 인한 부담 가중
- 공간조성 사진



- 유희교실 공간조성 성공운영 사례 (우리시, 타시도)



### III. 문제점

#### ■ 유휴교실 조성 전

구분		주요 문제점
인 식 문 제	학교장 및 교직원의 의지부족	여유교실 활용의 권한을 학교장이 갖고 있다. 사업에 파생되는 효과에 대해 관심이 없다. 사업의 성과가 교직원들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학교마다 교직원들의 적극성에 차이가 있다.
	학부모의 반대	자기자녀의 이해득실만을 생각하여 행동한다. 활용방안 및 이용대상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교실활용	여유교실 타 용도 전환사용	여유교실 효율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없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선호도가 다양하다 유휴교실 활용 용도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창구가 없다 지역사회의 '공유공간'에 대한 수요가 파악되어 있지 않다

■ 유휴교실 조성 후

구분		주요 문제점
관리 부분	보안문제	저녁시간 및 공휴일 학교시설개방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학교 내 외부인 출입 시 통제가 어렵다
	안전사고 우려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화재발생에 대한 관리 및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운영 부분	담당자 부재	담당직원의 업무추가 가중으로 불만요소 가중된다. 담당직원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시설조성 및 운영·건립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
	운영주체 불분명	공간 조성 시 독립적인 운영주체가 없다. 수원시와 학교 등 기관별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합리적·효율적인 운영규정이 없다
	재정문제	유휴교실 활용을 위한 사업비(프로그램 운영)가 부족하다. 시설운영비 부족하다.(전기세, 냉·난방비, 인건비,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비용이 없다.(시설 유지보수 및 소모품비 등)

#### IV. 목표 및 전략

비 전	학교 공간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 강화		
목 표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생 및 주민들의 욕구 충족		
전 략	유휴교실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공간 활용 방안과 기회의 다양성 확보	공간 운영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운영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 -사업추진학교에 인센티브 제공</li> <li>• 미래놀이공간조성 협의체(가칭) 구성·운영 -의견수렴 및 주요사항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이용성 및 효율적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수원시를 4개권역으로 세분설정 - 권역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의 공간 조성</li> <li>• 시설활용 이원화와 개방 -주간 : 학교, 학생 -방과 후, 주말 : 주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조성 및 운영은 수원시와 학교가 협의 처리 - 조성 및 운영·관리 비용은 공동부담 - 시설관리·운영은 외부업체 위탁</li> <li>• 가이드라인(안) 또는 운영규정(안) 제정</li> </ul>

## V. 추진과제

- (인식문제) 학교장, 교직원 의지부족과 학부모 반대 장애요인 해결
  - 사업시작 전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문조사 및 학교의견을 수렴하여 공간 조성 시 반영.
  - 가칭) 미래놀이공간 협의체 구성에 따른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유희교실을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
  - (장애요인 해결방안) 사업추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학교에서 요청 시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사업비 지원
- (교실활용) 수원시와 학교 간 운영주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이나 운영규정(안) 제정
  - 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규정안 제정
- (관리부분) 보안 및 안전사고는 위탁 운영업체 선정
  - 학교 내 보안, 안전사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범위, 인력배치 등은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업체 선정
  - 수원시: 사업비 교부, 학교장: 위탁업체 선정

### 수원시 사례

※ 현재 수원시에서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세류중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권선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주어 코디네이터를 배치(1일 2명)

- (운영부분) 시설 조성 전·후 재정문제(추후 조정 가능)
  - 조성 전 : 수원시&교육청의 조성비 부담율 50%:50%  
(수원시 교육경비 기본계획에 의거 1억원이상 사업 부담비율)
  - 조성 후 : 시설운영비, 소모품비, 시설관리비는 수원시 부담(시설 개방시)

## VI. 세부실행계획

- 유희교실 활용 미래 놀이공간 조성계획(안)
  - 추진기간 : 2019년~2030년
    - 1년차에는 구별(권역별) 1개교(총 4개교) 시범학교 선정 추진
    - 조성 후 학생 및 지역주민 이용실적 및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 대상 : 유희교실 활용 가능한 관내 초·중등학교
    - 수원시 및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별 적정 안배
  - 추진 및 운영 : 추진주체 (수원시), 운영 및 유지관리(학교)
  - 기관별 역할분담
    - 수원시· 교육청· 학교 간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한 역할분담

교육지원청	학 교	수 원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학교 선정</li> <li>•예산지원 및 입찰, 조성공사 (총사업비 50%)</li> <li>•학교와 학부모 중간관리(협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희교실 제공</li> <li>•예산집행(조성공사)</li> <li>•협의회 구성 및 총괄 운영</li> <li>•운영관리업체선정 및 유지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지원(총사업비 50%)</li> <li>•공사 T/F팀 구성</li> <li>•기타자문, 협업체계 구축</li> <li>•사업비 정산</li> </ul>

- 추진방법
  - 사전에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에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필요성을 설명하고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 민·관·학 업무 협약체결을 통한 시설조성에 따른 재정문제, 보안문제, 운영 및 관리상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성 확보
  - 공무원,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업무추진협의회를 독립 구성하여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시설조성 유도
  -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안전사고 예방 등 도모
- 사업 추진절차



- 유휴교실을 활용한 미래놀이 공간조성
  - 학교선정 : 구별 공모신청을 통한 학교선정
    - 1년차 : 4개교(1개구 1개교) 시범조성 및 운영성과를 판단하여 확대
  - 필요면적 : 1개교당 4개 유휴교실 소요
  - 소요예산 : 1개교당 200백만원 내외(수원시:교육청, 50%:50%)
  - 기본조성
    - 학생, 학부모,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공간으로 구성
    - 천정, 바닥, 출입문, 도색 등을 포함한 교실에 대한 전체 리모델링
    - 학교 구성원과 함께 요구사항, 행태분석, 역할 변화 등 학교 특성을 반영
    - 디자인과 사용자 의견 등 조정 할 수 있는 디자인디렉터 선정
  - 공간배치(안)
    - 영유아 : 어린이집, 키즈카페, 복합놀이공간, 장난감은행 등

- 학생·청소년 : 북카페, 실내놀이터, 댄스(밴드)연습실, 노래방 등
- 지역주민 : 힐링카페, 도서관, 공동육아실, 다목적강당 등

※ 학부모, 학생, 타시도 공간조성 운영현황을 비교하여 학생 및 지역 주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우선고려

## Ⅶ. 기대효과

-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확장하여, 학교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신규건립에 따른 예산의 중복투자 발생 예방에 기여함.
- 학생에게는 보다 향상된 교육환경 제공과 지역주민에게는 부족한 체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평생교육의 장 제공
  - 학교 유휴시설의 적극 활용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역복지시설 확충에 기여함.

**참고 1**      **유휴교실 공간조성 사례조사(우리시, 타시도)**

지역	학교명		사용용도	운영 연도	
경기도	수원시	세류중	청소년자유공간 ▶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쉼터 ▶ 토론방, 댄스룸, 밴드룸, 학습동아리 공간	2018년	
		정자초	DREAM-SAFE 안전체험교실 - 재난, 생활, 작업, 교통안전, 응급처치,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조성중	
	용인시	용천,동백,서원초	도서관	▶ 휴식, 독서할 수 있는 지식놀이터 ▶ 학부모 사랑방 기능	”
		용인,신월초	안전체험교실	▶ 소방, 가스, 전기, 교통, 지진 등 체험코너 설치 ▶ 안전분야 전문가 채용 운영	”
		성지초	통합예술 활동공간	▶ 체험중심의 통합예술공간 조성 ▶ 예술교육의 커뮤니티 허브역할	2019년 조성
	성남시	안말초,장안초,수정초 등 총 9개교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 독서문화 활동 활성화 ▶ 맞벌이 가정 아동의 방과 후 이용편의 제공 ▶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2014년
		청솔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 학생의 안전한 돌봄 및 방과 후 교육활동	2017년
	광명시	하일초	복합문화 예술공간	▶ 학생, 교사, 마을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2018년 조성
	하남시	미사중		▶ 예술관련 교과활동	
	의정부	부용고		▶ 학생이 기획한 공연 및 전시 ▶ 마을주민 예술체험활동	
	서울	도봉구	방학중	문화·예술·체육 활동 공간 조성 ▶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 ▶ 시청각실 기능을 갖춘 방학마을극장(소공연장) ▶ 진로직업 체험형 카페	2018년
	광주	광산구	천곡중	영동한 FM살롱 (영화보는 공간) ▶ 학생들 설계와 참여로 만든 학내 자치문화예술 공간 ▶ 학생들은 재미(Fun)와 메시지(Message)를 담은 공간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FM살롱	
대전	중구	선화초	동네 공부방 조성	▶ 독서와 영화감상이 가능한 모둠 학습실 조성 ▶ 휴게공간(컴퓨터활용 도서검색대, 음악감상 시설)	2017년
	대덕구	비례초			
부산	영도구	청학초	실내놀이터 조성 ▶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 학생들의 신체발달에 따른 흥미를 고려하고건강도 증진하기 위해 킨볼, 스캐터볼, 닷지볼,스피드 스택과 점보스택, 소프트 폴로와 라켓론	2016년	
	12개 초등학교		휴식과 놀이가 있는 학교 만들기	▶ 미세먼지, 추위와 더위, 우천시를 대비한 실내놀이터 조성	2018년 조성

참고 2 수원시에서 조성한 청개구리 연못



# 수원청소년자유공간 청개구리 연못

## 세류중학교

청소년들에게 놀이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이용대상**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시설**  
북카페 |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 밴드연습실 | 편치방



**이용방법**  
안내데스크 접수 후  
무료이용

**이용시간**

구분	화-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법정공휴일	휴관일
3~12월	11:00~20:00	09:00~18:00	09:00~18:00	월요일, 명절연휴
겨울방학(1~2월)	09:00~18:00			

사진으로 보는 청개구리 연못(세류중학교)



청개구리 연못(세류중)



북카페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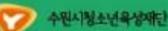


편치방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031-898-8120 | 주소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31번길 6(세류중학교 1층)






**2. 수원시 핵심리더양성과정  
제4기 제2조**

**주민 밀착형 독서환경 조성 방안**

■ **추진 배경**

- 공공도서관 확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도서관 건립 수요 발생
  - 2017년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조사결과 보다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시민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 독서 진흥을 위해 '2018 책의 해' 공식 지정
  - 교육부, 올 해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한 권 책임기\*' 시작
  - 독서 선도 지자체는 조례제정과 다양한 독서 활성화 정책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정책적 측면
  - 독서동아리에 대한 소극적 지원과 도서관별로 활동 중인 동아리 네트워크 미형성으로 독서활성화 주춤
  - '독서문화 진흥조례' 미제정으로 제도적인 독서 활성화 추진동력 취약
  -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부족, 독서정보 제공 미흡
  - 전자적 형태의 독서 환경제공 미흡, 도서관 홈페이지의 사용자 친화성 미흡
- 인프라 측면
  - 도서관 수는 두배 이상 늘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
  - 새마을문고 등 수원형 작은도서관의 정보 공유부족
  -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 미흡, 전담조직 미설치, 지원 예산 부족
- 문화적 측면
  - 책을 읽지 않는 분위기 확산으로 독서인구 감소와 개인주의 심화
  - 즐거운 책임기가 아닌 성과위주의 독서정책으로 인한 흥미감소
  -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생활 속 독서환경 미흡이 낮은 독서율 초래

■ **개선 방안**

- 독서지원 정책 강화

- 함께 읽는 공감 독서의 즐거움, 독서 동아리 활성화
  - 독서 동아리 사전등록제 실시, 독서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및 독서 동아리 컨설팅 등 지원
- 독서진흥 조례 제정 등 독서진흥 기반 조성
  -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보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맞춤형 독서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니어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독서 관련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
- 독서 인프라 내실화
  - 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새마을 문고를 독서 카페로 변화 촉진
    - 작은도서관 변화를 통해 지역 독서문화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지원
  -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 유도
    - 시(市) 차원의 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 개방함으로써 부족한 공공도서관 문제 해결
- 독서 문화 조성
  - 생활 속 독서문화 정책으로 책 읽는 즐거움 확산(책읽는 거리, 무인책방, 호숫가옆서가 등 설치 운영)
  - 독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독서마일리지” 도입운영

## I. 추진 배경

- 공공도서관 확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도서관 건립 수요 발생
  - 2018년 시립도서관 19개, 2014년 이후 10개 도서관 새로 개관
    - ※ 2016년말 기준 공공 도서관 예산 약 224억원 규모(수원시 통계DB)
  - 2017년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조사결과 보다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 공공도서관의 양적 확대와 함께 주민 밀착형 독서환경 조성 필요
- 시민 생활 속 독서 붐 조성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 ○ 2차 인문도시 조성사업(2014~2018)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는 지자체의 독서 붐 조성이 전제되어야 가능
  - \* 2014-2018년 독서대전 개최도시: 군포, 인천, 강릉, 전주, 김해
-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 독서 진흥을 위해 ‘2018 책의 해’ 공식 지정
    -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독서율 제고를 위해 올 해를 ‘책의 해’로 지정하고서 독서 진흥 사업 적극 시행
    - 2017년 성인 10명 중 4명이 일년 동안 책을 1권도 읽지 않았으며 1994년 이후 성인 독서율 최하 기록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
  - 교육부, 올 해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한 권 책임기\*’ 시작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에 처음으로 삽입된 단원으로 한 학기동안 한 권의 책을 온전히 읽고 생각을 나누며 표현하는 독서 수업의 일환
  - 독서 선도 지자체는 조례제정과 다양한 독서 활성화 정책 추진
    - 현재 109개(광역 11, 기초 98)의 지자체가 독서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독서 활성화 사업 추진

▶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의 핵심과제인 시민 독서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 중심의 현실성 있는 독서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II. 현황 및 문제점

### 1. 정책적 측면

▶ 시민 중심의 독서동아리 지원이 미미하고, 지원 근거(조례)의 부재와 평가 시스템 및 체계적인 독서지원 프로그램 발굴 부족

- 시민 독서동아리 확산에 필요한 지원 부족
  - 독서동아리에 대한 소극적 지원과 도서관별로 활동 중인 동아리 네트워크 미형성으로 독서활성화 주춤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 중인 독서 동아리의 실태파악 및 지원 미비\*, 생명력이 낮은 단순 취미모임 등으로 전략 위험

- 도서관에서는 동아리 활동 장소 제공 위주,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우수동아리는 중앙 경진대회 참여 권유(수상할 경우 국비 예산 지원 혜택)

〈수원시 독서동아리 등록 현황: 90개/9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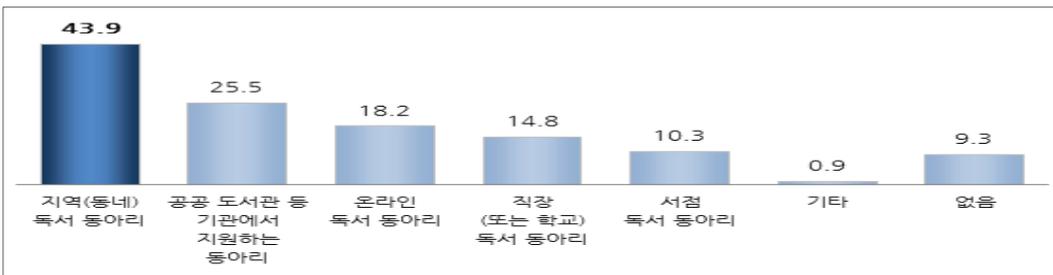
(단위 : 동아리수/회원수)

선경	중앙	창릉	화서다산	호매실	서수원	한림	버드내
3/45	2/25	2/19	8/72	16/127	4/44	19/196	2/25
북수원	대추골	일월	광고홍재	영통	태장마루		
7/59	7/96	5/46	3/20	6/49	6/91		

- 공립도서관 활동 동아리 기준
  - (타시 동아리 등록 현황) 서울 관악구: 469개, 성남시: 669개
- 지역(동네), 공공도서관, 직장을 중심으로 결성되는 독서동아리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 독서환경 조성 시급

〈참여하고 싶은 독서 모임(성인)〉

(단위 : %)



(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 독서 활성화 지원의 제도적, 자체평가 시스템 부재
  - ‘독서문화 진흥조례’ 미제정으로 제도적인 독서 활성화 추진동력 취약
    - 전국적으로 109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시행
  -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 부재
    -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원시 독서문화 저변 확대 미흡(예: 정부차원의 독서실태 조사)
    - 각 도서관에서 독서관련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인 분석 평가를 통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함.

- □ 독서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
  -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부족
    - 독서생활화 및 다양한 매체와 연계한 독서운동 전개 미흡
  - 독서정보 제공 미흡
    - 독서 활동 지원, 독서 동아리,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정보의 홍보 부족으로 독서 활성화 사업의 효율 저하
  - 전자적 형태의 독서 환경제공 미흡
    -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자책,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독서문화 부족
  - 도서관 홈페이지의 사용자 친화성 미흡

## 2. 인프라 측면

▶ 공공도서관의 양적인 확충에도 시민들의 독서 인프라 체감도가 낮고 접근성이 좋은 생활속 작은 도서관은 홍보부족과 공공도서관과의 시스템 연계성이 떨어져

- 도서관 수는 두배 이상 늘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
  - 2014~2016년 8개 도서관을 신규개관하였으나 도서관 건립<sup>2)</sup>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들은 오히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4.5% → 2017년 10.2% <2017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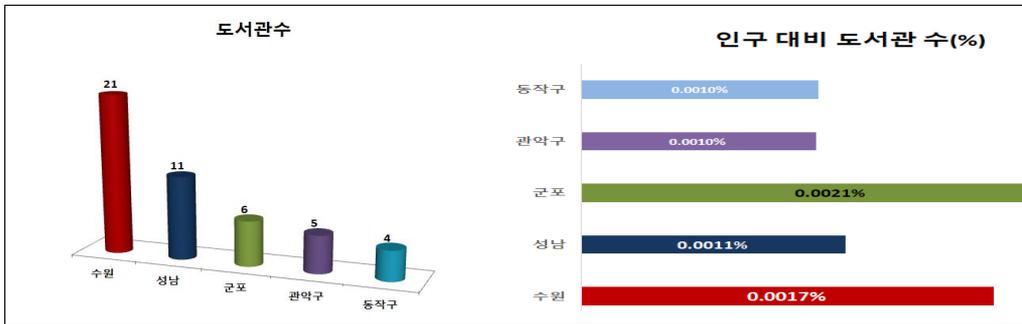
〈수원시립 공공도서관 증가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도서관 수	5	6	12	13	14	16

- 어린이도서관 3곳(슬기샘·지혜샘·바른샘) 제외
- 대부분 시민들은 ‘독서 및 도서대출’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독서 욕구 충족 없이는 도서관 증가를 체감하지 못함
- 시민들은 ‘걸어서 10분 거리’ 작은도서관 조성 및 공공 도서관 건립 등이용자 중심의 접근하기 편리한 곳의 도서관 요구
- (이용현황) 공공도서관 81.4%, 작은도서관 14%, 어린이도서관4.4%,기타 0.2% (이용이유) 독서및 도서대출 65.1%, 학교공부 21.0%, 취업 8.3%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도서관수 : 50,000명 당 1개소

〈공공도서관 인프라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 새마을문고 등 수원형 작은도서관<sup>3)</sup>의 정보 공유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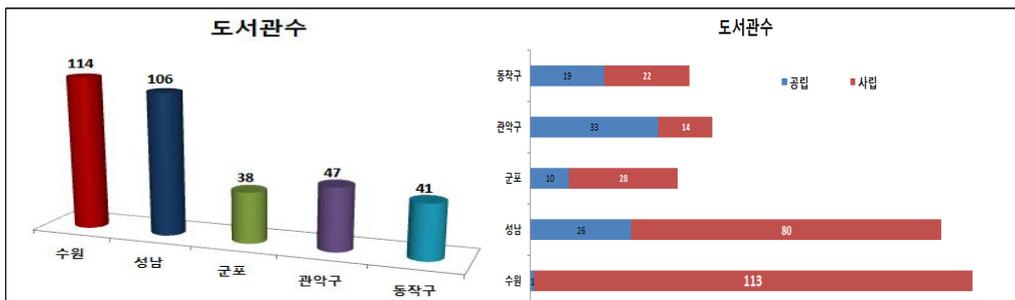
-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되고 운영 중인 동별로 설치된 49개 새마을문고는 도서관사업 소가 아닌 별도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어 운영시스템의 이원화로 비효율 초래

〈작은 도서관 등록현황〉

구 분	계	새마을문고	종교시설	아파트	개인/단체	법인
도서관수	130	49	28	32	17	4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상호협력망 구축
  -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앱,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홈페이지 자료 미연동
  - 회원증 통합, 도서대출, 도서검색 등 시민들이 도서관(작은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 미비
  - 서울시 관악구도서관통합시스템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연계운영

〈작은도서관 인프라 현황〉



\*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2016년 말 기준

3) 수원형 작은도서관

수원시의 지원과 작은도서관 운영상의 협조로 작은도서관의 한계를 극복하여 발전적인 도서정보 및 대출반납서비스의 제공, 평생교육센터의 기능, 커뮤니티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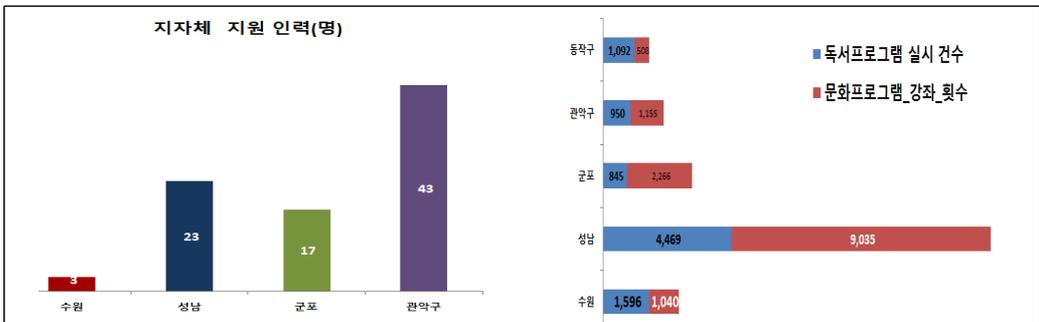
■ □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 미흡

- 학교도서관은 주민 접근성이 뛰어나 도서관 인프라 문제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나 개방 학교는 줄어드는 추세임
- 2017년 10개교 → 2018년 5월 현재 개방학교 없음
- 야간 개방에 따른 학교 보안 문제, 홍보부족으로 인한 이용율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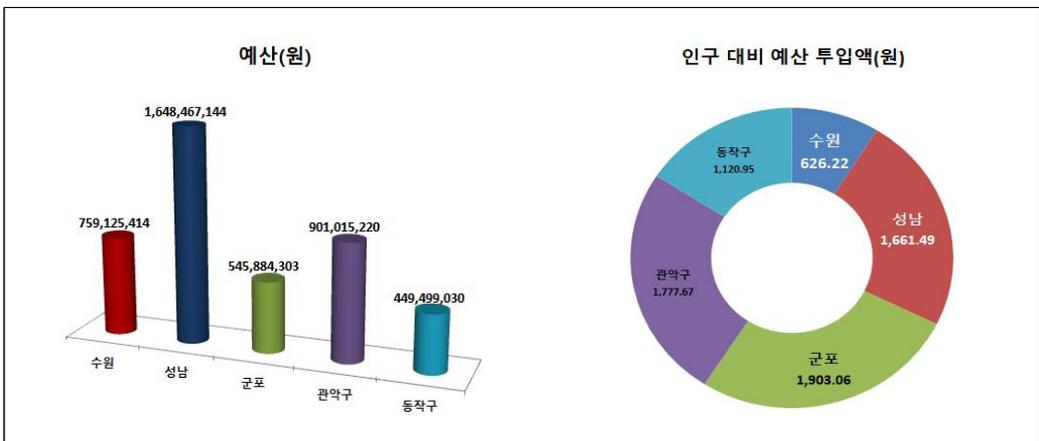
■ 전담조직 미설치, 지원 예산 부족

- 체계적인 독서문화조성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부재 및 예산부족
- 성남시는 재단설치를 통해 시민독서 활성화 사업 추진, 서울시 관악구와 송파구의 경우 전담팀 설치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예산 현황〉



### 3. 문화적 측면

▶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서를 선진국(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과 달리 개인적인 측면 에서 바라봄으로써 생활주변에서 보다 나은 독서환경을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음

- 책을 읽지 않는 분위기 확산으로 독서인구 감소와 개인주의 심화
  - 인터넷, 게임, TV, 영상 등 오락 위주의 감각적인 매체환경에 따른 독서 흥미 감소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16년 10월 ~ 17년 9월) 동안 종이책(교과서, 참고서를 제외한 일반도서)을 ‘한 권 이상 읽었다’는 비율은 59.9%로 지난 2015년(65.3%)에 비해 5.4% 하락<sup>4)</sup>
  -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적·정신적 여유 부족으로 인한 독서율 감소
  - 스마트폰의 일상적 이용 등으로 독서에 투여하던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
    - 성인의 독서 장애 요인은 ‘일(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2.2%), ‘휴대전화 이용, 인터넷, 게임’(19.6%), ‘다른 여가활동’(15.7%) 등으로 나타났고, 학생은 ‘학교나 학원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29.1%),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21.1%), ‘휴대전화, 인터넷, 게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응답자의 59.6%는 본인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sup>5)</sup>

〈독서 장애 요인(성인·학생)〉

(단위 : %)



- 즐거운 책읽기가 아닌 성과위주의 독서정책으로 인한 흥미감소
  - 독서열풍이 아닌 행복한 삶을 위한 독서문화의 부재<sup>6)</sup>

4), 5)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2017.12.

6) 김영미, 「독서열풍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독서문화가 필요하다」, 디지털도서관 2014년 봄호(통권 제73호), 2014.

- 책을 읽는 것이 재미있는 것임을 먼저 알기도 전에 책읽기를 강요하는 독서문화의 피로도 가중
  - ‘KBS 독서왕 대회’ - 2013년 4월 15일부터 학교단체 시험 응시자 접수를 시작했다가 독서 교육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5월 6일 프로그램편성에서 제외
  - 즐거운 책읽기가 아닌 성적향상, 대학입시 등 실적과 연계된 수단으로 독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 팽배
  - 독서가 즐거움, 정신적 공감 등과 같은 유희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보다는 ‘지식 함양’이라는 결과로만 인식
  - 성과위주의 독서정책으로 인해 책읽기의 목적이 수단화되면서재미있고 즐거운 독서의 본질 왜곡
-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생활 속 독서환경 미흡이 낮은 독서율 초래
- 직장, 마을, 지인, 학부모 등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생활 속 자연스러운 독서환경 미흡
  - 성인 10명 중 7명, 학생 10명 중 5명은 평소 주위사람들과 독서 관련 대화를 하지 않고, ‘직장에 도서실, 독서활동, 독서 프로그램 등이 전혀없다’는 직장인이 87.3%로 직장 내 독서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sup>7)</sup>
  -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동아리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91.7%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9.3%)에 비해 독서 동아리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음.<sup>8)</sup>

7)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2017.12.

8)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2017.12.

### III. 목표 및 전략

비전	책의 도시를 바탕으로 인문학 중심 도시 완성		
목표	2020년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수상		
전략	독서지원 정책 강화	독서인프라 내실화	독서문화 조성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진흥조례 제정 -맞춤형독서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활성화 -학교도서관 개방 -조직신설 및 예산확대	-하루10분 책읽기 캠페인 -독서마일리지 도입 -무인책방 운영

### IV. 개선 방안

#### 1. 독서지원 정책 강화

- 함께 읽는 공감 독서의 즐거움, 독서 동아리 활성화

#### 〈독서동아리 개요〉

- 정의: 15명 내외의 일반인들로 구성되는 모임으로 자율적 참여를 통해 정기적으로 책을 읽고 해당 책에 대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갖는 모임 혹은 활동
- 주요활동: 독서, 독후(토론), 창작(쓰기), 교수(교육), 독서치료, 독서봉사 등
- 독서프로그램: 독서행사, 독서 캠페인, 독서교육, 독서치료, 독후활동 등

- 독서 동아리 사전등록제 실시
  - (대상) 독서토론 등 독후활동을 위하여 5명 이상의 회원이 월 1회 이상의 정기모임을 가지는 동아리
  - (방법)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에 등록
- 독서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 (대상) 사전등록된 우리시 관내 독서동아리
- (지원금액) 동아리 당 30만원 ~ 50만원 이내
- 참여인원, 모임주기, 활동계획 등을 검토하여 차등 지원
- (지원방법) 활동계획서 공모 후 심사선정
- 독서 동아리 컨설팅 등 지원
- (대상) 사전등록된 독서 동아리 (활동비 지원대상 동아리 필수참여)
- (내용)
  - 독서 동아리 조직, 운영사례, 회계교육 등 실시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을 거점으로 동아리 모임 공간 지원
  - 동아리 활동 및 회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 독서서평 및 감상문 DB, 도서관리시스템과 연계 등
  - (가칭)‘독서 동아리 한마당’ 행사 지원
- 독서진흥 조례 제정 등 독서진흥 기반 조성
  -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
  -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보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조례내용)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맞춤형 독서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니어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 고령자를 위한 대활자본, 확대독서기 등의 자료와 기기 장비 정비
    - 도서관 이용시 도우미, 대면낭독, 택배서비스 등 구체적 서비스 제공
  - 독서 관련 온라인 플랫폼 운영
    - 개별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행사’, ‘지역서점 위치’ 등 정보를 도서관사이트에 구현
  - 스마트도서관 운영
    - 청장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시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도서 대출/대납이 가능한 책 자판기

## 2. 독서 인프라 내실화

- 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새마을 문고 독서 카페 변화 유도
  - 현재 동주민센터 개별적 추진에서 시 차원의 로드맵 마련 필요
  - 작은도서관 활성화로 지역 독서문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전문성)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및 도서관별 사서지정 운영. 연무동 새마을문고 사서자격증 보유 매니저 채용 사례
    - (접근성) 동주민센터에서 분리된 카페형태의 별도 공간 확보. 세류1동 새마을 문고는 현 위치 변경 후 이용자 수가 2배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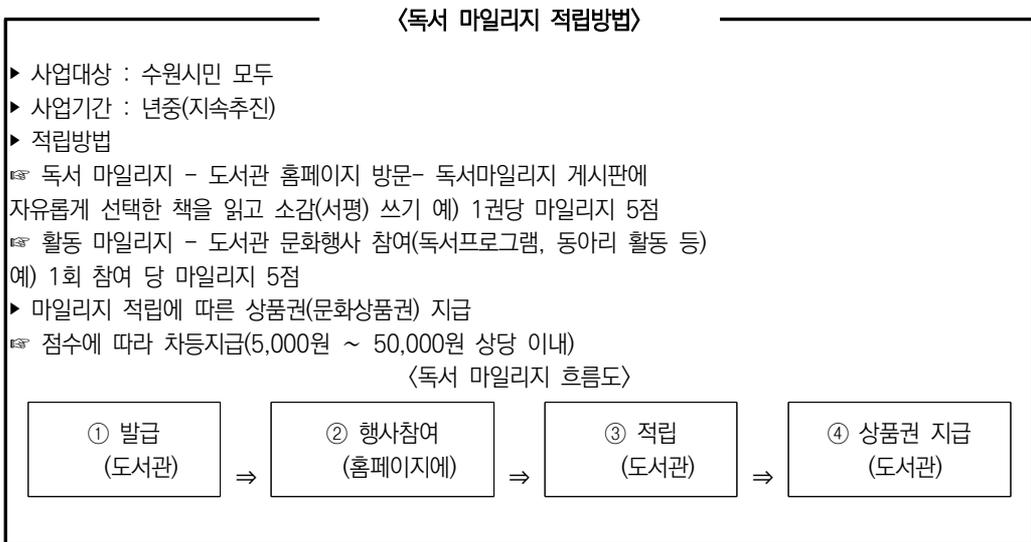
- 작은도서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서관리 프로그램 지원
  -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앱,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자료 연계하는 도서시스템 구축 (예: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시스템)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운영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 운영예산 차등 지원

-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 유도
  - 시(市) 차원의 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 개방함으로써 부족한 공공도서관 문제 해결
    - 주민수요가 많고 누구나 접근이 양호한 위치로 추가 시설투자 없이도 지역 도서관으로 활용
    - 서울시 송파구는 독서전담팀 구성 후 학교 설득, 7개 학교를 주민에게 개방

## 3. 독서 문화 조성

- 생활 속 독서문화 정책으로 책 읽는 즐거움 확산

- 책읽는 거리, 무인책방, 호숫가옆 서가 등 설치 운영
  - 다중 집합장소 내에 책을 접할 수 있는 ‘한평 책공간’ 마련
  - 직장 가정에서 ‘하루 10분 책 읽기’ 캠페인 추진
  - 하천, 호수, 산책로 등에 ‘무인책방’ 운영
- 독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독서마일리지” 도입운영
  - 독서활동을 통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
  -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조성



## V. 기대 효과

- 독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19년 이후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발판 마련
- 시민과 도서관이 함께하는 독서동아리 지원을 통해 급격한 도심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철학 재정립으로 독서를 통한 평생교육의 방향 설정
-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생활속 독서 정책으로 지역공동체 기반의 시민참여형 독서환경 조성
-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독서동아리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 독서를 통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

### 3. 수원시 핵심리더양성과정 제4기 제3조

## 수원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

- 추진 배경
  - 일시적 보육 공백에 대처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요구는 매년 증가
    - 수원시 이용현황: 2016년 28,674건, 2017년 31,511건(전년대비 9.9% 증가)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율: 2018년 57%
  - 수원 시민의 정부 4대 복지 시민권인 육아 복지권의 실현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문  
제점은 서비스 연계율 저조(57%)라고 보고 서비스 연계 율을 90% 이상으로 높여 돌봄  
이 필요한 모든 저소득층 가정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
- 현황
  -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수원시 건강가정센터(2018년 예산: 1,521백만원)
  - 수원시 아이돌봄 서비스 현황
    - 회원 현황: 총 8,872명(2018. 3월말 기준)
    - 서비스 이용 현황(건수): 2016년 28,674건 → 2017년 31,511건
    - 2016년 대비 9.8% 증가
    - 서비스 연계율(2018. 1~4월): 57%(신청건수 2,086건, 연계건수1,197건)
    - 돌보미 현황(2018. 3월 기준): 170명(실제 활동 133명)
- 문제점
  - 돌봄서비스 이용자
    - 소득층 정부지원 시간 부족(연간 600시간)
    - 서비스 연계율 저조(57%)
    -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불편
    - 정부 지원이 없는 「라」형 이용자 증가(총 이용 가구의 64%)
  - 돌봄 종사자
    - 저임금과 낮은 처우로 사기저하(시급 7,800원)
    - 부모와의 마찰에 따른 감정노동의 어려움
    - 노동자 지위 확보 문제(체불 임금에 따른 소송 진행 중)
  - 제공기관(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악성 민원 상담에 대한 인력 부족
  - 돌봄 종사자에 대한 감독 기능 미약
- 정책목표 및 개선방안
    - 비전 :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육아복지권 실현
    - 목표 : 아이돌봄 서비스의 연계율 90% 달성
    - 전략
      - 우수한 돌봄 종사자 확보
      - 돌봄 서비스 우호적 환경 조성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저소득층 가정 지원 확대로 육아 복지권 실현
    - 중·장년층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1. 추진 배경

- 한 부모, 맞벌이 등으로 일시적 보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 돌보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매년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음.
  - 아이돌봄 서비스 현황(전국)
    - 제공기관 : 2009년 203개소 → 2017년 222개소- 이용자 현황 : 2013년 51,393가구 → 2015년 57,687가구 → 2017년 63,546가구
    - 돌보미 현황 : 2013년 16,393명→2015년 17,553명→2017년 20,878명 (www.idolbom.go.kr/intro/index2.go)
-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원하는 모든 가정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원시 아이돌봄 서비스 현황
    - 회원 현황 : 총 8,872명(2018. 3월말 기준)
    - 서비스 이용 현황(건수) : 2016년 28,674건 → 2017년 31,511건
    - 2016년 대비 9.8% 증가
    - 서비스 연계율(2018. 1~4월) : 57%(신청건수 2,086건, 연계건수1,197건)

- 돌봄미 현황(2018. 3월 기준): 170명(실제 활동 133명)
- 수원 시민의 정부 4대 복지 시민권인 육아 복지권의 실현을 위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매우 중요함. 수원시에서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가정이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고 예산은 20% 증가하고 있으나 신청하는 가정의 57%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음. 본 과 제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문제점은 저조한 연계율이라고 보고 서비스 연계율 90% 이상으로 높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저소득층 가정 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II. 현황

### ■ 수원시 돌봄서비스 운영현황

- 운영방법 : 위탁운영

운영기관 (수탁기관)	위탁기간	소재지	인력 현황 (2018. 3월 기준)	
			전담인력	아이돌봄미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수원가정지원센터	2018.1. 1 ~2020.12.31.	팔달구 향교로 161 우림빌딩 6층	3명	170명 (실제활동:133명)

- 예산 현황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예산액	1,004백만원	1,209백만원	1,521백만원	국:70% 도:15% 시:15%

- 예산(국비)은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각 시, 도로 1차 배정 후 경기도에서 각 시, 군으로 2차 배정 . 매년 20%씩 예산 증가

### ■ 수원시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 연도별 돌봄 서비스 연계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비고
건 수	28,674건	31,511건	

9)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제공된 자료로 2018년 자료는 1월부터 4월까지의 자료임.

-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돌봄서비스 연계건수가 9.89% 증가함

○ 소득 유형별 연계 현황

(단위:가구)

계	유형	정부지원형			정부미지원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1,362		294	99	95	874

- 서비스 유형중 정부 미지원형 라형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서비스 이용 아동 연령 현황

구분	만0~2세	만3세~5세	만6~8세	만9~12세
1,740명	692명	497명	413명	138명

- 서비스 이용 아동연령에서 만0-2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만3-5세, 만6-8세, 만9-12세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시설보육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0-2세 아동연령대가 39.77%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시간대별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이용시간)

6~8시	오 전		오 후		저 녀		심 야	
	8~10시	10시~12시	12시~14시	14시~16시	16시~18시	18시~20시	20시~24시	24시~06시
2,124	1,717	851	986	1,097	3,612	1,111	183	14

-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는 저녁 16-18시와 아침 6-8시에 주로 이용됨을 알 수 있음.

○ 이용가구의 유형

(단위: 가구, %)

계	유형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다자녀	양육부담	일 반
		240가구	49	6	78	36	14
비 율		20.4	2.5	32.5	15	5.8	23.8

-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240가구로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32.5%)와 일반가구 23.8%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8년 서비스 연계율<sup>10)</sup>

(단위: 건)

연도	신청건수	연계건수	미연계건수	연계율
2018년	2,086	1,197	889	57.38%

- 센터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서비스연계가 실질적으로 50% 정도임.
-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출 자료로 연계가 안된 가정은 시스템에서 삭제하여 연계율 100% 유지

## ■ 수원시 돌봄 종사자 현황

## ○ 활동유형별 현황

(2018. 3. 31. 현재)

합 계 (A+B)	활동 돌보미 (A)			3월중 미 활동 돌보미 (B)
	종일제	시간제	중복활동	
170명	24명	121명	12명	37명

## ○ 연령별 현황

합 계	40세이하	41~50세	51~60세	61~65세	65세 초과
170명	1명	27명	114명	25명	3명

- 연령별 현황을 보면 51세 이상 60세의 돌보미가 전체의 67.1%임.

## ○ 돌보미 수입 현황 (2018. 3월)

유 형	인 원	시 간	지급액	1인당 평균시간	1인당 평균지급액
계	133명	16,337시간	177,647천원	123시간	1,335천원
시간제	121명	11,657시간	135,485천원	96.3시간	1,119천원
육아종일제	24명	4,680시간	42,161천원	195시간	1,756천원

- 12명은 시간제, 육아 종일제 중복 활동

10) 해당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집계한 자료로 2017년 이전연도 집계자료는 없음

■ 민간 돌봄서비스 현황

① YWCA 아이돌봄사업 (비영리기관)

- 이용 방법 : 신청은 전화로 가능
- 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이 불가함으로 돌보미 인터넷신청이 불가함.
- 서비스 내용 : 이유식(간식)만들기, 목욕시키기, 신체활동 등 아이와 관련된 활동
- 돌보미 현황 : 70명 내외
- 서비스 유형

구분	요 금
반나절(4시간)	36,000원
종일(8시간) 9시~6시/휴게시간포함	80,000원
비 고	큰아이 추가 : 1만원, 시간추가 : 9천원, 일요일 및 공휴일 : 1만원 오전8시이전, 오후 8시 이후 추가요금 : 시간당 13,500원 4시간 미만이용시 : 시급에 교통비 지급

-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음

② 베이비시터 전문 기관 『마음으로』 (영리기관)

- 이용 방법 : 기관 등록 및 상담후 인터넷 및 유선으로 신청가능
- 서비스 내용 : 우유먹이기, 목욕시키기, 신체활동 등 아이와 관련된 활동
- 돌보미 현황 : 〇〇명
- 서비스 유형

구분	요 금
기본시간(4시간)	42,000원 (시간당 추가 8,000원)
기본요금적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비 고	아이 2명 : 월 20만원 추가 , 쌍둥이(3명) : 월 30만원 추가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1일 10,000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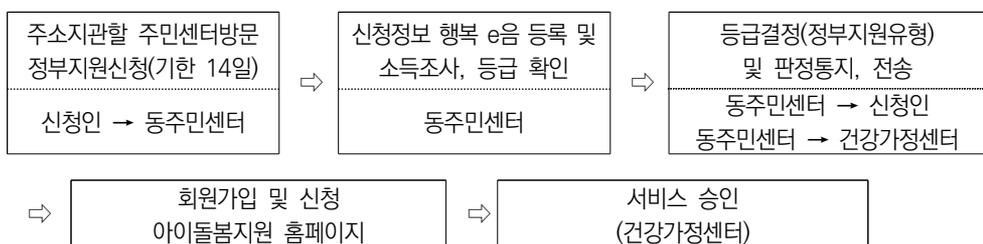
-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음

### III. 문제점

#### ■ 이 용 자

- 정부지원 시간 부족
  - 정부지원 대상인 가, 나, 다 유형은 시간제 돌봄 연간 서비스 이용 시간이 6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음. (2017년 480시간에서 확대)
  - 600시간은 월 50시간이며 월 평일기준 20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1일 2.5시간이 된다. 정부 지원 가정은 한 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으로 낮은 귀가 등으로 야간시간대에 해당 서비스가 꼭 필요함
  - 수원시 건강가정센터 담당팀장은 600시간은 연간 이용시 10개 월 정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돌보미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아동과 밀접한 유대가 있어 다른 사람이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함.
- 연계율 저조 (2018. 1~4월 연계율 57.38%)
  - 특정시간(오후 16~18시, 오전 6~8시)대에 신청자가 많아 연계가 어려움.
  - 단시간 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새벽 및 심야시간은 돌보미가 활동을 기피 (15,600원 / 2시간 1명 돌봄 시)
  - ⇒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지침상 시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교통비는 미지급이 원칙임. 우리시는 교통비의 경우는 수원시 자체적으로 일부지역(호매실, 광고 등)에 지급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에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불편<sup>11)</sup>
  - 정부지원 대상자(가,나,다 유형)의 경우 지원신청 후 지원판정까지 평균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서비스 신청 후 돌보미의 기피(단시간, 교통불편 등)로 연계가 안 되는 경우 있음.

#### <현행 신청절차>



11) 서비스 이용자 인터뷰 결과 반영

- 신청 시 동 주민센터 처리기한은 14일로 기간이 늦어짐.→ 동 복지 담당자에게 아이돌봄 등급 신청은 부수 업무로서 정규시간에는 민원을 처리하고 초과 근무 형태로 처리되는 실정임.
- 정부지원이 없는 「라」형 이용자 증가
  - 아이돌봄 서비스는 2011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2년부터 모든 가정으로 확대되었음. 수원시의 경우 라형 이용가구가 64%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기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 생각됨.
    -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7,800원
    - YWCA(비영리기관): 시간당 9,000원
    - 『마음으로』(영리기관): 시간당 1,050원
  -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라형의 지속적인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음. 돌봄 종사자도 환경이 좋은 「라」형 가정을 선호하며 저소득층 가정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아이 돌봄 서비스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지금과 같이 계속 확대되면 보육원, 유치원, 방과 후 학교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민간 영역의 영리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돌봄 종사자

- 저임금과 낮은 처우로 사기저하<sup>12)</sup>
  - 수원시 돌봄 종사자의 수입은
    - 활동수당: 유형에 따라 시간당 7,800원, 8,580원, 10,140원.
    - 교통비: 호매실동, 의의동, 하동 등 12개동 3시간 이상 1만원 율천동, 이목동, 금곡동 실비(2,600원) 지급.(2014년까지 교통비 5,000원 일괄지급 2015년 폐지 후 신설)
    - 활동지원비: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 활동 월 10만원.
    - 시간제 1년 이상 활동 활동수당의 10% 가산
    - 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적용, 1년 이상 활동 퇴직금
  - 종사자의 월 평균 수입은 시간제 112만원, 종일제 175만원으로 30일 기준으로 시간제 3.2시간, 종일제 6.5시간의 고강도 노동으로 젊고 우수한 인력이 생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함.
  - 월 평균 1백만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100시간의 활동이 필요하며 시간제 시급 7,800원은 최저임금 7,530원 수준이며 원시 생활임금 9,000원에도 못 미치는 실

12) 아이돌봄 서비스 돌보미 인터뷰 결과 반영

정임.

- 부모와의 마찰에 따른 감정노동의 어려움<sup>13)</sup>
  - 서비스 이용가정에서 아이돌봄 외에 가사활동(청소, 설거지 등) 까지 무리한 요구가 있음,
  - 종사자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용가정 부모와의 육아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마찰 발생
  - 이용자 불만(민원) 접수에 의한 사기 저하
  - 사례1) 근무시간 끝나고 시간을 넘겨서 부득이 활동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모든 책임을 돌보미에게 전가
  - 사례2) 아이와 친밀감이 깊어져 퇴근시간에도 아이와 놀아준 것을 문제 삼아 교체 요구
  
- 노동자 지위 확보 문제
  - 여성가족부는 돌봄 서비스는 건강가정센터로 위탁 관계로 보아 돌봄 종사자에 대하여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 현재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 과거의 체불임금(연, 월차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돌보미 노조의 제소로 전국 건강가정센터와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 중임.(2018. 5. 22.(목) kbs 9시 뉴스 방송)
  - 노동자 지위를 확보하면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연차, 월차 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함.
  
- 제공 기관(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악성 민원 상담 어려움
    - 돌봄 서비스 신청지연, 연계지연 및 미 연계에 대한 항의 민원이 빈번하고 악성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많은 시간 소요.
    - 악성 민원 상담은 시에서 직접 처리 필요
  - 돌봄 종사자에 감독 기능 미약
    - 돌봄 종사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어 기피지역이나 가정에 임의 배치가 힘들고, 민원 발생 시 조치에 한계가 있음.
    - 미 활동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 없음.

13) 아이돌봄 서비스 돌보미 인터뷰 결과 반영

- 업무처리 과중
  - 보건복지부의 행복 e음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여 정부 지원 확인을 전화로 개별 확인.
  - 4대 보험, 활동수당 지급 등 각종 업무의 수작업 처리로 업무 폭증
  - 돌봄 종사자 소송 제기로 소송 수행 업무 가중

## IV. 정책목표 및 개선방안

### □ 정책 목표

비 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육아복지권 실현		
목 표	아이돌봄 서비스의 연계율 90% 달성		
전 략	우수한 돌봄 종사자 확보	돌봄 서비스 우호적 환경 조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근무시간 도입</li> <li>- 기본급 도입</li> <li>- 교통비 일괄 지급</li> <li>- 연,월차 수당 지급</li> </ul> </li> <li>• 교육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수당 지급</li> <li>- 힐링교육 도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 지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불임금 지급</li> <li>-노동3권 보장</li> </ul> </li> <li>• 센터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 인력 증원</li> <li>-돌보미 관리기능 강화</li> <li>-추가 공간 확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절차 간소화</li> <li>• 저소득층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시간 확대</li> <li>- 라형 이용 제한</li> </ul> </li> </ul>

### ■ 개선방안

- 우수한 돌봄 종사자 확보
  -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 월 의무근로 시간 60시간
    - 기본급 300천원 지급
    - 교통비 5천원 일괄 지급

- 연, 월차 수당 지급

유 형	현 행	개 선	비 고
연, 월차 수당	없 음	지 급	
기본급	없 음	월 300천원 지급	
의무 근무시간	없 음	월 60시간	
4대보험	월 60시간근무 4대 보험 1년 이상 활동 퇴직급여	모두 적용	
교통비	12개동 3시간이상 1만원 3개동 실비(2,600원)	일괄 5천원 지급	
활동수당 활동지원비	시간당 7,800원 ~ 10,140원 월 10만원, 10% 가산	동 일	

- 교육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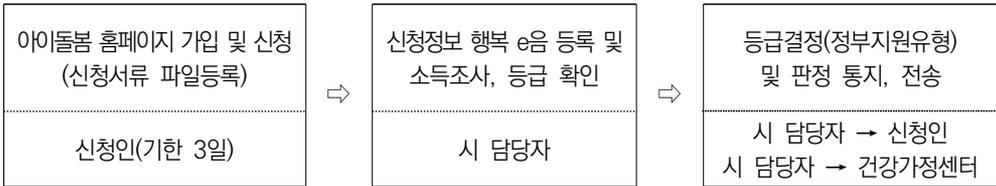
- 현장에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실시(교육 수당 제공)
- 감정 노동에 따른 힐링 교육 도입(연간 3일 정도)

- 돌봄 서비스 우호적 환경 조성

- 노동자 지위 인정
  - 2018.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돌봄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체불임금(연, 월차 수당)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짐.
  - 현재도 4대 보험이 지급되고 있어 연, 월차 수당을 추가 확보 하면 근로자 지위로 인정하는데 걸림돌은 없음
    - 광주 지법의 1심 판결 후 여성가족부에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 발표
  -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노동3권 보장
-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 강화
  - 센터 담당 인원 추가 채용
    - ☞ 현재 돌봄은 3명이 담당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돌봄 종사자를 200명까지 늘리는데 관리 인력 1명 추가 채용 필요
  - 여성가족부 지침: 담당자는 종사자 50명당 1명
  - 돌봄 종사자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기능 강화
    - ☞ 돌봄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기능부여
      - 노동자로 하는 근로계약 제도 도입
  - 센터 내 추가 공간 확보

- ☞ 돌봄 종사자 확충 시 현재의 공간 부족
- 교육, 상담 등 추가 공간 필요, 시설 확충 검토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형 신청절차 간소화



- 신청 시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신청 처리
  - 현 시스템은 등급 결정 후 회원등록 가능 시스템 개선 필요
- 건강가정센터에서 복지부의 행복 e음 시스템 사용이 안 되므로 시 담당자가 확인 및 아이돌봄 시스템에 등급 결정 전송
  - 시 담당자 1명 인원 필요
- 저소득층 정부지원 확대
  - 정부지원 시간 확대
    -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으나 시간제 연 720시간으로 확대 필요(현행 연 600시간)
    - ☞ 연 720시간은 월 60시간, 20일 기준으로 1일 3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라」형 이용료 현실화
    - ☞ 정부 지원이 없는 「라」형의 증가를 막기 위해 비영리 기관 수준의 이용료 현실화(시간당 9,000원)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라」형은 민간 영역에 맡기고 긴급 돌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바람직함.

## V.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여성가족부 지침 준수
  -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됨.
  - 돌봄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부 지원 시간 확대, 서비스 신청 절차 개선 등 개선 방안은 모두 여성가족부의 지침 변경이 필요함.

**【해결방안】**

- 여성가족부에 지침 변경 의견 전달
- 자체 해결 가능 방안은 필요예산을 시비로 편성 시행
  - 돌보미 활동시 교통비 일괄 5,000원 지급
  - 시 담당인력 추가 배치 : 1명
  - 건강가정센터 추가 공간 확보
  - 추가 필요예산 - 883,000천원
-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인력 1명 충원
  - 25,000천원 × 1명 = 25,000천원
- 활동 돌보미 인력 충원 (155명 ⇒ 200명)
  - 1,146천원 × 45명 × 12월 = 618,000천원
- 돌보미 교통비 일괄지급
  - 5천원 × 200명 × 20일 × 12월 = 240,000천원

**VI. 기대 효과**

- 저소득층 가정 지원 확대로 육아 복지권 실
  -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 시간 확대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 중·장년층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경력 단절 여성에게 경제 활동 기회 제공

<b>참고 1</b>	<b>경기도 아이돌봄사업 현황<sup>14)</sup></b>
-------------	------------------------------------

■ 사업개요

-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 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4개 서비스(시간제, 종일제, 종합형, 보육교사형) 제공
    - 시간제 : 만3개월 ~ 만12세 아동 / 종일제 : 만3개월~ 만36개월 영아
    - 종합형(가사추가): 시간제 가정 중 신청자
    - 보육교사형: 영아종일제 이용가구 중 신청자
  - (아이돌보미 양성)
    - 아이돌보미 육성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로 80시간 양성교육 수료자
    - 아이돌봄 양성교육기관 : 4개 기관
    - (2018년) 여성비전센터,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의정부YWCA, 이천YMCA
- 소요예산(2017) : 총 25,021백만원(국 17,515 도 3,782 시군 3,724)

구 분	사 업 량 (개 소)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32개소	25,021,136	17,514,795	3,781,869	3,724,472	
본 청	21개소	17,251,427	12,075,998	2,587,715	2,587,714	
북부청	10개소	7,578,389	5,304,873	1,136,758	1,136,758	
광역거점	1개소	191,320	133,924	57,396	-	

■ 2017년도 추진실적

- 서비스 연계실적 : 종일제 4,399가정, 시간제 74,320가정
  - 본청 : 종일제 3,486가정, 시간제 53,054가정
  - 북부청 : 종일제 913가정, 시간제 21,266가정

※ ('16년 실적) 종일제 3,810가정, 시간제 65,234가정  
 · 본 청 : 종일제 3,044가정, 시간제 46,276가정  
 · 북부청 : 종일제 766가정, 시간제 18,958가정

14)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2018 경기도 돌보사업 현황 제공자료임

- 2018년 추진계획
  - 사업비 (\* 2018년 본예산 기준)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32개소	31,258,080	21,880,656	4,722,919	4,654,505	
본 청	21개소	21,409,552	15,018,680	3,195,436	3,195,436	
북부청	10개소	9,620,482	2,918,138	1,459,069	1,459,069	
광역거점	1개소	228,046	159,632	68,414	68,414	

<b>참고 2</b>	<b>아이돌봄지원사업 주요내용<sup>15)</sup></b>
-------------	------------------------------------

- 아이돌봄 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서비스 유형

구분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보육교사형
이용대상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와 동일	종일제와 동일
서비스 내용	-1일 2시간 이상사용원칙 -정부지원 시간 연간 600시간 이하	-1일 4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 시간 월 120~200시간 이내	-시간제 이용가구 중 아동관련 가사 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 이용 가구 중 교육서비스 제공 -보육고사 자격증 가진 돌보미가 영아 교육 서비스 제공

- 소득별 정부지원 금액
  - 시간제 및 종합형

유형	소득 기준 (4인가족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시간당 7,800원)				종합형(시간당 10,140원)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712천원)	6,240원 (80%)	1,560원 (20%)	5,460원 (70%)	2,340원 (30%)	6,240원	3,900원	5,460원	4,680원
나형	85%이하 (3,841천원)	3,900원 (50%)	3,900원 (50%)	-	7,800원	3,900원	6,240원	-	10,140원
다형	120%이하 (5,423천원)	2,340원 (30%)	5,460원 (70%)	-	7,800원	2,340원	7,800원	-	10,140원
라형	120%초과	-	7,800원	-	7,800원	-	10,140원	-	10,140원

15)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18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 편람 발체내용임.

- (A형) '11.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10. 12. 31. 이전 출생 아동
- 심야 주말 시간당 3,250천원 추가, 이용 시 추가 부담은 본인 부담

- 영아종일제 및 보육교사형

유형	소득 기준 (4인가족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월 156만원, 200시간 기준)		보육교사형 (월 171.6만원, 200시간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712천원)	117만원 (75%)	39만원 (25%)	117만원	54.6만원
나형	85%이하 (3,841천원)	85.8만원 (55%)	70.2만원 (45%)	85.8만원	85.8만원
다형	120%이하 (5,423천원)	54.6만원 (35%)	101.4만원 (65%)	54.6만원	117만원
라형	120%초과	-	157만원 (100%)	-	171.6만원

- 기준 중위소득 :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 차지한 가구의 소득(2018년 중위소득 4,520천원/4인가족)

○ 정부지원 자격

① 1순위 : 취업한 한 부모 가족, 맞벌이 가정

② 2순위 : 장애인 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③ 3순위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1~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④ 4순위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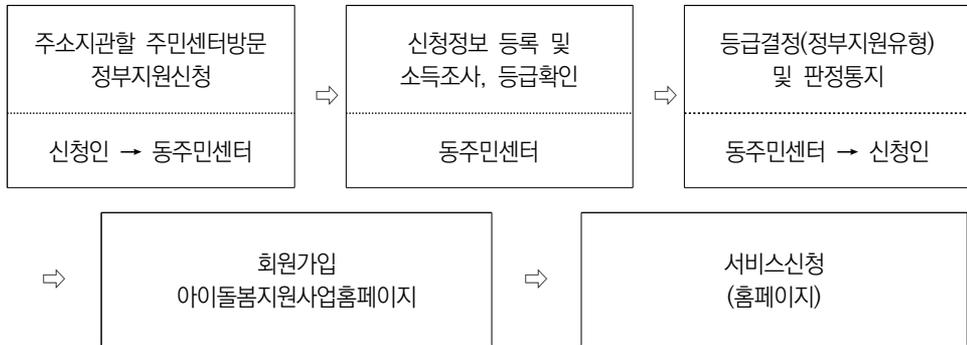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정부지원 대상자 자격 : ① 아동연령, 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기준, ④ 가구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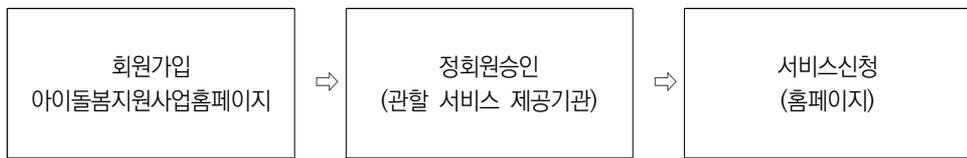
⇒ 상기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짐

-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 정부지원 대상자 ; 가형, 나형, 다형



- 정부지원 신청 후 판정통지까지 한달 가량 소요됨

- 정부지원 미대상자 ; 라형



<b>참고 3</b>	<b>광역거점 담당자 인터뷰 내용</b>
-------------	------------------------

- 일 자 : 2018. 4. 17.(화) 13:30
- 대상자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조경아 여성활동지원 팀장
- 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연혁
    - 수원시 2006년 12월 사업시작. 2008년 아이돌봄 관련법 제정
  - 광역거점도 돌봄 서비스 제공하나?
    -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교육, 예산 배분 등 시군 지원등이 주업무임.
  - 돌봄 종사자의 소송 진행사항은 어떤지?
    - 소송 때문에 3년 동안 사업이 답습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여가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기관, 돌보미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음. 소송이 본격화되어 조만간 소송결과에 따른 추후진척이 이루어질 예정임.

- 돌봄 관련 자료 제공 가능한지?
  - 한국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매년 돌보미와 돌봄가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분석 및 평가결과를 공유하지 않음. 경기도에서도 별도 조사하는 내용은 없음,
  - 조사기관으로 직접 요청해 보아야 할 것임,
- 담당자로서 아이돌봄 사업은 어떤지?
  - 최초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느낌. 돌봄 사업을 중지하고 복지 바우처(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제도)가 낫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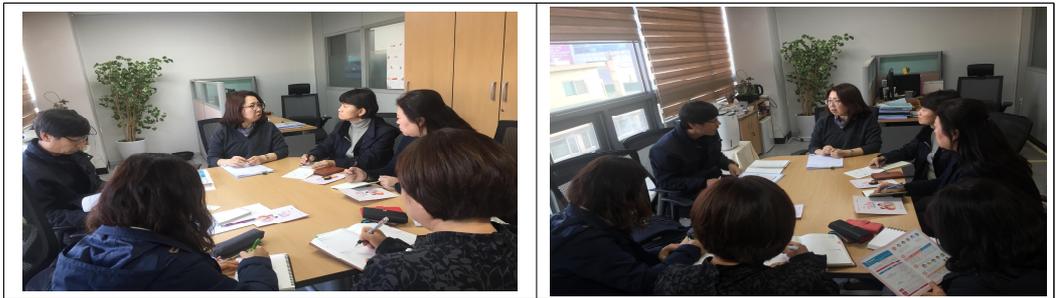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b>참고 4</b>	<b>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인터뷰</b>
-------------	------------------------------

- 일자 : 2018. 3. 22. 4. 24.[대면면담 2회], 전화문의 수시
- 대상자 : 수원시건강가족지원센터 박성희 센터장, 주명화 아이돌봄팀장
- 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연혁
    - 수원시 2006년 12월 사업시작. 2008년 아이돌봄 관련법 제정
  -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본현황
    - 서비스 신청방법·절차, 서비스 유형, 이용요금, 정부지원자격, 예산
  - 수원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 자료
    - 지원실적, 연도별 연계가정 건수, 서비스 연계율(2018.4월)
    - 돌보미 관련 현황: 인원수, 연령별·활동유형별 현황, 수입
    - 이용자 현황: 이용가구 유형, 소득별, 아동 연령별, 시간대별
      - ⇒ 2018. 3월 월보 및 내부 통계자료, 서비스 연계율 전월, 과년도 자료 없음
  - 사업추진 시 문제점

- 이용자 민원: 미연계 가정에서의 항의민원, 돌봄종사자 불만 민원
- 돌봄 종사자 관련
  - 돌봄종사자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 기피지역 임의 배치가 힘들고 미활동자 제재 수단 없음
  - 노동자 지위 인정요구 체불임금 소송 중
- 정책 설계 미흡 : 허술한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 원활하지 못한 사업 진행
- 기타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
  - 돌봄 종사자 인건비 지급 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고 수작업에 따른 업무 과중



〈수원건강가족지원센터〉

<b>참고 5</b>	<b>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인터뷰</b>
-------------	-------------------------

- 일자: 2018. 5. 2.(수)
- 대상자 선정: 수원시건강가족지원센터 제공(개인정보 사전동의)

구 분	거주지역	위탁아동	위탁사유	이용경위
이용자 1	장안구 정자동	8세, 11세	맞벌이, 늦은 귀가	지인소개
이용자 2	권선구 권선동	10개월, 2세	맞벌이	인터넷검색

- 방법: 전화
- 내용
  - 만족한 점
    -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이용경험이 있었으나, 그에 비해 정부지원이 있어 민간에 비해 훨씬 저렴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음
    - 돌보미가 개인적으로 종이접기 등도 배워오셔서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민한 아

이인데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 주시고 돌보아 주심

○ 불편한 점

- 학원강사를 하는데 시험기간 등에 시간 변경 필요시 변동사항을 일일이 전화로 하는 게 불편함.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도 가능하기를 희망
- 정부지원 대상 신청 후 결정까지 한달정도 소요. 동주민센터 전화 시 담당자 통화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인력보강하여 대기시간이 단축 요망

**참고 6**      **아이돌봄 서비스 돌보미 인터뷰**

- 일 자: 2018. 5. 2. 14:10 ~ 14:50 (A), 2018. 5. 2. 9:20 ~ 9:50 (B)
- 대상자 선정: 수원시건강가족지원센터 제공(개인정보 사전동의)
- 방 법: 전화인터뷰
- 질문내용
  - 연령, 근무기간, 하루평균 근무시간, 월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구분	연령	근무기간	일일평균 근무시간	월평균소득	비고
A	53세	7년 (2011~ 현재)	7~8시간 (주말에도 근무)	150만원이상	변○○
B	63세	9년 (2009~ 현재)	5~6시간 (주말에도 근무)	150만원정도	신○○

○ 근무중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A - 생계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근로한다.

- 갈수록 수입이 줄어서(이용자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병행(양다리)할까 고민중이다.

※720시간---- → 480시간(2017년) → 600시간(2018년)

- 쌍둥이를 오래 케어하고 있는데 안아줄 때 팔목이 많이 아프다.
- 아이들의 부모와 양육방식이 다르면 갈등이 생긴다. 돌보미를 믿고 함께 하면 좋겠다. 부모가 미워도 아이들이 예뻐서 활동한다.
- 돌보미를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며 기준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할 때 힘들다.

B - 하고 있는 일에 보람도 느끼고 만족한다.

- 아이를 다루는 문제가 어렵다.
- 엄마와 양육관점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갈등이 생긴다.
- 집집마다 거의 CCTV가 있어서 사생활 침해로 서비스를 꺼리게 된다.
- 아이 4명중 3명(7세,5세,3세)만 신청하고 4학년 큰애는 그냥 봐주는 사례 (순가락하나만 더 없는 맘으로 봐달라... 부모 이용료 부담을 생각해서 승낙)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A - 근로자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 과거처럼 교통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해주면 좋겠다.
- 이용자가정의 서비스시간을 늘려주면 좋겠다. 특히 한부모,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가정보다 많이 위축되어있다. 잘 키우고 싶다.
-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을 와서 보고 결정하라.

B- 보수교육 시 돌보미가 대처할 수 있는 사례별 현장활용 교육위주로 해주세요.

두꺼운 책만 주고 형식적으로 끝나는데 인쇄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애를 좋아하므로 사례교육 위주로.

<사례1>

6세(남), 4세(여) 6세가 밥을 퍼서 바닥에 쏟고 동생을 때릴 때 대처방법

- 혼육할 때 눈을 흘겨도 안되고 큰소리를 내도 안됨,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아빠한테 이른다든 시늉을 해야 그침

<사례2>

아이가 계속 발길질을 할 때, 의자를 끌고 자기 방으로 오라고 명령할 때 대처방법

- 교통비를 골고루 나눠주었으면 좋겠다.(2시간도 교통비 지급)

※광고,호매실동 출장(1인 10,000원) ⇒ 전 동 2,500원씩 4명에게

- 1명을 보기위해 1~2시간 소요해서 2시간 일하면 교통비가 안나온다.

최소한 3시간은 해야 교통비가 나온다. 예전엔 교통비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안나오니까 인근 아니면 안가려고 한다.

- 나는 애국자라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정부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각자의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
- 과거에는 이용자 교육이 있었는데(형식적이긴 하지만) 없어져서 아쉽다.

-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추후라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일하면서 속상했던 사례〉

5일중 4일간 학습지 하는 아이, 주1일은 나가서 함께 노는 것 허락받음,  
이후 아이와 친밀감이 형성되어 퇴근시간에도 아이가 못가게 하자 함께  
놀아주는 것 문제삼고 교체해달라고 민원제기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음

○ 현재 진행중인 임금체불 소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동조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근로자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B - 노조가입도 안했으며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다. 단지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 【참고문헌】

- 김경희,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외대 석사학위논문, 2016.
- 백경희, [울산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2012.
- 여성가족부, [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2018.
- 조주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 234호, 2014.
- 한은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 방향],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2013. 10. 29.
- 허다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현황, 문제점 정책 제언],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2013. 10. 29.

#### 4. 수원시 핵심리더양성과정 제4기 제4조

#### - 행복한 노년을 위한 - 수원시 독거노인 주거복지 활성화 방안

##### ■ 추진 배경

- 독거노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대두
  -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명으로 1965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49년 1,882만명 까지 증가 예상
  - 또한, 탈가족화, 전통적인 부양체계 붕괴, 지역공동체 해체 등으로 1인 세대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 가구도 증가
  - 독거노인 가구의 경제적 빈곤 심화, 자살, 고독사 등 문제 발생
- 독거노인의 신체 여건 등을 반영한 주거정책 지원 필요
  - 노인들은 신체적인 기능약화 및 질병으로 일상적인 보행과 활동이 어려우며 특히, 독거노인이 더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독거노인의 신체적 특성 및 주거욕구를 반영한 주거정책 및 주거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독거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원형 모델 구축 필요
  - 노인을 위한 주거계획 지향점으로 제시된 Aging in Place가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 주거환경의 낮은 질적 수준
  - 주택의 질적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의 비율이 39.6%, 지하거주 비율 11.6%로 수원시 전체가구 평균 3.9%에 비해 매우 높음.
  - 노인가구는 전체 일반가구에 비하여 시설, 안전성, 접근용이성 등 현재 주택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의 주택상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
- 노인의 신체, 기능, 생활 행태에 부적합한 주거공간
  - 노인의 95.4%가 생활하기 불편하거나 노인배려 설비가 없는 주거에 거주하였으며, 독거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불편한 주거 거주 비율이 높음.
  - 독거노인 가구의 전문적인 집수리 필요성 41.2%로 장애인 가구 35.9%, 수원시 평균 27.6% 보다 월등히 높으며 독거노인 가구 52.54%가 주거환경개선을 원하고 있음.
  - 대부분의 노인은 TV 시청, 산책 등으로 여가활동을 보내고 있고, 친목 도모 등을 위해 경로당 이용 및 노인복지관 등 각종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도보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낮음.

-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심화
  -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경제적 불안감을 생활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주거비 관련 지출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음.
  - 독거노인가구의 주거 임차비율은 29.6%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일수록 자가점유율이 낮고 전·월세 임차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수준 낮음
  - 대부분의 노인주거단지나 노인거주시설은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양로원이나 복지 시설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현재, 수원시의 주거복지 정책 현황을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 도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 클린 케어 서비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수원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있으나,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 ■ 정책제안

- 독거노인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내·외부 주거공간 개선 지원사업 추진
  - 독거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내부공간 계획 및 정비
    -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내부공간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동시에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여 심리적, 신체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정비.
    - 특히, 주거개선이 필요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 독거 노인이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안전성과 접근성을 갖춘 외부환경 조성
    - 독거노인 주거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 대지의 형태, 지형, 주거기반 시설의 공급여부, 자연환경 등을 잘 고려
    - 독거노인은 신체적 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빈번한 안전사고 유발, 외부환경에서 독거 노인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장애를 위한 주거시설과 외부환경 조성의 세심한 배려
    - 특히, 독거노인의 대부분은 활동성, 기동성에 취약함을 가지고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거주지역과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과 문화 및 의료복지에 필요한 시설이 집약되어 있어야 하며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

- 셰어하우스로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복지모델 제안

- 공동, 집합주거형 셰어하우스 제공
- 마련방법 : 매입, 공매 등을 통한 5층 이하 단독, 다가구주택
- 대상주택 : 30인 이하 거주 가능한 주택
- 운영주체 : 수원시 사회적기업, 공공단체, 협동조합, 개인

구분 유형	수용 인원	관리인원	입주 형식	내용 및 지원	모델제시
공동주거 복지모델	7인 이내	시설장 사회복지사	임대	공공생활관리비 할인 임대료 보조	예시 1
집합주거 복지모델	30인 이내	시설장 사회복지사 노인돌보미	임대	공동생활관리비 할인 임대료 보조 관리직원 인건비 보조 프로그램 지원	예시 2

- 단지주거형 셰어하우스 제공

- 마련방법 :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시 독거노인 셰어하우스 신축 의무화
  -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을 적용하여 보건복지부와 연계, 시행(노인가구에 일정비율을 의무적 또는 우선적 공급)
  - 수원시 소유의 유휴지를 싼 가격에 주택조합에 임대해주고 단지형 주택 개발
  - 동 주민센터, 우체국 등의 공공시설을 주거복합건물로 재건축하면서 상층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 운영주체 :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사회적기업, 공공단체, 협동조합

구분 유형	수용 인원	관리인원	입주 형식	내용 및 지원	모델제시
단지주거 복지모델	31인 이상	시설장 사회복지사 시설관리인 노인돌보미	임대	공공생활관리비 할인 시설운영관리자금 보조 프로그램 지원 시설장 과세 면세 분양일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제	예시 3

## I. 추진 배경

- 독거노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대두
  -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명으로 1965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49년 1,882만명 까지 증가 예상(행정안전부)
  - 또한, 탈가족화, 전통적인 부양체계 붕괴, 지역공동체 해체 등으로 1인 세대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 가구도 증가
    - (전국) 65세이상 독거노인 가구(명/%) : 1,066,365/19.7(2010년)/1,223,169/18.1(2015년)
    - (수원) 65세이상 독거노인 가구(명/%) : 11,464/15.4(2010년) /16,066/16.1(2015년)
  - 독거노인 가구의 경제적 빈곤 심화, 자살, 고독사 등 사회문제 발생
    - 2016년도 가구특성에 따른 시장소득 빈곤율(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 전체 빈곤율 19.5%, 근로연령층(가구주 18세~65세) 12.3%, 은퇴연령층(가구주 66세이상) 65.5%
    - 65세이상 노인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4)
      - 자살생각률 : 10.62%, 자살시도율 11.16%
      - 자살생각이유 : 경제적 어려움(39.22%)>건강(25.38%)>외로움(13.32%)>관계 갈등 및 단절(9.28%)
    - 무연고사망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
      - 전체 : 2013년 1,280명, 2014년 1,389명, 2015년 1,679명, 2016년 1,832명, 2017년 2010명
      - 65세 이상 : 2013년 464명, 2014년 538명, 2015년 661명, 2016년 746명, 2017년 835명
- 독거노인의 신체 여건 등을 반영한 주거정책 지원 필요
  - 노인들은 신체적인 기능약화 및 질병으로 일상적인 보행과 활동이 어려우며 특히, 독거노인이 더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65세이상 노인중 일상생활 수행이나 도구적 생활 수행능력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비율 : 전체노인 28.4%, 독거노인 32.6%(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
  - 그러나, 독거노인의 신체적 특성 및 주거욕구를 반영한 주거정책 및 주거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독거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원형 모델 구축 필요
  - 노인을 위한 주거계획 지향점으로 제시된 Aging in Place가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 Aging in Place : 나이, 소득, 능력과 상관없이 가정·지역사회에서 안전·독립·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는 개념

## II. 현황 및 문제점

### ■ 주거환경의 낮은 질적 수준

- 주택의 질적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의 비율이 39.6%, 지하거주 비율이 11.6%로 수원시 전체가구 평균 3.9%에 비하면 매우 높음.

독거노인 가구 유형별 평균 소득 및 주거특성

구분	가구주 (명)	평균소득 (만원)	임차가구 (%)	단독 다가구(%)	지하거주 (%)	주거면적 (㎡)	비고
독거노인 가구	26,764	87.3	46.1	39.6	11.6	47.2	

자료출처 : 수원시 2017년 주거실태조사

- 노인가구는 전체 일반가구에 비하여 시설, 안전성, 접근용이성 등 현재 주택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의 주택상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
- 현재 거주주택 만족도 : 일반가구 3.0%, 노인가구 2.88%(보건복지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 ■ 노인의 신체, 기능, 생활 행태에 부적합한 주거공간

- 현재 노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구조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이나 일상 생활행태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음. 노인의 95.4%가 생활하기 불편하거나 노인배려설비가 없는 주거에 거주하였고, 독거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불편한 주거 거주 비율이 높음.

구 분	부적합			적합
	생활 불편한 구조	노인배려설비 없음	소계	노인배려설비 갖춘
노인가구 평균	17.3%	78.1%	95.4%	4.6%
독거노인	26.7%	70.5%	97.2%	2.8%
노인부부	15.2%	80.6%	95.8%	4.2%
자녀동거	13.1%	80.1%	93.2%	6.8%
기타	16.3%	79.6%	95.9%	4.1%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 독거노인 가구의 전문적인 집수리 필요성이 41.2%로 장애인 가구 35.9%, 수원시 평균 27.6% 보다 월등히 높으며, 독거노인가구의 52.54%가 주거환경개선을 원하고 있음(수원시2017년 주거실태조사)
-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지원 욕구 분석

(단위:전/%)

구분	욕구 조사	도배	장판 교체	전기 수리	방역	보일러 수리	변기 수리	편의시설 개보수	집수리
경기도	31,827 (52.54)	7,172 (11.84)	4,024 (6.64)	2,765 (4.57)	2,298 (3.79)	2,389 (3.94)	3,243 (5.35)	4,645 (7.67)	5,291 (8.74)
수원시	627	252	94	13	15	25	98	23	107

자료출처 :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 :경기복지재단

- 노인이 주택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한 공간은 계단(15.3%), 화장실 및 욕실(12.5%), 문턱(9.1%) 순으로 조사되었음.

구분	없음	계단	화장실 욕실	문턱	부엌 식당	현관 복도	침실 거실	기타
노인가구	55.0%	15.3%	12.5%	9.1%	3.7%	2.1%	1.5%	0.2%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 특히,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빈도 증가
    - 노인 안전사고 발생장소 순서: 가정(60.5%)>도로 및 인도(4.3%)>숙박 및 음식점(3.8%)
    - 주택내 안전사고 : 침실·방 868건(15.0%)>화장실·욕실 638건(11.0%)>거실 487건(8.4%)(한국소비자원 : 2017년 고령자 안전사고 심층분석)
  - 대부분의 노인은 TV 시청, 산책 등으로 여가활동을 보내고 있고, 친목도모 등을위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각종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도보로 30분이상이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낮음.
    - 노인 여가활동 : TV시청(82.4%)>산책(17.8%)>독서(11.3%)>화초·텃밭가꾸기(10.1%)>화투(9.3%)>등산(5.7%)>음악감상(4.5%)
    - 노인 시설이용 : 경로당(25.9%/6.4만개소)>노인복지관(8.9%/317개소)
    - 노인 시설접근성 : 30분이상 소요(65.1%)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4 노인실태조사)
  -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내·외부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됨
    - 내부 주거환경 : 화장실 개보수, 입식 부엌, 보일러, 상·하수도 공사, 조명 교체, 방문턱 제거, 담장 수선 등
    - 외부 주거환경 : 휴식공간(벤치, 정자, 텃밭, 운동공간) 조성, 보행로 정비 등
-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심화



### < 주거비 관련 지출 >

-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경제적 불안감을 생활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주거비관련 관련 지출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음.
- 65세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생활상 어려움 : 경제적 불안감(25.8%)>아플 때 간호문제(25.6%) > 심리적 불안감(21.7%)
- 독거노인가구의 주거 임차비율은 29.6%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일수록 자가점유율이 낮고 전·월세 임차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은퇴와 재취업 기회부족으로 인한 낮은 경제상황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주거 복지 필요성이 상당히 클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2015년 65세이상 고용율 : 30.6%(전체 고용율 60.3%, 40대 고용율 79.1%)
- 독거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임차료 상승이 이어질 경우 보증금 마련, 월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복지의 절박성을 알 수 있음.
- 2017년 수원시 독거노인가구 월소득(수원시 2017년 주거실태조사) : 200만원 미만 95.3%(100만원 미만 62.7%, 100 ~ 200만원 미만 32.6%)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 세	무보증 월 세 (사글세)	무상	비고
65세이상 고령자	69.2	8.4	9.8	1.7	11.0	
가구 형태	독거노인	46.8	11.2	14.1	4.3	23.6
	노인부부	77.6	6.5	6.5	0.9	8.5
	자녀동거	75.0	9.0	10.5	0.8	4.7
	기타	62.5	8.9	16.7	1.4	11.4
소득 수준	제1오분위	48.2	12.5	13.1	4.5	21.8
	제2오분위	64.7	8.2	11.3	1.6	14.2
	제3오분위	71.2	7.5	10.6	1.2	9.4
	제4오분위	77.0	6.7	9.1	0.6	6.6
	제5오분위	84.8	6.9	4.8	0.4	3.1

- 소득분위 :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20%의인구(가구)수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
- 1분위(919) 2분위(2,463) 3분위(4,077) 4분위(6,073) 5분위(11,519) / 통계청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단위:만원

■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수준 낮음

- 중앙정부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443개소를 설립·운영 하고 있으며, 시설은 크게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음.
-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정원은 전체노인인구 6,549,227명의 0.3%이며, 실 입주원은 이보다 낮은 0.21%에 그침.
- 대부분의 노인주거단지나 노인거주시설은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 층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양로원이나 복지 시설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전국 연도별 노인 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단위: 개소, 명)

종류	시 설	2014		2013		2012		2011		2010	
		시설수	입소정원								
합 계		73,774	190,162	72,860	174,592	71,873	167,884	70,648	158,889	69,238	163,136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 계	443	20,110	435	18,592	416	18,179	414	17,450	397	17,270
	양로시설	272	13,903	285	12,782	285	13,164	303	12,509	300	11,906
	노인공동생활가정	142	1,173	125	1,049	108	887	87	710	75	618
	노인복지주택	29	5,094			23	4,128			22	4,746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 계	4,841	151,200			4,352	133,629			3,852	131,074
	양로시설	2,707	132,387	2,497	121,774	2,610	118,631	2,489	111,457	2,429	107,506
	노인공동생활가정	2,134	18,813	2,088	18,165	1,742	14,998	1,590	13,848	1,346	11,361
	노인복지주택	0	0	0	0	0	0	0	0	77	12,207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65,665	0	64,983	0	64,077	0	63,375	0	62,469	0
	노인복지관	344	0	319	0	300	0	281	0	259	0
	경로당	63,960	0	63,251	0	62,442	0	61,537	0	60,737	0
	노인교실	1,361	0	1,413	0	1,335	0	1,557	0	1,464	0
	노인휴양소	0	0			0	0			9	0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2,797	18,852			3,008	16,076			2,436	14,792
	방문요양서비스	992	0	1,042	0	1,113	0	1,180	0	1,118	0
	주야간보호서비스	913	18,008	848	14,996	840	15,160	842	15,154	786	14,086
	단기보호서비스	96	844	110	1,065	94	916	95	930	67	706
	방문목욕서비스	588	0	603	0	633	0	633	0	525	0
	방문간호서비스	208	0	229	0	323	0	0	0	0	0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28	0	25	0	25	0	25	0	24	0

주)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 '08 및 '07년에는 시 · 군 · 구 조사 자료에 의거 입소정원을 표기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택은 1세대에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 가능하므로 입소정원이 없음. 따라서 '09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을 세대수로 표기함('08년 노인복지주택 세대수는 2,596세대, '07년 2,012세대임)

주)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신고 된 시설 현황자료임.

주) 노인복지관 현황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등 포함된 숫자임

- 수원시의 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하였음.
  - 수원시 노인복지주택(1개소) : 유당마을(조원동, 259세대, 사회복지법인 빛과 소금, 임대)
  - 수원시 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 현황(3개소)
  - 의의동 1358(261세대, 한국자산신탁)/원천동 556(547세대, 코람자산신탁)/이의동 1363(166세대, 씨케이그룹)
- 현재, 수원시의 주거복지 정책 현황을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 도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 클린 케어 서비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수원다시 서기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있으나,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부족.

수원시 주거복지사업 현황

정책	주관	내용	대상	시행기간	실적	사업규모
기존주택 매입임대	- 시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주택을 시가 구매를 통해 사들이고 리모델링을 통해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내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자격기준에 미달되거나 후순위로 선정 입주하지 못한 무주택 저소득층	'11년 (시범사업 5)	16가 구	15억원
매입임대	- 수원다시기 종합지원 센터	노숙인 등에게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생활의 보장을 통한 사회복귀와 탈 노숙 실현	- 수원시 노숙인	-	-	-
도시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 시 - 경기 도시공사	매사동 수원형 도시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어 재개발구역이 획기되면서 이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도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	'15년		
주거환경 개선 클린케어 서비스	- 시 -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수원지역자활센터 - 수원시 건강센터	정상적인생활에서 벗어나 쓰레기더미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있는 심야마약 채매를 발굴하여 주거환경개선 추진	-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하는 자	'15년	50가 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 시	공동주택을 문화와 예술 건축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상아 고개로 조성하고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사업비용 일부 지원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	'15년 '16년	-	사업 당 최대 5,000만원 2,400만원

자료출처 : 수원시 주거복지정책방향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7.



## IV. 정책제안

- 독거노인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내·외부 주거공간 개선 지원사업 추진
  - 독거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내부공간 계획 및 정비
    -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내부공간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하고 동시에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여 심리적, 신체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정비하여야 함.
    - 특히, 주거개선이 필요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 독거 노인이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독거노인을 위한 내부공간 개선(안)

공간명	구분	내용	개선안
욕실	바닥	목욕시 미끄러움	안전을 고려한 바닥재
		바닥이 차가워 사용하기 어려움	노인의 온도를 고려한 바닥
	가구	개수대, 세면대 높음	노인의 인체를 고려한 가구
		목욕시 어지러워 서있기 어려움	안전바 설치 욕실내 앉을 수 있는 좌석 배치
침실 및 거실	바닥	잠이 오지 않음 잘 때 통증을 느낌	수면환경 고려한 바닥재
		취침시 운동기능저하로 부딪히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음	야간 조명 설치
	가구	옷 갈아입을 때 중심잡기 어려움	보조가구, 안전바 설치
주방	가구	싱크대, 수납장 높이 높음	인체를 고려한 가구높이, 넓이
		가스 불을 켜는지 껐는지 기억이 없음	안전장치 시스템
출입구, 계단, 현관, 복도	바닥 조명 기타	출입구, 계단, 복도가 미끄러움, 경사 등으로 위험	출입구 경사로 설치 미끄럼방지 바닥재 계단 손잡이, 계단의 조명 교체

- 안전성과 접근성을 갖춘 외부환경 조성
  - 독거노인 주거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 대지의 형태, 지형, 주거기반 시설의 공급여부, 자연환경 등을 잘 고려
  - 독거노인은 신체적 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빈번한 안전사고 유발, 외부환경에서 독거노인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장애를 위한 주거시설과 외부환경 조성의 세심한 배려
  - 특히, 독거노인의 대부분은 활동성, 기동성에 취약함을 가지고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거주지역과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과 문화 및 의료복지에 필요한 시설이 집약되어 있어야 하며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

독거노인을 위한 외부공간 개선(안)

구분	역 할	조성
커뮤니티 공간	사회와의 연대감 및 노인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변두리 지역보다는 교통이 원활하고 지역사회로의 외출이 편리한 입지선정 필요
운동 및 산책로	노인의 건강유지 및 사회교류의 장 제공	외부공간에서의 운동 및 산책공간 조성, 산책로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 설치 및 사회적 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정원(텃밭)만들기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제공	주택가 주변 유휴공간 및 노인주택 옥상 등에 조성
보행로 정비	신체적 기능저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전 예방	완만한 경사로 설치 및 도로 보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마감재 사용 등

(참고) 일반시설별 이용거리

구분	실이용거리		구분	실이용거리	
	범위	평균		범위	평균
동주민센터	450-590m	540m	의원	280-510m	380m
은행지점	440-700m	1,600m	병원	900-1,330m	1,030m
약국	130-170m	150m	노인회관	360-590m	410m

자료출처 : 강병기외, 대도시의 자연발생적 생활편익시설의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 셰어하우스로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모델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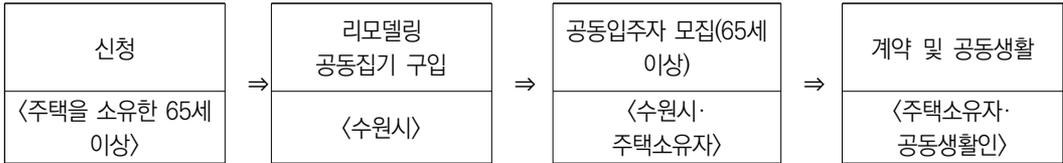
《 셰어하우스 》

1인 가정의 증가, 핵가족화, 고령사회화에 따른 고독감을 극복하고,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등장한 주거 형태. 입주자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한 형태로 취사, 휴식 등의 생활이 공동 공간에서 이뤄지도록 계획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택의 유형

- 소유자 지원형 셰어하우스 제공
  - 마련방법 : 2층이하 공가, 낡은 주택
  - 대상주택 : 방 2개 이상과 공동이용이 가능한 주택
  - 운영 및 효과
    - 단독주택을 소유한 65세이상의 신청을 받아 리모델링(벽지, 장판, 화장실, 싱크대

등)과 공동생활집기 구입비(1000만원~1500만원) 지원

- 일정기간 이상(3년) 일정금액 이하의 임대료로 세어하우스 제공 의무화(조례제정) 및 공동생활규칙 마련
- 빈집 활용으로 지역 공동화 현상 해소
- 독거노인의 주거비 부담 감소, 비슷한 연령의 공동생활로 외로움 완화
- 흐름도



○ 공동, 집합주거형 세어하우스 제공

- 마련방법 : 매입, 공매 등을 통한 5층 이하 단독, 다가구주택
- 대상주택 : 30인 이하 거주 가능한 주택
- 운영주체 : 수원시 사회적기업, 공공단체, 협동조합, 개인
- 운영 및 효과

- 주택 매입, 리모델링 후 공동, 집합주거 공간으로 제공
- 독립된 개인 공간 확보, 개방형 주방·휴게실·취미생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 공간 마련
- 무장애설계(단차제거, 경사로설치 등) 및 안전시설(응급비상벨 등) 설치
-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규모에 따라 관리인원, 프로그램 등 차등지원
- 독거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 다양한 공동프로그램 및 취미생활, 그룹 활동 등으로 외로움 완화 및 고독사 미연에 방지

구분 유형	수용 인원	관리인원	입주 형식	내용 및 지원	모델제시
공동주거 복지모델	7인 이내	시설장 사회복지사	임대	공동생활관리비 할인 임대료 보조	예시 1
집합주거 복지모델	30인 이내	시설장 사회복지사 노인돌보미	임대	공동생활관리비 할인 임대료 보조 관리직원 인건비 보조 프로그램 지원	예시 2

○ 단지주거형 세어하우스 제공

- 마련방법 :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시 독거노인 세어하우스 신축 의무화

-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독거노인 주거복지모델을 적용하여 보건복지부와 연계, 시행 (노인가구에 일정비율을 의무적 또는 우선적 공급)
- 수원시 소유의 유휴지를 싼 가격에 주택조합에 임대해주고 단지형 주택 개발
- 동 주민센터, 우체국 등의 공공시설을 주거복합건물로 재건축하면서 상층부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
- 운영주체 :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사회적기업, 공공단체, 협동조합
- 운영 및 효과
  - 독거노인이 개별세대를 갖추고 생활할 수 있는 대단위 주거규모로 단지내 독거노인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환경과 인프라 시설 갖추
  - 개별세대의 독거노인 맞춤형 내부공간 규모와 프로그램 운영
  - 외부환경 측면으로 독거노인의 건강,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접근성 해결

구분 유형	수용 인원	관리인원	입주 형식	내용 및 지원	모델제시
단지주거 복지모델	31인 이상	시설장 사회복지사 시설관리인 노인돌보미	임대	공공생활관리비 할인 시설운영관리자금 보조 프로그램 지원 시설장 과세 면세 분양일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제	예시 3

## V. 기대효과

-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을 통해 무장애 공간 등을 조성하여 독거노인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주거 만족도 상승
  - Aging In Place 지원으로 독거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 공급 확대로 주택문제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주택문제 해소
  - 세어하우스는 독거노인의 특성과 생활에 맞춘 편의시설을 갖추 수 있고, 낮은 임대료 및 공동관리에 따른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

- 독거노인의 사회문제 감소
  - 공동생활, 공동관리를 통한 독거노인의 신체적·사회 심리적 안정감 제고
  - 지역 및 공동체 참여, 봉사활동, 여가활동 등 독거노인에게 충분한 사회참여 환경 제공
  - 공적 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 발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기발견 체계 및 사회안전망 구축

## ① 공동주거형 세어하우스 모델(예시 1)

【 ◎의무, ○권장】

구분		요소
입지조건	주변환경	○근린공원, 종합병원, 공공시설 인접
	교통체계	○접근이 편리한 위치, 대중교통 체계
	건축규모	◎2층이하
	세대수	◎7인이하
	개인공간	◎20㎡ ~ 30㎡ 정도, 원룸형(침실, 화장실)
	건축	◎빈집리모델링 및 신축
내부공간계획	현관	◎미끄럼 방지 바닥◎미닫이 문 설치◎핸드레일○신발신고벗는보조이자
	침실	◎휠체어사용을 위한 침실폭 확대◎누워서 사용가능한 비상버튼 설치 ○누워서 창밖이 보이는 창틀 높이
	공동주방	◎높이조절 조리대○앉아서 작업가능한 싱크대 설치◎화재가스경보기 및 자동소화기○ 개방형 주방과 침실○노안고려 조명
	공동욕실	◎미끄럼방지 바닥◎핸드레일 비상벨 미닫이 문○좌욕 및 앉을 수 있는 욕조
	복도·계단	◎핸드레일 연속설치◎미끄럼방지 바닥◎바닥단차 없음◎요철없음 ◎센서등
외부공간계획	출입구	◎범죄예방 및 길찾기 가능한 창호 설치◎미끄럼방지◎센서등
	휴식공간	○벤치○텃밭○운동공간
	무장애설계	◎안전시설물, 단차제거, 경사로설치, 안내표지
	주차장	◎미끄럼방지 바닥○출입구와 주차장 단차 없음
서비스공간		◎휴게실 및 프로그램실 설치
운영	입주자격	◎65세이상 남·여(전용 구분)
	입주형태	◎임대
	임대·관리비	◎별도 책정
	안전시설	◎각실 응급비상벨, 미끄럼 방지 바닥
	상주직원	◎시설장, 사회복지사
	운영주체	◎수원시 사회적기업, 공공단체, 협동조합, 개인
안전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② 집합주거형 세어하우스 모델(예시 2)

【 ◎의무,○권장】

구분		요소
입지조건	주변환경	○근린공원, 종합병원, 공공시설 인접
	교통체계	○접근이 편리한 위치, 대중교통 체계
	건축규모	◎5층이하
	세대수	◎30인이하
	개인공간	◎20㎡ ~ 30㎡ 정도, 원룸형(침실, 화장실)
	건축	◎빈집리모델링 및 신축
내부공간계획	현관	◎미끄럼 방지 바닥◎미닫이 문 설치◎핸드레일○신발신고벗는보조의자
	침실	◎휠체어사용을 위한 침실폭 확대◎누워서 사용가능한 비상버튼 설치 ○누워서 창밖이 보이는 창틀 높이
	공동주방	◎높이조절 조리대◎앉아서 작업가능한 싱크대 설치◎화재가스경보기 및 자동소화기 ○개방형 주방과 침실○노안고려 조명
	공동욕실	◎미끄럼방지 바닥◎핸드레일 비상벨 미닫이 문○좌욕 및 앉을 수 있는 욕조
	복도·계단	◎핸드레일 연속설치◎미끄럼방지 바닥◎바닥단차 없음◎요철없음 ◎센서등
	엘리베이터	◎설치
	방문자숙소	◎4인실이상 2개소 설치
	사무실	◎관리사무실
외부공간계획	출입구	◎범죄예방 및 길찾기 가능한 창호 설치◎미끄럼방지◎센서등
	휴식공간	○벤치○텃밭○운동공간
	무장애설계	◎안전시설물, 단차제거, 경사로설치, 안내표지
	주차장	◎미끄럼방지 바닥○출입구와 주차장 단차 없음
서비스공간		◎휴게실 및 프로그램실 설치
운영	입주자격	◎65세이상 남·여(전용 구분)
	입주형태	◎임대
	임대·관리비	◎별도 책정
	안전시설	◎각실 응급비상벨, 미끄럼 방지 바닥
	상주직원	◎시설장, 사회복지사, 노인돌보미
	차량운행	◎차량운행
	운영주체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사회적기업, 공공단체, 협동조합
안전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③ 단지주거형 세어하우스 모델(예시 3)

【 ◎의무,○권장】

구분		요소
입지조건	주변환경	○근린공원,종합병원,공공시설 인접
	교통체계	○접근이 편리한 위치, 대중교통 체계
	건축규모	◎단지형
	세대수	◎31인이상
	개인공간	◎20㎡ ~ 30㎡ 정도, 원룸형(침실, 화장실)
	건축	◎재건축, 재개발
내부공간계획	현관	◎미끄럼 방지 바닥◎미닫이 문 설치◎핸드레일○신발신고벗는보조의자
	침실	◎휠체어사용을 위한 침실폭 확대◎누워서 사용가능한 비상버튼 설치 ○누워서 창밖이 보이는 창틀 높이
	공동주방	◎높이조절 조리대◎앉아서 작업가능한 싱크대 설치◎화재가스경보기 및 자동소화기○개방형 주방과 침실○노안고려 조명
	공동욕실	◎미끄럼방지 바닥◎핸드레일 비상벨 미닫이 문○좌욕 및 앉을 수 있는 욕조
	복도·계단	◎핸드레일 연속설치◎미끄럼방지 바닥◎바닥단차 없음◎요철없음 ◎센서등
	엘리베이터	◎설치
	방문자숙소	◎동별 4개소 설치
	사무실	◎관리사무실
외부공간계획	출입구	◎종합 경비, 안내소
	휴식공간	◎운동공간◎정원○산책로◎근린공원
	무장애설계	◎안전시설물, 단차제거, 경사로설치, 안내표지
	주차장	◎미끄럼방지 바닥◎엘리베이터 연결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주차장 단차 없음
서비스공간	각동별	◎각동별 휴게실◎각동별 경비실
	관리동	◎여가생활공간◎운동시설◎작업공간
운영	입주자격	◎65세이상 남·여(전용 구분)
	입주형태	◎임대
	임대·관리비	◎별도 책정
	안전시설	◎각실 응급비상벨, 미끄럼 방지 바닥
	상주직원	◎시설장,사회복지사,시설관리인,노인돌보미
	차량운행	◎차량운행
	운영주체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사회적기업, 공공단체, 협동조합
안전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5. 수원시 핵심리더양성과정  
제4기 제5조**

**- 100세 시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  
신중년층 일자리 활성화 방안**

■ **추진 배경**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중년층<sup>16)</sup>의 인구 비중 꾸준히 증가
-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신중년층 일자리 유지 및 은퇴지원 필요
- 신중년층을 위한 효율적 일자리 정책 마련 시급
  -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요구사항 인식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구직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 수원시 50세 이상 2017년 신규구인인원 2,375명, 신규구직자수는 40,015명으로, 신규구직자수 비율이 전체 신규구직자수의 33.5%를 차지함에도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일자리상담사 등 전문인력 부족
  - 구직자 초기 상담시 구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정보와 이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 전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정보 및 참여기회 부족
  - 사회환경 변화가 가속됨에 따라 지속적인 학습을 토대로 한 새로운 직업생활 준비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나, 신중년층은 핵심직무역량이 낮을 뿐 아니라<sup>17)</sup> 정보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 참여율도 낮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적 위주의 단편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에 집중
  - 수원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성과가 쉽게 확인되는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필요

■ **정책제안**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
  -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정책을 위한 지원금 확대 및 여건 조성
  - 사회적기업 육성 등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장기적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 변경 추진
- 민간기업이 신중년층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수원시 일자리 전담조직 기능 강화
  - 일자리센터 내 신중년층 전담조직 신설
  - 일자리 상담사의 전문역량 강화
  - 일자리 전담조직 기능 및 역할 강화
- 인생 이모작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 퇴직지원 프로그램의 전직 지원 활동 강화
  - 공공기관을 통한 퇴직지원 프로그램 무료 지원
  - 지방정부 취업성공패키지<sup>18)</sup> 시스템 도입

## 1. 추진 배경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중년층<sup>19)</sup>의 인구 비중 꾸준히 증가
  - 베이비붐 세대<sup>20)</sup>가 중장년기로 진입하면서 신중년층 인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중년층은 은퇴를 앞두고거나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에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sup>21)</sup> 도래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의 위험에 노출된 세대이기도 함.
  - 고령사회<sup>22)</sup>에서 신중년층의 노동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전체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sup>23)</sup>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16) 수원시 신중년층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신중년층"이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

17) 경기연구원, 50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2018), 청년기에는 OECD 최고, 중장년기에는 OECD 최하위권

18) 고용노동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19) 수원시 신중년층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신중년층"이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

20) 매일경제용어사전, 1955년 ~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21)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산업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22) UN,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14% 이상, 한국은 2017년 진입

23) 통계청, 50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비율, 2015년 43.0%, 2016년 43.1%, 2017년 42.8%

- 수원시 신중년층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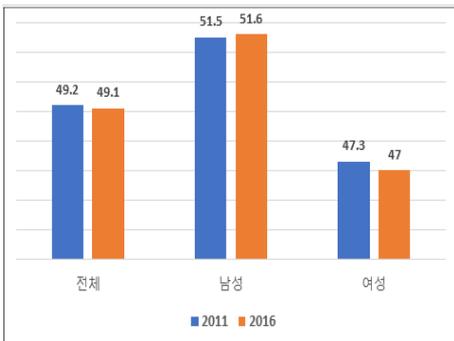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수원시	신 중 년			
		계	50~54세	55~59세	60~64세
2015년	1,184,624	225,373	98,584	78,677	48,112
2016년	1,194,041	237,366	97,595	85,759	54,012
2017년	1,202,628	246,355	97,968	90,669	57,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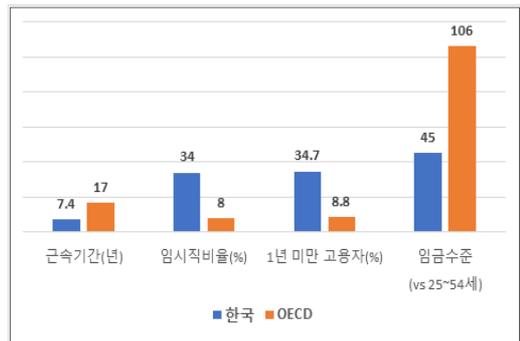


-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신중년층 일자리 유지 및 은퇴지원 필요
  - 우리나라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1세이나 실질 노동시장 은퇴 연령은 72세로<sup>24)</sup>, 신중년층의 상당수가 법정 퇴직 연령(60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여 비정규직으로 실질 은퇴 연령까지 근로생활을 지속하는 추세
  - 기대수명<sup>25)</sup> 연장과 더불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신중년층은 퇴직 후 생계유지를 위해 재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다른 OECD 국가보다 임시직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도 낮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에 처해 있음.

<주된 직장 은퇴연령><sup>26)</sup>



<55~65세 기준 일자리의 질 국제비교(2015)><sup>27)</sup>



- ⊕ 은퇴 전 경제적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준비중인 신중년층은 전체의 41.4%<sup>28)</sup>
- ⊕ 노동시장 완전은퇴 전 연금수급 가능 연한 : 국민연금 11년, 기초 연금 7년
- ⊕ 61~79세 연금수급자 66.3%, 수급자 중 52%가 25만원 미만 수령 ('16년)

- 신중년층을 위한 효율적 일자리 정책 마련 시급
  -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자

24) 통계청,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55세~79세) 부가조사  
 25) 통계청, 연도별 기대수명, 2005년 78.2세, 2010년 80.2세, 2016년 82.4세  
 26) 통계청,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55세~79세) 부가조사  
 27) 경기연구원, 5060세대 실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2018)  
 28) 한국노동연구원, 2015년 노동패널 장년층 부가조사

간 일자리 요구사항 인식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II. 현황 및 문제점

### ■ 구직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 수원시 50세 이상 2017년 신규구인인원 2,375명, 신규구직자수는 40,015명으로, 신규구직자수 비율이 전체 신규구직자수의 33.5%를 차지함에도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2017. 1월 ~ 12월 수원시 구인구직현황(워크넷) (단위 : 명)

구분		신규구인인원	신규구직자수	알선건수	취업건수
계		47,831	119,393	78,063	52,338
연령별	19세 이하	5	3,937	766	860
	20~29세	2,108	30,581	14,737	11,578
	30~39세	5,531	23,378	10,897	7,835
	40~49세	3,793	21,482	12,245	8,469
	50~59세	1,342	21,059	22,164	12,744
	60세 이상	1,033	18,956	17,254	10,852
	관계없음	34,019	0	0	0
임금대별	120만원 이상	3,847	1,690	10,280	1,448
	120~150만원 미만	8,738	20,540	13,917	8,530
	150~200만원 미만	14,895	45,631	28,751	17,024
	200만원 이상	20,351	46,198	25,115	23,665

- 일자리정보시스템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시 장년층우대 채용정보 비율 2.4%는 경기도 평균 3.0%보다 낮으며, 주요 채용분야도 청소원, 경비원, 요양보호사, 운전원 등으로 대부분 비정규 근로자임.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신중년층을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되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 지역별 일자리 채용정보 현황(2018. 5. 22.현재) (단위 : 건)

구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경기도	비고
채용정보	2,532	3,283	2,797	5,671	43,835	
장년층우대 채용정보	60	119	91	144	1,319	
비율	2.4%	3.6%	3.3%	2.5%	3.0%	

-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요구사항 인식차이로 인한 재취업 어려움 발생<sup>29)</sup>

29) 수원시 일자리박람회(4.18.)시 구인구직자 현장면담 및 동 주민센터 일자리상담사 면담 (5.25.) 결과

- 기업에서는 젊은층, 전문인력을 선호하고, 구직자는 야간근무 기피, 생활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희망하나, 대부분의 일자리가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임.

구 분	기 업 체	구 직 자
고용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업종사 가능한 전문인력 필요</li> <li>• 생산직과 단순노무직 채용 선호</li> <li>• 공장자동화 등 기술발달로 고용인력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 전 직업유지 희망</li> <li>• 인근지역 기업체 선호(출퇴근 편의)</li> <li>• 쉬운일, 힘들지 않은 일 선호</li> <li>• 야간근무 기피</li> </ul>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 150만원 내외의 낮은 임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가능한 수준의 임금 희망</li> </ul>
직급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 근무 가능자 선호</li> <li>• 동일조건이라면 청년층 선호 (나이어린 상사와의 마찰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유지를 위해 나이가 많아도 일자리를 원함 (50~70대까지 다양)</li> </ul>
불 부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연령에 따른 체력문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업무적응능력 미흡</li> <li>• 낮은 이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조건 열악</li> <li>• 양질의 일자리 부족</li> </ul>

※ 장래희망임금수준<sup>30)</sup> (단위 : 천명)

구 분	계	월평균 50만원 미만	월평균 50~100만원 미만	월평균 100~150만 원 미만	월평균 150~300만원 미만	월평균 300만원 이상
2015년	7,232	506(6.99%)	1,426(19.72%)	2,326(32.17%)	2,338(32.33%)	636(8.79%)
2016년	7,648	496(6.48%)	1,354(17.71%)	2,448(32.0%)	2,591(33.88%)	759(9.92%)
2017년	8,098	447(5.52%)	1,346(16.62%)	2,120(26.18%)	3,715(45.88%)	470(5.8%)

※ 장년층 채용시 어려운 점<sup>31)</sup>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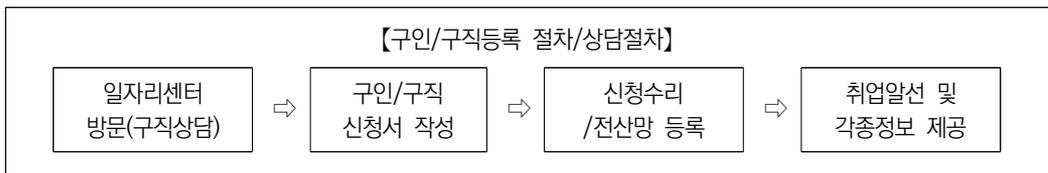
30) 통계청,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55세~79세) 부가조사

3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년층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위한 구인구직자 실태조사 및 장년층 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 (2016)

구 분	사례수	적당한 사람에 대한 정보자체가 없음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없음	급여 수준을 맞추기 어려움	조직문화 융화가능성 있는 사람이 드물었음	특별한 어려움 없음	기타
재무회계	27	7.4	22.2	25.9	0.0	44.4	0
기획전략	40	2.5	30.0	7.5	7.5	50.0	2.5
인사조직	19	10.5	10.5	26.3	10.5	42.1	0
기술직	116	4.3	28.4	24.1	3.4	38.8	0.9
마케팅	30	10.0	20.0	20.0	6.7	43.3	0
생산현장관리	127	7.9	26.0	18.1	10.2	37.7	0

■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일자리상담사 등 전문인력 부족

- 구직자 초기 상담시 구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정보와 이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 전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일자리 상담사는 구직신청서 작성 안내 및 등록, 다양한 정보를 통한 일자리 매칭 등 취업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상담사별 취업알선 목표실적관리로 인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상담보다는 실적을 채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비중으로 인해 상담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구인등록의 경우, 기업체에서 직접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 시에서 직접 고용한 일자리발굴 전담요원(2명)은 고용기간이 10개월로 짧아 고용상태도 불안정한 상황이라,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이 불가하며, 2명의 인원으로 시 전체 일자리발굴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구직경험자의 주된 구직경로는 공공 직업알선기관 27.8%, 친척, 친지소개 및 부탁 40.5%, 민간 직업알선기관 9.8%로 나타나, 주로 전문가의 도움없이 사적 관계망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상담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업자 지난 1년간 구직경로<sup>32)</sup>(단위 : 천명)

32) 통계청,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55세~79세) 부가조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36	1,896	1,954	2,052
공공 직업알선기관	454(26.1%)	462(24.3%)	501(25.6%)	570(27.8%)
민간 직업알선기관	172(9.9%)	209(11%)	194(9.9%)	200(9.8%)
신문, 잡지, 인터넷 등	135(7.8%)	152(8%)	177(9.1%)	187(9.1%)
사업체 문의 방문	201(11.6%)	219(11.6%)	213(10.9%)	187(9.1%)
친척, 친지소개 및 부탁	703(40.5%)	786(41.5%)	802(41.1%)	831(40.5%)
자영업 준비, 기타	71(4.1%)	67(3.6%)	67(3.4%)	76(3.7%)

- 수원시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 우선분야를 살펴보면, 일자리 발굴,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 등 지원, 기업 지원, 민간일자리 발굴 지원, 수요자 중심의 취업알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 정책 우선분야<sup>33)</sup> (단위 : %)

구분	취업알선	창업 등 지원	일자리발굴	직업훈련	기업지원	기타
연령별						
50~59세	22.0	17.6	34.1	13.8	8.1	4.4
60세 이상	26.2	9.5	34.6	19.0	6.0	4.7

※ 최근 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관련성<sup>34)</sup> (단위 : 천명)

구 분	지난 1년간 취업경험자	전혀 관련 없음	별로 관련 없음	약간 관련 있음	매우 관련 있음
2015년	7,357	1,350	830	801	4,376(59.5%)
2016년	7,802	1,342	885	918	4,657(59.7%)
2017년	8,006	1,358	902	936	4,810(60.1%)

- 정부의 신중년층 정책과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신중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음에도, 신중년층 일자리 전담조직 및 전담요원 부족
  - 2016. 2. 25. 중장년일자리팀이 신설되었으나, 새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기존사업 추진으로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
  - 특히,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일자리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전체 동의 60.5%만 배치되어 일자리발굴을 위한 전담요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수원시 일자리정책 전담조직 현황

33) 2017 수원시사회조사보고서

34) 통계청,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55세~79세) 부가조사

구 분	市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지원팀	청년여성일자리팀	중장년일자리팀	
인 원	7명	3명	3명	3명	37명
직원구 성	팀장 1, 직원 6	팀장 1, 직원 2	팀장 1, 직원 2	팀장 1, 직원 2	센터장 1, 상담사 36 <sup>35)</sup>
담당업 무	일자리 경제 부분 T/F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목표공시제,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센터운영, 일자리 박람회, 특성화고 취업지원,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	여성일자리, 중장년여성취업 지원, 청년일자리 발굴지원, 청년층 인턴사업, 청년 해외취업지원 등	새희망일자리, 넥스트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신중년디딤돌, 사회공헌활동지원 등	일자리 상담서비스, 취업정보제공, 구인구직 채용행사, 취업지원프로그램

- 수원시에서는 일자리 유관기관 및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구인·구직자간「만남의 장소」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취업성공률은 저조한 실정임.

※ 2017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추진현황

구분	1회	2회	3회	4회	비 고
주제	2017년 JOB아YOU 일자리박람회	제조업중심 청년일자리박람회	수원산업단지 일자리박람회	여성&신중년 일자리박람회	근거 : 보도 자료
개최일시	2017.4.12.(수)	2017.6.27.(목)	2017.9.20(수)	2017.11.22.(수)	
장소	올림픽공원	수원시청	오목천공원	수원시청	
대상	전계층 (청년,여성,중장년층)	제조업중심 청년층	전계층	여성·중년층	
참가업체 및 채용인원	30개 업체 150여명	30개 업체 150여명	25개 업체 100여명	40개 업체 150여명	
참여인원	600명 이상	600명 이상	500명 이상	600명 이상	
소요예산	21,000천원	20,000천원	24,000천원	18,000천원	
채용결과	미공개	172명 채용	118명 채용	158명 채용	

#### ■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정보 및 참여기회 부족

- 사회환경 변화가 가속됨에 따라 지속적인 학습을 토대로 한 새로운 직업생활 준비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나, 신중년층은 핵심직무역량이 낮을 뿐 아니라<sup>36)</sup>

35) 일자리 상담사 현황 : 36명(일자리센터 6, 행정복지센터 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 산업단지 1)

36) 경기연구원, 50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2018), 청년기에는 OECD 최고, 중장년기에는 OECD 최하위권

정보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 참여율도 낮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퇴직지원 프로그램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sup>37)</sup>는, ① 퇴직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② 퇴직(예정)자 지원에 대한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 ③ 퇴직지원 서비스의 낮은 질, ④ 퇴직지원 프로그램의 일자리 연계 부족, ⑤ 정부지원제도의 미활용임.
- 기업들이 재정적 지원을 원하면서도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선부담후지원’으로 지원되므로 기업에 초기 비용의 부담이 요구되며, 중소기업일수록 당장의 생산성이 중요하며, 퇴직(예정)자를 배려할 여유가 없다는 점임.

※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현황<sup>38)</sup>(단위 : 천명)

계	참여				미 참여							
	소계	사업주 제공 훈련	개인 훈련	사업주 제공 및 개인 훈련	소계	훈련받을 시간을 부족	훈련 정보 부족	훈련 부담 및 훈련기관, 훈련과정 부족	생계 때문에 훈련보다 조급업 필요	직장생활이나 취업에 도움 안될 것 같아서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서	기타
12,930	1,761 (13.6%)	1,307	387	67	11,169 (86.4%)	891	1,144	297	549	3,712	3,775	801

- 우리시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년층과 여성위주의 교육이 대부분이며, 신중년층을 위한 직업훈련은 극소수로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함.

※ 2017년 수원시 직업교육 훈련 현황(단위 : 명)

분 야	사 업 명	추진 실적		비 고	
		교육인원	취업자수		
정 부 부 문	직업능력 개발훈련	계	3,121	356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교육	2,430	-	
		청년 해외취업 지원	59	53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	243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160	111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60	55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75	56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94	81	
	고용서비스	계	206	2,513	직업상담 20,453건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08	1,401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98	1,112			

■ 실적 위주의 단편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에 집중

37) 국가고용정보원, 사무직 베이비부머 퇴직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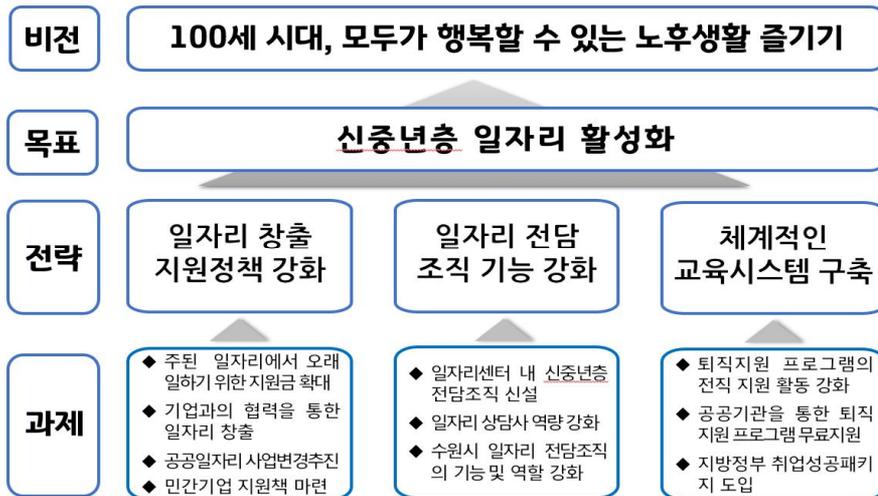
38) 통계청,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55세~79세) 부가조사

- 수원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성과가 쉽게 확인되는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필요

※ 수원시 일자리 예산집행 및 취업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집행액	취업자수	집행액	취업자수	집행액	취업자수		
계	407,071	39,275	372,114	43,382	457,221	41,944		
정부 부분	소계	396,804	35,155	364,038	39,683	450,309	40,683	
	직접일자리창출	23,518 (5.77%)	5,504 (14.0%)	15,586 (4.19%)	5,097 (11.75%)	16,958 (3.7%)	5,197 (12.4%)	
	직업능력개발훈련	1,417	428	1,664	1,245	1,356	356	
	고용서비스	1,088	9,091	2,227	19,227	2,532	18,529	
	고용장려금	1,130	24	54	17	64	28	
	창업지원	74	260	1,214	317	3,834	348	
	일자리 인프라 구축	4,679	229	5,079	10개 사업	5,783	9개 사업	
	시정전략사업(6개분야)	364,898	19,619	338,214	13,780	419,782	16,225	
	민간부분	10,267	4,120	4,382	3,699	6,912	1,261	

### III. 목표체계



### IV. 개선과제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
  -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정책을 위한 지원금 확대 및 여건 조성

- 기존) 정부에서는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을 3개월 ~ 최대 2년까지 지급하고 있음.
  - (개선) 정부에서 최대 2년까지 지급한 후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용장려금을 연금 수급연령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
  - 사회적기업 육성 등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공공분야와 더불어 민간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는 보상 제도 강화, 혹은 고령자 고용촉진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장기적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 변경 추진
    - 수원시 신중년 디딤돌사업 확대 운영(주 20 ~ 25시간 → 주 32시간)
      - ➔ 사회공헌활동 전문분야(10개 사업), 공공일자리 연속사업(30개 사업)
    - 학교 앞 등하교길 안전도우미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지속 발굴
  - 민간기업이 신중년층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신중년을 채용해야 하는 민간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보험 지원 등 강구
    - 민간기업의 구인 활동에 대한 워크넷 시스템 통합 활용 안내
    - 일자리상담사 역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민간기업 홍보 활동 강화
    - 관내 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지원책 발굴로 기업과 구직자간의 매칭 활성화
- 수원시 일자리 전담조직 기능 강화
- 일자리센터 내 신중년층 전담조직 신설
    - 전담 조직 신설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창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민관 협력망 구축 관리 등 신중년층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추진 체계 마련
    - 정부의 신중년층 정책에 맞춰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활동공간인 가칭「신중년층 지원센터」설립을 통해 신중년층 일자리 상담, 교육, 취업, 커뮤니티 공간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모작 준비공간으로 운영
    - 노사민정협의회의「일자리네트워크 운영협의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중년층 일자리 정책의 다각적인 방안 모색
  - 일자리 상담사의 전문역량 강화
    - 일자리 상담사 확대 배치 : 기존 26개동 → 변경 43개동(전체동 확대)
    - 일자리 발굴 전담요원 권역별 추가 배치 및 고용 안정화

- ➔ 전담요원 : 기존 2명 → 4개 권역 20명
- ➔ 고용형태 : 새일희망일자리 참가자 → 일자리센터 소속 직원으로 전환
- 상담사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교육 추진
-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세한 안내문이 포함된 매뉴얼 제작 및 취업안내문 등 제작 활용
- 일자리 전담조직 기능 및 역할 강화
  - 일자리·경제 컨트롤타워 시장 직속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개편
  -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조정 및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노동시장의 일자리사업 수급구조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를 정책에 반영
  - 신중년층 중점업무 추진을 위한 중장년일자리팀 실무인원 충원(3명 → 5명)
  - 일자리 발굴, 기획, 운영 등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고용전문가 채용
  -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sup>39)</sup>에 의거 인생재설계교육, 사회공헌활동, 재취업 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원 활동 강화
- 인생 이모작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 퇴직지원 프로그램의 전직 지원 활동 강화
    - 전문가, 기업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관리직 퇴직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훈련과정 발굴
    - 재직단계부터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체 교육훈련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산업차원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 필요
    - 중소기업 재직자의 훈련 참여율 제고를 위한 퇴직전 유급휴가지원 등 여건 조성 필요
    - 퇴직지원서비스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 등
  - 공공기관을 통한 퇴직지원 프로그램 무료 지원
    - 인력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추진
    - 지역특색 및 신중년층의 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훈련 모델 발굴 지원
    -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개설된 신중년층 퇴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워크넷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알선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지방정부 취업성공패키지<sup>40)</sup> 시스템 도입

39) 2018. 4. 2.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40) 고용노동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

- 지방정부 차원의 '생애 재설계 지원 → 재교육 기회 제공 → 취창업 알선'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에 기반을 둔 경로별, 맞춤형서비스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전직 지원, 직업훈련, 고용유지 지원 등)

## V. 기대효과

- 일자리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전담하는 일자리센터 상담사 역할 강화로 신중년층의 기술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역량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민간일자리로의 효율적 연계
- 일자리 전담조직 기능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지역고용전문가 채용으로 지역노동시장의 일자리 수급 구조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를 정책에 반영
- 퇴직지원 프로그램 지원 및 원활한 정보공유, 소통의 장 제공을 통해 신중년층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업과 구직자간 만족도 향상 및 신중년층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b>참고 1</b>	<b>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상담사 면담 조사 결과</b>
-------------	---------------------------------

- 일시 : 2018. 5. 25.(금) 10:00 ~ 12:00
- 대상 : 율천동 등 6개동 일자리상담사 6명

면담내용	면담결과
1. 주요 방문 계층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보다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방문, 남녀비율은 비슷</li> <li>• 구인대비 구직자의 비율은 1:2정도로 구직자가 2배 가량 많음.</li> </ul>
2. 상담사의 역할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신청서 작성 안내 및 등록, 다양한 정보 등을 통해 매칭까지 연결함.</li> <li>• 워크넷, 잡코리아, 인쿠르트, 사람인 등에 등록된 기업과 구직자에 대한 조건 등을 확인하여 취업이 될 때까지 지속 관리</li> <li>• 일자리발굴 및 취업에 따른 면접 지원</li> <li>• 구직상담 후 필요시 중장년일자리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안내(교육, 상담)</li> </ul>
3. 구직상담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li> <li>• 고색산업단지 생산제조분야 업체는 40대 후반부터는 채용 기피</li> <li>• 소규모 업체는 전문분야보다 단순직종으로 회사의 모든 일을 시키고 급여는 적음.</li> <li>• 장년층 본인은 건강하다고 여기나 업체에서는 나이를 고려하여 단순업무 위주로 채용</li> <li>• 구직자의 경우 퇴직 전 일자리를 취업의 기준으로 삼음.</li> <li>• 사무직종사자는 단순업무나 경비 등에 취업시 처음해 보는 일이라 적응하기 어려워 함.</li> </ul>
4. 구직자의 요구사항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 이상(생활가능한 정도)면 어느 정도 순응</li> <li>• 쉬운 일, 힘들지 않은 일 선호, 야간근무 기피</li> <li>• 고령자는 시간제 근무를 선호</li> <li>• 기술직류는 상담 후 임금을 결정하도록 업체와 구직자간 조정해 줌.</li> </ul>
5.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구직자 매칭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인업체 현황 워크넷에 등록</li> <li>• 기업체가 주로 관내에 있는 영세업체로 전화를 통해 구직자를 요청하면, 시스템 등을 파악하여 구직자 현황을 파악, 서류작성 및 면접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음.</li> </ul>
6. 상담시 애로사항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적인 민원상담을 해야 하는데 행정업무량이 많아 상담에 어려움.</li> <li>• 상담사별 취업알선 목표실적관리로 인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상담보다는 실적을 채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li> <li>• 구직자의 사생활에 대한 유출을 꺼려해 심층상담에 어려움이 있음.</li> <li>• 구직자는 좋은 일자리만 찾고,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적정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고 판단됨.</li> </ul>
7.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전문요원(시 2명)이 부족</li> <li>• 소규모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li> <li>• 노동부 소속 고용센터는 워크넷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6개월이나 지자체의 경우는 3개월로 등록연장을 위한 업무가 가중됨.</li> <li>•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체 직원에 대한 퇴직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li> </ul>

**참고 2 | 일자리센터 일자리발굴 전담요원 면담조사 결과**

- 일시 : 2018. 5. 30.(수) 10:30 ~ 12:00
- 대상 : 市 일자리발굴 전담요원 2명

면담내용	면담결과
1. 주요 방문 계층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 업체 방문(1개소 2명)</li> <li>• 1일 10개 업체 선별하여 사전 연락후 방문하고 있으나 방문상담은 5개 업체 정도</li> </ul>
2. 상담사의 역할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위주(고색산업단지, 망포동 아파트형공장, 중소기업센터 등)로 구인업체 방문하여 일자리 발굴</li> <li>• 업체 방문전 구인업체의 구인이력을 사전 검토하여 자료 준비</li> </ul>
3. 구인자 요구사항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직, 단순노무 분야는 연령 제한 없으나 되도록 젊은 사람 위주로 채용</li> <li>• 전기전자기계 분야에서는 20~30대 채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업체에서 50대 이상은 직원 채용을 꺼리고 있음.</li> <li>• 사무관리 분야도 30대 이상은 채용하지 않고 연령이 높으면 채용 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li> <li>• 업체는 외국어 능통자, 경력자, 젊은층을 선호하고 있으나 20대는 2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는 낮은 임금으로 이직률이 높음(1~2년 정도 경력을 쌓아 이직하는 경향이 많음)</li> </ul>
4. 구인경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에서는 지원 사업이 많은 노동부 일자리 발굴 상담을 선호하며 지원 사업이 미비한 지자체(수원시)의 일자리 발굴 상담은 기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을 신청하여도 조건 충족이 까다로워 지원 사업 신청 포기 (2018년 말 종료)</li> </ul> </li> <li>• 온라인 상 구인구직 정보 경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보다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람인(saram in)을 더 많이 이용(중소기업에서는 구직자가 많고 원하는 직종의 구직자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li> <li>〈워크넷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업은 단순직종이 대부분이고 전문분야 인력은 없는 채용정보로 인식</li> <li>②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 근거자료로 활용</li> </ul> </li> </ul>
6. 상담시 애로사항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발굴 매뉴얼이 없어 구인업체를 방문해도 시정홍보와 지원금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임.</li> <li>• 업체 방문시 영업사원 취급하고 방문을 원하지 않음.</li> <li>• 정부의 구인발굴 교육이 있으나 구인에 대한 과정이나 절차보다는 현장근무자들의 토의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전부임.</li> <li>• 수원시 일자리 발굴 요원은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약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어, 고용불안정에 따른 업무의욕 저하 및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사업 추진에 어려움</li> </ul>

<b>참고 3</b>	<b>고용노동부 신중년 주요 정책사업 현황</b>
-------------	-----------------------------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용연장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li> <li>• 지원대상 : 60세 이상 다수 고용사업주</li> <li>• 지원내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24만원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li> </ul> </li> <li>• 지원요건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li> </ul>	2020년 까지 한시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li> <li>• 지원대상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li> <li>•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li> </ul> </li> <li>• 지원요건 :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간 고용</li> </ul>	
임금피크제 지원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근로소득 7,250만원 초과 근로자 제한</li> </ul> </li> <li>• 지원요건 :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10% 이상 임금 감액</li> <li>• 지원내용 : 피크임금 대비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1,080만원 한도 지원</li> </ul>	
장년 근로시간 단 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근로자 및 사업주</li> <li>• 지원요건 :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가 직업능력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급 사유에 포함</li> </ul> </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을 최대 2년간 연1,080만원한도 지원</li> <li>(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li> </ul> </li> </ul>	

**참고 4**    **주요 선진국의 50·60세대 지원 정책<sup>41)</sup>**

구 분	국가	내 용
고용 연장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 일자리 유지 정책 : 45세 이상 근로자의 년 주기 경력관리와 근로자 능력진단 의무화</li> <li>고령자 경력 관리 정책 : 4세 이상 근로자의 튜터제 시행</li> </ul>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트타임 퇴직 보장제 :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줄일 경우 파트타임 퇴직 보상금과 더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손실의 일정부분 보전</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고령자 고용안정법 : 사업주는 65세까지의 안정적 고용확보를 위해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폐지 중 한 가지 조치를 실시해야 함.</li> <li>정년연장 등에 대한 장여금 : 중소기업 정년연장 장려금, 고령일자 고용확보 충실 장려금, 고령자 공동취업기회 창출 조성금 지급</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년법 : 60세 이후 고용연장에 대해 10%까지 임금삭감 가능</li> </ul>
신규 고용/재취업 지원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 고용훈련 정책 : CSEOA<sup>42)</sup>, ATAA<sup>43)</sup>, WIA<sup>44)</sup></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 재취업 촉진 정책 : 4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직업교육 및 정부지원 계약직 일자리 마련, 고령자 친화적 고용형태 개발 실시</li> <li>고령자 고용계획 수립 의무화 : 50인 이상 기업은 고령자 고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거나 고령자 고용계획 포함한 산별 노사협정 의무적 제출</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니셔티브 50 플러스 : 임금보조금 지급, 채용보조금 지급, 기간제 근로계약 요건 완화</li> <li>퍼스펙티브 50 플러스 : 지역단위 고령자 고용협약</li> </ul>
연령 차별 금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차별금지법 : 1986년부터 정년제도 폐지</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차별금지법 : 정년설정은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한 연령차별로 간주</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법전 : 정년 62세, 연금수급개시연령 67세로 설정</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평등대우법 : 연령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의 금지 및 제거를 규정</li> </ul>

41) 경기연구원, 50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2018)

42) CSEOA(Community Service Employment for Americans) : 55tp 이상 저소득 실직자가 비영리기구나 공공기관에서 단시간 근로나 지역커뮤니티서비스에 종사하며 연방 및 주정부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하는 노동부 관장 연방 프로그램

43) ATAA(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ct) : 무역에 의해 피해를 입은 50세 이상 실직자를 대상으로 노동부가 주정부를 통해 재고용지원, 임금보조금, 의료비 공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

44) WIA(Workforce Investment Act) : CSEOA나 ATAA에 참여할 수 없는 일반적 실직자를 대상으로 one-stop센터를 통해 훈련 및 취업서비스 제공

## 참고 5 관련 보도자료①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전략을 세운 뒤 퇴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된다.

50·60세대를 칭하는 신중년 층이 재취업 시장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만반의 대비를 하더라도 열기 어려운 게 취업 시장의 문이다.

그러면 신중년 층은 어떻게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재취업할 때 받고 싶은 보수는 얼마나 될까. 또 재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까. 설문 조사를 통해 신중년 층의 재취업 실태를 알아봤다.

### ◆ 구직 과정에 다양한 걸림돌

먼저 퇴직한 경험이 있는 50대 이상 남녀 총 1000명 가운데 현재 일하지 않고 있지만 ‘재취업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만 설문을 진행했다. 어떻게 신중년 층이 재취업을 준비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자의든 타의든 퇴직한 신중년 층은 어떻게 재취업을 준비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경력을 살리고 싶지만 자신에게 맞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채용 공고가 나올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처지다. 막상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이전 같지 않은 몸 상태에 발목을 잡히기도 한다.

실제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신중년 층에게 걸림돌이 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이들이 ‘기업들의 채용이 부족하다(33.3%)’고 응답했다. 건강(24.6%), 취업 정보 부족(17.5%), 경력(13.1%), 연봉(7.9%), 학력(3.6%)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채용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50~54세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21%로 나타났지만 55~59세는 37%, 60~64세는 40.7%, 65세 이상은 56%로 집계됐다. 나이가 더 들수록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신중년 재취업 준비자



그렇다면 왜 신중년 층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확히 말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라며 가장 큰 원인으로 비용 문제를 꼽았다.

일본 전문가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퇴직자들의 재직 당시 연봉을 감안하면 이들을 데려올 때 기업들은 상당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은 퇴직자들을 채용하기보다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싼 청년층 채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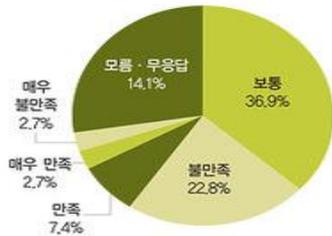
신중년 층을 채용하더라도 생산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가 조직에 안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전문가들이 제시한 원인이다.

신중년 층이 구직 정보를 얻는 방법은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서였다. ‘재취업을 알아보는 방법(복수 응답 가능)’을 물었더니 59.1%가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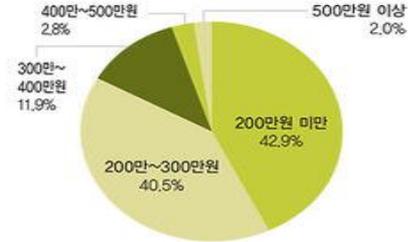
정부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54%였고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응답자도 46.4%나 됐다.

인터넷을 통해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신중년 층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워크넷(17.4%)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인 알바몬을 이용하는 이들이 14.1%로 워크넷에 이어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이용한 결과 만족도는



재취업할 경우 희망 월급은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기다리는 구직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 사람인(12.1%)·잡코리아(8.7%)·알바천국(7.4%) 등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 재취업 절반 이상이 “월급 부족해”

다만, 대부분의 신중년 층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채용 정보를 얻고 있었지만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채용 사이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36.9%로 가장 높았다.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는 답변도 25.5%를 기록했다.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0.1%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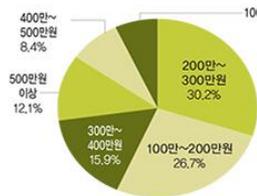
이처럼 열심히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이들이 원하는 월급은 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2.9%다. 200만~300만원(40.5%), 300만~400만원(11.9%), 400만~500만원(2.8%), 500만원 이상(2%) 순이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재취업에 성공한 신중년 층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퇴직한 경험이 있는 50대 이상 남녀 총 1000명 가운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설문을 진행해 이들의 삶을 물어봤다.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연 월급이다.

재취업에 성공한 신중년 층의 30.2%가 한 달에 200만~300만원을 번다고 응답했다. 26.7%가 월수입 100만~200만원이었고 300만~400만원은 15.9%로 집계됐다. 500만원 이상을 번다고 한 응답자도 12.1%나 돼 눈길을 끌었다.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신중년 층도 자신의 월급에 만족하지는 않았다. 월급이 부족하다는 데 절반이 넘는 58.7%의 응답자가 집중됐다. 30.2%는 보통이라고 밝혔고 만족한다는 이들은 10명 중 1명꼴(10.9%)이었다.

현재 자신의 월 소득수준은(실수령액 기준)



자신의 월 소득에 만족하는가



현재 종사하는 직군은



중시하는 직군은 의외로 사무직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43.1%가 사무직에 중시했고 기술직 18.0%, 자영업 15.3%, 생산직 13.4%, 전문직 10.2%였다.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사무직에서 일하는 비율이 낮았다. 65세 이상은 기술직에 중시하는 비율이 27.3%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에서 일하는 비율은 18.2%로 조사됐다.

◆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루가 멀다고 대책이 쏟아질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된 청년층 고용 문제와 다르게 신중년 층 일자리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에서도 밀려 있었다.

그나마 대항인 것은 새 정부 들어 다소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신중년 층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신중년 인생 3도약' 지원을 위한 고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들 수 있다. 50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재취업 일자리'를 구한 뒤 은퇴를 앞두고 '사회공헌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3도약'으로 비유했다.

이를 위해 중장년(34~69세)은 중위소득 이하인 구직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직업 훈련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중위소득 이상의 신중년(50~69세) 구직자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취업 성공 패키지'란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진단·경로 설정-의욕·능력 증진-집중 취업 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업하면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체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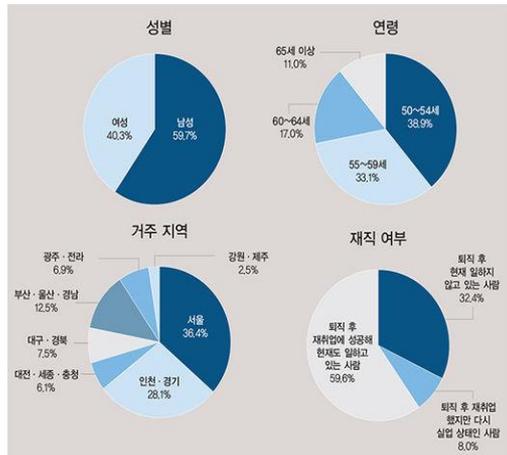
또 노년·장애·전직·자원전문가 등을 활용해 신중년 층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월 60만원 수준으로 고용 창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만으로 신중년 층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신중년 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실효성과는 별개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 즉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이 고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자수성을 유지하고 기업은 노동자를 비용 혁신이자 생산성의 주체로 받아들여야 해서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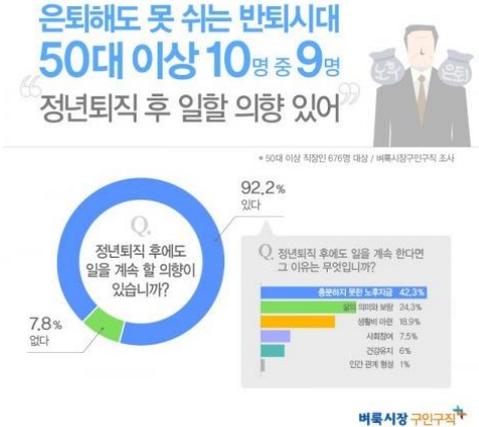
조사 기간 : 2017년 10월 13~16일  
 조사 대상 : 퇴직 경험이 있는 50대 남녀 1000명  
 조사 방법 : 모바일 조사  
 표본 오차 :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 오차 3.1% 포인트  
 조사 기관 : 한경비즈니스·글로벌리서치



**참고 5**      **관련 보도자료②**

**[취업뉴스]**

벼룩시장구인구직 “50대 이상 직장인 10명 중 9명, 완전한 은퇴 아닌 반퇴 꿈꾼다”



벼룩시장구인구직 설문조사 결과, 50대 이상 직장인 92.2%는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완전한 은퇴가 아닌 반퇴를 자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5월 17일 -- 은퇴하지 않은 50대 이상 장년층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반퇴'를 자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퇴란 장기간 종사한 직장이나 직업에서 퇴직한 후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경제활동에 뛰는 드는 현상을 말한다.

미디어월(대표 장영보)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은 50대 이상 직장인 6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2.2%가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50대 이상 고령층 비은퇴자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42.3%가 '충분하지 못한 노후자금'을 꼽았다. 늘어난 기대수명과 점점 앞당겨 지고 있는 퇴직 시점 사이에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삶의 의미와 보람(24.3%)', '생활비 마련(18.9%)', '사회참여(7.5%)', '건강유지(6%)'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재 직업이나 직무로 최종 은퇴까지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8.3%에 불과했다. 젊은 시절 익히고 쌓아온 기술이나 노하우와는 상관없이 고령의 실버층이 된 후에는 현재의 직업이나 직무를 유지하며 재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50대 이상 직장인은 37.4%에 그치며 반퇴 시기 이후의 계획이나 이 시기를 위한 커리어 개발을 하는 비은퇴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현재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50대 이상 직장인은 63.8%로 10명 중 6명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자금 준비 방법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했다는 50대 이상 직장인이 2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민연금(25.9%)', '은행저축(24.5%)'의 순으로 수익률은 많지 않아도 안전하고 평생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반면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67.1%는 그 이유로 '노후자금까지 마련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50대 이상 직장인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부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세대로 여전히 생활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노후자금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상적인 노후 준비 시기로 50대 이상 비은퇴자 중 가장 많은 30.7%가 '40대부터'라고 답변했다. 지금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0대~40대의 경우 50대 이상과 달리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살이라도 어릴 때 노후 준비를 시작하겠지만 경제활동기 노후 준비를 못한 50대 이상의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를 늦게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b>참고 5</b>	<b>관련 보도자료③</b>
-------------	-----------------

### '어르신을 어린이 통학버스보호자로'...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서 8개 사례 표창

(서울=연합뉴스) 이지는 기자

기획재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해 14일 시상했다.

부산혁신도시 6개 기관, 한국서부발전, 도로교통공단, 한국동서발전, 국민연금공단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표창을 받았고 한국도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연구재단 등 3개 기관이 부총리 표창을 받았다.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도록 올해 1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세 학원 등이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년 구직자가 동승보호자로 채용되도록 설명회, 인력풀 구축, 일자리-구직자 연결, 동승보호자 교육 등을 실시했다.

울산·경남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한 결과 7명의 채용이 결정됐으며 기재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이를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례로 평가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줄여 절감한 재원 29억원을 바탕으로 탄력정원제를 도입해 올해 72명을 추가 채용했다.

동서발전은 초과근무를 축소하기 위해 기존 4조 3교대에 더해 '일자리 나눔 조'를 신설해 교대 근무한 직원을 대신해 전담 근무하도록 했다.

#### 국민연금, 신중년 일자리 얻기 쉬워진다

- 일자리 추천서비스 16개 지사 시범 운영7월부터 전국 109개 지사로 확대 운영 -

[천지일보=이진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신중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후준비서비스에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해 4월부터 6월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자리 추천서비스는 소득 활동을 희망하는 노후준비 상담고객에게 가입 이력과 연봉 등 희망 사항을 반영한 적합한 사업장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공단은 170여만개 국민연금 사업장 중 최근 퇴사 신고가 접수된 법인사업장 자료와 매일 업데이트 되는 6만여개의 워크넷 구인정보를 연계·분석해 채용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취업 정보사이트는 어느 세대보다 노후준비가 시급한 신중년(50~64세, 2018. 1월 1166만명)의 성공적인 인생 3모작 지원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활동을 희망하는 국민은 시범운영 기간 전국 16개 지사에서 노후준비 전문상담사가 제공하는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일자리 추천서비스가 전국 109개 지사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 사업장 구직정보에 민간사이트의 채용정보를 추가하고, 시범 기간 누적된 상담 결과를 분석해 일자리 추천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일자리추천서비스가 국민의 활력 있는 노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영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록 3. 실무기획단 운영

### □ 추진경과

-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 2018. 2. 7.
  - 미래기획단, 시정연구원, 인구정책 실무기획단 협치로 기본계획 수립
  
- 미래기획단 회의 ..... 2018. 2. 20.
  - 단장, 기획운영위원회, 4개 분과장 및 간사, 소통기획관 등 14명 참석
  -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 수립」 연구과제 논의
  
- 인구정책 실무기획단 부서 추천자 구성 ..... 2018. 2. 19.까지
  - 일자리, 주거, 교육·돌봄 분야 관련 부서 추천자 명단 제출
  
- 디자인씽킹 워크숍 추진 ..... 2018. 2. 26.~ 2. 27.
  - 단국대 디자인SW센터 / 실무기획단 부서추천자 및 시정연구원 관계자 28명 참석
  
- 인구정책 실무기획단 공개 모집 ..... 2018. 3. 9.까지
  - 전 부서 대상으로 7급 이하 직원 공개 모집
  
- 실무기획단 운영계획 수립 ..... 2018. 3. 13.
  - 실무기획단 일자리, 주거, 교육·돌봄 3개팀 43명으로 구성
  
- 인구정책 실무기획단 발대식 개최 ..... 2018. 3. 19.
  - 시정연구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실무기획단 운영계획 설명
  
- 인구정책 실무기획단 워크숍 추진 ..... 2018. 4. 5. ~ 4. 6.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방향 강연 및 팀별 토의, 발표 등
  
- 팀별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회의 개최 ..... 2018. 4월~12월 / 16회 실시

## □ 일자리팀 활동

### ■ 주요내용 (2018. 4. 6. / 1차 워크숍)

구 분	제 안 내 용	비고
일자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NS, 야구장, 버스정류장, 육교 스크린 화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실적 적극 공개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을 위해 교육 확대 등 인식 개선 노력 필요</li> <li>- 소상공인, 기업대표, 대학 관계자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정책 마련보다는 기존 일자리 정책을 보완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충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들이 근무 환경 개선, 직원 복지 향상 지원 방안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파견직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li> </ul>	

### ■ 주요내용 (2018. 4. 30.)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와 창업,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창업 정보 공유</li> </ul> </li> <li>▸ 핵심포 조성(성수동 가족공예 거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노동시장의 85%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활성화</li> <li>- 주요산업을 집중시켜 거리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li> </ul> </li> <li>▸ 영동시장 청년몰에서 일하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몰과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요구</li> <li>▸ 산업단지 주변 녹지공간 조성, 상가나 식당가 등 기반시설 마련하여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 (분당, 판교 테크노밸리 주변과 비교)</li> <li>▸ 경제기획관 부서 신설 등 경제분야 컨트롤타워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서 추진중인 일자리, 경제 분야 사업 총괄, 관리</li> </ul> </li> <li>▸ 플라마켓 등 큰 장(場)을 만들어 청년층들이 교류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음</li> <li>▸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자본의 선순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도모</li> <li>▸ 공무원의 정근수당처럼 상용근로자가 오래 일할수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li> </ul>	

■ 주요내용 (2018. 5. 14.)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공방거리 조성</li> <li>▸ 창업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바지에서 창업 과정 교육을 하고 있으나 창업 전반적인 체계적 컨설팅 필요</li> </ul> </li> <li>▸ 일자리 적성검사 실시 및 일자리 배치표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성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적성분야 중 일자리배치표 그룹 내 위치 확인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li> </ul> </li> <li>▸ 대학생 인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계약을 통해 서로 필요한 기업, 인재인지 상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획 제공</li> </ul> </li> <li>▸ 상시 디자인 박람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에서 공간과 재료비 지원하여 의상 전공 학생들과 저비용으로 결혼의상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연계</li> <li>- 의상 전공 학생들에게 1인 창업 기회 제공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렴하게 결혼 의상 구입할 수 있도록 함</li> </ul> </li> <li>▸ 수원시 우수기업 인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평가단 구성하여 객관적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li> <li>- 물리적 지원 없이 효과 미비하니 신중한 검토 필요</li> <li>- 수원 카톡친구 등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li> </ul> </li> </ul>	

■ 주요내용 (2018. 5. 24.)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단기과제 (3~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상권 전수조사를 통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권분석을 통해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li> <li>- 청년 창업 통합 컨설팅과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li> </ul> </li> <li>▸ 빈 공간 확보하여 청년 창업자에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진흥청, 서울 농대 등 건물 임대하여 공간 제공</li> </ul> </li> <li>▸ 핵점포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명한 인사로 발굴단 구성하여 검증을 통해 시가 인증</li> <li>- 홈페이지, SNS,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추진</li> </ul> </li> <li>▸ 지원제도, 정책 통합하여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스톱 플랫폼 또는 앱 서비스 제공</li> </ul> </li> </ul>	
중장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 드론 관제연구소'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 혁명 흐름에 맞춰 양질의 일자리 창출</li> </ul> </li> <li>▸ 지식거래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서비스 산업 탑재한 플랫폼 개발</li> <li>- 콘텐츠 위주 산업 발굴</li> </ul> </li> <li>▸ '푸드 벨리' 조성 : 식음료 클러스터</li> </ul>	

■ 주요내용 (2018. 7. 9.)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부서장 연석회의 및 미래기획단 회의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지원 및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공공 마을 포럼, 도시농업, 중장년 지원센터, 오피스텔형 공장 (예: 디지털엠피어), 복합 돌봄센터(민·관·학), 교통인프라 확충</li> <li>- 단순 산업단지보다 교육 등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안 마련 필요</li> </ul> </li> <li>▶ “일·가정 양립” → “일·생활 양립”으로 개념 변화 고려</li> <li>▶ 지역상권과 기업프랜차이즈의 상생발전 방안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발전 조례 및 지역상권·전통시장과 대기업프랜차이즈의 협력사례 검토</li> </ul> </li> <li>▶ 확실한 “핵 점포” 관련 담당 및 기준 정립 필요</li> <li>▶ 청년 일자리 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는 일자리 매칭 보다는 청년 복지(지원)에 가까움</li> <li>- 구직중인 청년이 원하는 것 vs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li> <li>-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의 접근방식 필요</li> <li>- 수원 소재 대학생들 및 청년들의 취직에 관한 고민</li> </ul> </li> <li>▶ 지역 일자리 창출 VS 거주하는 직장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유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머물게 할 것인지 우선순위 정립 필요(일자리 기초 확립)</li> </ul> </li> </ul>	

■ 주요내용 (2018. 8. 21.)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기획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li> <li>-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원시 산업연관분석표’ 개발</li> <li>- 개방형 직위로 중앙경제부처 퇴임 공무원 등 경제 전문가 선발 활용</li> </ul> </li> <li>▶ 4차 산업혁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서비스 산업 탑재 플랫폼 개발</li> <li>- 중앙정부에 국립 드론 관제센터의 수원시 유치 제안</li> <li>- 지식거래소 설립 추진</li> <li>- 연구 집약형 식품연구 단지인 푸드밸리 설립 추진</li> </ul> </li> <li>▶ 핵심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주거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이전 기업 유치 시 관내 거주를 위한 주거비 지원</li> </ul> </li> <li>▶ 미래성장동력 산업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지원과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 조성중(2018. 10월 개소식 예정)</li> <li>- 수원산업진흥원 설립 추진</li> <li>- 재원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산재되어 있는 기관들을 이전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li> </ul> </li> <li>▶ 수원시 상가 전수조사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전역 상권분석을 실시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li> </ul> </li> <li>▶ 창업 문화예술거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 도모</li> </ul> </li> </ul>	

■ 주요내용 (2018. 10. 4.)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일자리 관련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고용률·실업률 관련 지표 분석(2017년 하반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고용률은 58.1%, 실업률은 3.9%</li> <li>- 수원시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 약 62만 / 60.4%</li> <li>- 수원시 취업자 성별 현황 : 남성 35만 8천명 / 여성 23만 7천명</li> <li>- 수원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 임금근로자 49만8천(83.5%) / 비임금근로자 9만8천(16.4%)</li> <li>- 수원시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 40만5천명</li> </ul> </li> <li>▶ 수원시 산업구조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산업별 사업체 비율은 서비스업(91.4%), 제조업(5.2%), 건설업(3.28%)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li> <li>- 수원시 산업별 종사자 수 비율 : 서비스업 84.5% / 제조업 9.7% / 건설업 5.4%</li> </ul> </li> <li>▶ 수원시 적정 일자리 수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의 일자리 개수는 총 411,761개(통계청, 2016.12.31.기준) (거주지 기준 취업자수 - 근무지 기준 취업자수)를 통한 비교</li> <li>- 수원시의 경우 근무지 기준 취업자(49만 2천명)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59만 6천명)보다 적으며 이는 수원시가 소비도시 혹은 주거형 도시에 가까움을 의미</li> </ul> </li> </ul>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장년, 노년, 여성 등 세대별 연령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li> <li>▶ 청년 일자리 배치표 개발</li> <li>▶ 맞춤형 일자리 어플리케이션 개발</li> <li>▶ 구직/구인 양측 정보 개방을 통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는 일자리 매칭 노력</li> </ul>	

## □ 주거팀 활동

### ■ 주요내용 (2018. 4. 6. / 1차 워크숍)

구 분	제 안 내 용	비 고
주 거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 센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전입자 환영하는 이벤트 마련</li> <li>- 주거 정보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집을 쉼어하우스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도심 슬럼화 현상 방지</li> <li>- 청년 주택 바우처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에서 주택연금을 지원하여 주거 마련토록 하고 주거 안정을 꾀하고, 향후 시에서 그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 주택으로도 활용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천구(홍시주택)나 강동구(청년가족창작마을) 사례처럼 동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주일치 주택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 창업자들의 육아, 교통 문제 등 해결</li> <li>- 중정형 주택을 통한 비즈니스와 주거 문제 동시 해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결혼부터 주거까지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가능토록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수원을 만들기 위한 적정 주택, 인구 규모 검토 필요 및 관리</li> </ul>	

### ■ 주요내용(2018. 4. 30.)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수원시 이주자 환영 사업 & 결혼과 주거문제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센터 운영 및 필요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공원, 공공시설, 어린이집 등 정보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정보(어느 학원, 어린이집이 좋더라, 어느 시설이 혜택이 좋더라 등)까지 제공</li> <li>▸ 결혼 관련 업체(예약장, 예단, 가구 등) 가격 비교라든지, 공공임대주택, 전세 등 주택 정보 통합하여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성</li> <li>▸ 육아나 교육 정보 등 세대별로 구분하여 필요 정보 제공하는 정보체계 구성</li> </ul> </li> </ul>	
주택기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중에 일부와 협상을 통해 복권 기금 일부, 시민 기부금 등을 통해 기금 확보</li> <li>▸ 기금으로 저리나 무이자 대출 사업 추진</li> </ul>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주택기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중에 일부와 협상을 통해 복권 기금 일부, 시민 기부금 등을 통해 기금 확보</li> <li>· 기금으로 저리나 무이자 대출 사업 추진</li> </ul>	
순환형 공동주거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었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게 필요</li> </ul>	
쉐어하우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집이 얼마 없어 사업의 타당성이 약함. 노후주택으로 정책범위를 확장하여 노후주택 환경 개선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수원시가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 비용만큼 공공이익(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제공) 달성토록 함</li> <li>·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청년층들을 모이게 하고 주거공간과 협업공간을 함께 만드는 쉐어하우스를 조성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함</li> <li>· 쉐어하우스 조성시 디자인 강조해서 이슈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진건축사나 공공건축가, 사회적 기업과 연계</li> </ul> </li> </ul>	
수원형 임대주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건립시 일부 층을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만큼 수원시에 소유권을 넘겨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li> <li>· 임대주택 거주기간 적정하게 정하되 임대주택 거주시 아이를 낳으면 인센티브(기간 연장 등) 제공</li> </ul>	

■ 주요내용(2018. 5. 14.)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OECD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반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 비율을 조례 등 제도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임대주택 확보 가능</li> <li>- 지구단위계획시 공공기여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받도록 함</li> <li>- 삶의 질 낮아질 우려가 있음</li> </ul> </li> </ul>	
수원시 이주자 환영사업 & 결혼·주거 컨설팅 '웰컴 투 수원'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자를 모집하여 수원으로 인구를 끌어들이 수 있도록 홍보</li> <li>· 수원시로 이주한 사람의 만족도를 높여 주변 지인, 친척을 이주토록 권유</li> <li>· 신혼부부, 청년 등 결혼, 주거 정보 등을 필요한 서비스 안내, 컨설팅 지원</li> <li>· '수원 앱'을 만들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li> </ul>	
청년층, 중장년층 대상 역모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층 모기지 적용 연령을 50세로 낮춰 타 지역(사업)과 차별성 제고</li> <li>· 청년층에게는 모기지보다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 방향으로 전환</li> <li>· 시에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청년층이 저리로 대출 받아 주거 구입할 수 있도록 시가 신용보증</li> </ul>	
공동체 주택(사회주택, 쉐어하우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주가 사업에 대해 미온적이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 개선을 먼저 하고 공동체 주택 조성 사업 추진</li> <li>·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점차 확대</li> </ul>	

■ 주요내용(2018. 7. 10.)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p>주거문제 대응과제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정책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논의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서장과의 충분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각 부서에서도 1인가구 실태조사 등 자체 연구가 추진중임</li> </ul> </li> <li>▶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밀한 주거실태 파악이 미흡</li> <li>- 정책수립과 시민의 니즈를 찾는 기본적인 출발은 주기적인 모니터링, 주거실태조사라 할 수 있음.</li> <li>-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 등 특수계층은 수시로 조사 필요</li> <li>- 서울의 경우 2017년 국토부와 주거실태조사 실시</li> <li>- 매년 중요지표를 설정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RIR(1년 소득대비 주거임대료), PIR(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소득대비 총 부채상환능력 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마다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조사대상 인원을 확대</li> </ul> </li> </ul> </li> <li>▶ 주택 부동산(젠트리피케이션) 동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주택,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정기적 검토와 자료축적, 이를 통해 다양한 분석과 정책 마련</li> <li>- 반기, 또는 분기별 수원시와 주변도시를 포함한 주택,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li> </ul> </li> <li>▶ 공공임대주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을 검토, 공공임대 주택 공급 가능한 택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등 필요</li> </ul> </li> <li>▶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을 제외한 사각지대 계층의 주거복지를 채워 줄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 필요</li> </ul>	
<p>주거문제 대응과제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가하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조직 신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복지, 공공임대 등 전담부서 필요</li> <li>-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매입, 관리, 기금, 주거급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신설 필요</li> </ul> </li> <li>▶ 청년 등 일반 수혜 계층외의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필요성 검토 필요</li> <li>▶ 수원은 가성비 좋은 도시라는 인식이 있지만 지불비용에 비해 효용성이 크다 라는 부분에 대해 더욱 질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li> <li>- 청년 및 신혼부부의 유입을 높이면 관련 편의시설들이 증가하고 청년문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로 성장가능</li> <li>- 관련정책 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수원시가 청년인구 및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li> </ul> </li> <li>▶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환경과 인식은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과 문화시설 복합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긍정적임</li> </ul> </li> </ul>	

■ 주요내용(2018. 8. 22.)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p>미래 주거·주택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주거와 주택의 주요 트렌트는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양극화, 금융기술의 발달, 가계부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으로 파악됨.</li> <li>▶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트렌드 관련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 비혼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의 심화 1~2인 가구 증 소형가구, 외국인 가구 증가,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변화</li> <li>- 지방분권 및 행정체계 변화 : 자치 및 재정분권 확대, 정부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에 따른 변화</li> </ul> </li> <li>▶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렌드에 대한 부분적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성장 및 양극화 : 물가상승에 비해 낮은 소득과 공유경제 시장 확대 등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 대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협력 소비 방식의 경제활동, 쉐어링하는 공유문화 확대로 부동산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주택과 공간구조에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술 발달과 가계부채 : 2017년 기준 가계부채 1400조원, 주택담보대출 2017년 기준 약 690조로 증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 사회적 금융은 마이크로 파이낸스, 지역금융 등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 사회복지문제 해결에 활용되고 있음.</li> </ul> </li> <li>-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 발달, 기후변화, 남북협력(통일) 등은 연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부분적으로 고려해야할 트렌드임.</li> </ul> </li> </ul>	
<p>주거정책과 인구정책의 밀접성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하는 문제는 유입되는 가구특성에 영향을 주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어 원룸, 투룸은 1인가구나 2인가구에게 유용하지만, 3~4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구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li> </ul> </li> <li>▶ 지방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원은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음.</li> <li>▶ 인구유출·유입의 현상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함. 지역별 적정 인구구조 및 인구현황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지속가능한 도시, 매력있는 도시를 위해 도시재생에 신경을 써야하며, 전반적으로 도시에 대한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li> <li>▶ 1~2인가구를 위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장기거주가 아닌 단기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마련이 필요함. 지속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과는 별개의 지역에 대한 비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li> <li>▶ 현재는 지방에서의 주택관련 권한이 미비하지만 향후 지방분권 등과 맞물려 정책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li> </ul>	

■ 주요내용(2018. 10. 4.)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p>주거분야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 체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분야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 - 수요지원(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조성</li> <li>- 시민참여 펀드, 리츠</li> <li>- 주거안정 금융지원</li> </ul> </li> <li>▶ 주거분야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 - 공급지원(공공주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매입임대 200호 확보 (2022년까지 200호 시범사업 → 중장기 확대)</li> <li>- 직접건설(수원도시공사)</li> <li>- LH, 경기도 공급 활용</li> <li>- 도시내부 저이용, 노후시설 복합개발</li> </ul> </li> <li>▶ 주거분야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 - 공급지원(공동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공급과 지원</li> <li>- 사회적기업, 사회주택 사업자 지원 → 공적주택, Share house, 공동체주택 공급</li> </ul> </li> <li>▶ 주거분야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 - 기타 시스템 구축(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실태조사(격년)</li> <li>- 주거종합계획(5년 단위)</li> <li>- 인구 및 주택시장 동향</li> </ul> </li> <li>▶ 주거분야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 - 기타 시스템 구축(기관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 기능 강화</li> <li>- 주거복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li> </ul> </li> </ul>	

## 교육돌봄

### ■ 주요내용 (2018. 4. 6. / 1차 워크숍)

구 분	제 안 내 용	비고
교육돌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체계 개선을 말하기 전에 고용자가 아닌 노동자 중심의 시간선택제(10시~15시 근무), 유연근무제 추진 등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자 중심의 일률적인 시간선택제(오전, 오후), 유연근무제 지양</li> <li>- 육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 돌봄 체계는 북유럽 시스템보다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초등돌봄 체계 개선 시급함</li> <li>▶ 현재 초등돌봄은 오후 7시 전까지는 방과후교실 이용, 오후 7시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교실은 서비스 질 만족도 저하로 대부분의 학부모 사설 학원을 이용하고 있음</li> <li>=&gt; 프로그램 다양화, 기간제·시간선택제 초등교사나 퇴직한 교사 인력 활용을 통한 담당자 수준 향상 필요</li> <li>-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저소득층 위주로 이용되며 일반 아이들이 이용하고자 하여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간 이동 불편</li> <li>=&gt; 시에서 교통 문제 해결(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간 교통편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역의 학교나 공공시설보다 경로당의 접근성이 가장 좋으니 이 곳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공간을 돌봄교실이나, 문화공간, 키즈카페 등으로 운영하여 공간 활용성 높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조손 돌봄'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보육 문제 해결</li> </ul>	

### ■ 주요내용(2018. 4. 20)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아동 ~ 청소년, 성인기~장년기 돌봄 정책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부모 일자리, 주거 문제 등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부모 지원 정책이 출산에 집중되어 있으나 일자리 마련 등 생활지원 필요</li> <li>- 주거 지원도 신혼부부 대상이라 미혼부모에 대한 제한 없어야 함</li> </ul> </li> <li>▶ 학교 밖 청소년 공간 및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육성재단 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li> <li>- 검정고시 학원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학생 할인 혜택을 청소년 할인으로 확대 변경</li> </ul> </li> </ul>	
노인 돌봄 추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복지 정책이 대부분 질병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어 정책 지원 대상을 가족, 소득, 건강 3가지로 구분해서 분류하고 이중 2가지 이상 (혹은 1가지 이상) 취약하면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방법 도입</li> </ul>	

■ 주요내용(2018. 4. 20 계속)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다 문화 가정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은 있지만 정책간, 기관간 연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정보채널 필요</li> <li>- 양육 가치관이 달라 부부간 갈등 발생하니 우리나라 양육, 교육 문화 가르쳐 줄 사람 필요</li> </ul> </li> <li>⇒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산부인과, 보건소, 다문화지원센터, 동 주민센터 등 연계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인력)이 필요</li> <li>⇒ 동에 다문화 가정 상담원(다문화 사례관리사)을 뒤 사업 안내 및 지원</li> <li>· 인식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 마련</li> <li>-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li> </ul> </li> <li>⇒ 혜택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감, 의무, 수원시 문화 등에 대해 설명, 이해토록 함</li> <li>·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아이돌봄사업을 활용하여 외국인 능통자나 다문화 전문인력 고용,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사업 추진</li> </ul> </li> <li>·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시 구별 지원이 아니라 일반 학생과 함께 통합 지원(티 안나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형 어린이집 지원 방식처럼 다문화 가정 이해 프로그램, 일반학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에 지원</li> <li>- 학교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 위한 학습 지원</li> </ul> </li> <li>·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일자리 지원 필요</li> <li>- 우리시에 정착해서 생활하면 인구증가 요인임</li> </ul>	

■ 주요내용(2018. 5. 14.)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장애 돌봄 (장애 영유아) 관련 지원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 어린이집 확보를 위한 시설 개보수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 이동 편리 등 시설기준 적합하도록 개보수 필요, 이동이 용이하도록 교통편 제공</li> </ul> </li> <li>· 장애아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체계 의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의료기관, 보건소 등 유관기관 협조 구축 및 사업 창구 일원화</li> <li>-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 외 가정양육 아동도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홍보</li> <li>- 검진 결과 후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 양육법 등 부모 및 보육교사 교육 실시</li> </ul> </li> <li>·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미비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li> </ul>	
교육 분야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 높은 교육 과정이 초·중·고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제도 장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학교, 마을공동체 학교 등 기존 좋은 프로그램들이 결국 대학 입시에 막힘</li> <li>- 시범학교 선정하여 교육모델 구축</li> </ul> </li> <li>· 교육청과 협의하여 4차 산업 혁명에 맞춘 특성화 프로그램 (코딩 교육 등) 공교육으로 실시</li> </ul>	
다자녀 가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을 보지 않는 획기적 정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가정에 역차별 없는 정책 마련</li> </ul> </li> <li>·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다자녀 저소득 가정에 기존 정책의 연계를 줘야 함</li> </ul>	

■ 주요내용(2018. 7. 11.)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노인돌봄분야 정책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 대책에 대한 총괄관리가 필요하며 기존제도에 대한 능동적 조절관리가 필요한 시점임</li> <li>▶ 노인돌봄의 경우 대상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모니터링 필요</li> <li>▶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주거 제공을 통한 주거환경제도 개선 필요</li> <li>▶ 장기요양 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li> <li>- 종사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li> </ul> </li> <li>▶ 치매 어르신 돌봄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사업과의 연관 및 조기 발견 방안 강구</li> <li>- 치매 고위험 연령대를 선정하여 어르신들의 통합관리 필요</li> <li>-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돌봄을 시행할 계획</li> <li>- 치매가족교실 및 치매인식개선 사업 진행</li> </ul> </li> <li>▶ 취약 어르신에 대한 돌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 보호자가 복지관이거나 통장, 동 사회담당인 경우가 많음</li> <li>- 복지관이 없는 주민센터의 경우 인력충원이 필요</li> <li>- 일본의 경우 노인타운 같은 통합컨트를 타워가 있음.</li> </ul> </li> <li>▶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환경 개선과 소통 네트워크 구축</li> </ul> </li> <li>▶ 돌봄어르신에 대한 시스템 공유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일부대상자만 제공 가능.</li> <li>- 각자의 서비스체계는 이미 상당수준이지만 기관 연계가 부족</li> <li>- 대상자 열람시스템 공유 등 필요</li> <li>- 각 기관에서의 정보와 대상자 공유방안 마련 필요</li> <li>- 희망자에 한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정보 공유</li> <li>- 장기과제로 중합컨트를 타워가 필요</li> <li>- 유럽의 경우 특정한 사항과 목적에 부합할 경우 정보제공</li> </ul> </li> <li>▶ 돌봄어르신을 위한 정보 공유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들에 대한 관련제도 안내와 서비스 접근성 부족</li> <li>- 현실적인 정책발굴이 필요</li> </ul> </li> <li>▶ 실질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어르신 돌봄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초기 증상 대처방안</li> <li>- 어르신 영양관리와 구강 관리 등</li> </ul> </li> </ul>	

■ 주요내용(2018. 9. 6.)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p>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관련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청소년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센터 내 지역아동센터 위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명으로 운영</li> <li>- 취약계층 아이들 대상, 방과후 갈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li> <li>- 학습보다 활동 위주 프로그램 운영 (캠프, 체험 등 외부 활동)</li> <li>- 초등학교 5~6학년 집중 운영, 1개반 (20명)</li> <li>- 차별 없이 참여 할 수 있는 장점. 저녁식사 및 귀가 차량 제공 15시~20시까지 운영 중</li> </ul> </li> <li>*교재비 외에 추가 비용 없음, 무상 제공 / 최대 3개반 60명 정원</li> <li>▶ 수원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추진 중임</li> <li>구체적인 방향이나 계획은 현재 협의 중</li> <li>- 기존의 학교돌봄 교실 확대의 차원으로 마을 돌봄(지역아동센터 포함)</li> <li>- 현재 수원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98개 중 -&gt; 95개 운영 208교실, 3,200명 정도 참여 중</li> <li>- 온종일돌봄 프로젝트 시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전담 주무관 배정</li> <li>- 맞벌이, 조손가정 등을 위하여 방학기간 연계 검토 필요</li> </ul> </li> </ul>	
<p>다함께돌봄센터 설립 추진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돌봄서비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서비스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를 구축</li> <li>- 학교 돌봄에 대한 대상자의 거부감 고려</li> </ul> </li> <li>▶ 교육의 질 향상이 가장 어렵고 필요한 부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봄교실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 교사의 수업 방식이나 프로그램 다양하게 운영하여 식상함 해소 노력</li> </ul> </li> <li>▶ 마을돌봄을 위하여 학교 만한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움 (지자체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교류가 잘 되지 않아 상황 파악 어려움</li> <li>- 대안 형태로 아파트 건립 시, 아동 돌봄 공간 의무 배치 규정 필요</li> <li>- 아동 픽업 및 통학을 위한 교통 제공 문제도 고려</li> <li>- 사례 : 아파트 단지 내 남는 공간 방과후 돌봄 공간으로 이용</li> <li>사회적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강사 및 프로그램 지원 받음 (경기도 시행)</li> </ul> </li> <li>▶ 교육지원청은 돌봄 관련 수요 파악, 네트워크 연계는 지자체가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가 많은 지역을 타겟으로 모형 사례 도출 (수원형 방과후돌봄 센터)</li> <li>- 다함께돌봄 센터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세팅 검토 필요</li> <li>- 돌봄 업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체계 정립</li> <li>- 품앗이 형태의 돌봄 체계 구축 검토(학부모를 주축으로 한 돌봄 체계)</li> <li>- 수원시 중장년 센터 설립 예정 (서울 50플러스센터 형태), 해당 센터의 인력을 활용하여 재능기부 형태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검토 필요</li> </ul> </li> <li>▶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문화센터 및 마을돌봄 확대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 관점으로는 지역에서 돌봄 형태 방향을 잡아야 함</li> <li>- 지자체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자치회와 엮어서 고민 필요</li> <li>- 폐원 어린이집을 임대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로 활용 검토</li> <li>- 수요자 입장에서 돌봄교실의 형태 고민 필요</li> </ul> </li> </ul>	

■ 주요내용(2018. 9. 20.)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학교(특수학교)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령기를 마친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주로 진로·직업 교육 시행</li> <li>- 취업 실적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 중하위권 학생들의 지원이 미흡</li> <li>-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미흡, 확대 필요</li> <li>- 주간보호센터는 낮시간 동안 장애인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개념으로 운영, 교육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함</li> <li>-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함</li> <li>-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li> <li>- 지적 수준이 양호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취업 및 진학 등 갈 곳이 있으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음</li> <li style="padding-left: 20px;">교육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li> </ul> </li> <li>▶ 장애인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학생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특수학급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1년간 진행 후 여가 및 일자리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고민 필요</li> <li>- 여가쪽에 치중하여 활동 위주 프로그램 운영,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문제행동이 감소됨</li> <li>- 예술관련 전문 강사진 보유 및 활동. 예술쪽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분야 넓어짐</li> <li>-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 1만7천명 까지 확대 계획은 현재 집에 있는 성인장애인 인원을 추정한 부분으로 판단됨</li> <li style="padding-left: 20px;">해당 인원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검토</li> </ul> </li> </ul> </li> <li>▶ 수원시 평생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다양한 홍보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연계에 대한 고민</li> <li>- 일부 경증 성인 장애인은 일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li> <li>-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장기적 교육적 관점이 필요</li> </ul> </li> <li>▶ 각 대상별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계 기관별 협의체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필요</li> <li style="padding-left: 20px;">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활성화를 통하여 분절적 운영 방지 및 다양한 지원책 마련 가능</li> </ul>	

## □ 인구정책 실무기획단 구성 현황

구분	계	행정직			시설직			사회복지직			기타		비고	
		7급	8급	9급	7급	8급	9급	7급	8급	9급	의료 기술 7급	보건 7급		
계	43	7	8	6	4	6	-	6	3	-	1	2		
일자리	본 청	7	5	1	1	-	-	-	-	-	-	-	-	
	구·동	7	-	4	3	-	-	-	-	-	-	-	-	
	소 계	14	5	5	4	-	-	-	-	-	-	-	-	
주거	본 청	10	-	-	-	4	6	-	-	-	-	-	-	
	구·동	1	-	-	-	-	-	-	-	1	-	-	-	
	소 계	11	-	-	-	4	6	-	-	1	-	-	-	
교육·체육·돌봄	본 청	12	1	1	1	-	-	-	4	2	-	1	2	
	구·동	6	1	2	1	-	-	-	2	-	-	-	-	
	소 계	18	2	3	2	-	-	-	6	2	-	1	2	

| 저자 약력 |

박상우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drpeking@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회의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무원 교육체계 개선방안」 (2017, 수원시정연구원)

「인구절벽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 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김리영

도시·지역계획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전문연구위원(현)

E-mail : kimlee@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주택하위시장 여건을 고려한 지역간 이동 영향요인 분석」 (2017, 부동산학보)

「공간계량기법을 이용한 학령별 인구의 공간적 분포 및 지역특성 영향요인 연구」 (2016,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수원시 아파트단지 인구이동 특성과 유형별 정책방향」(2016, 수원시정연구원)

조용준

경제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재정경제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naya@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201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불평등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체육회 통합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한연주

사회복지정책 전공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원(현)

E-mail : joanna1118@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모형 개발 연구」 (201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증상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연구」 (2016,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도시계획 및 설계 박사 수료

수원시정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csh@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스마트시티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201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쇠퇴구역 현황 및 분석방안 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광교비상취수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력방안」 (2017, 수원시정연구원)

최지연

사회학 박사수료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장 연구위원(현)

E-mail : choi.jiyou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 미술 아카이브 구축전략 연구」 (201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청년 생태계조사 학술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 (2017, 수원시정연구원)

이영안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장 연구위원(현)

E-mail : yalee@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경기도 내 재지정 여성친화도시 비교 분석 연구」 (2018, 수원시정연구원)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18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201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실태 및 사회적응 지원방안 연구」 (2018, 수원시정연구원)



